

현대정치연구

2024년 여름호 (제17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차례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 정파성, 미디어 사용, 정부제도 신뢰 이병재 · 조화순 · 김범수	5
지방선거와 선거 당일 날씨 효과: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김지한 · 강우창	51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심	79
정치이념과 친환경 태도: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이서영 · 박영득	119
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 인식의 변화, 2010-2024 고민희, 이혜영	147
The Troubled Relationship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Derrida's Thoughts on the Platonic Question of Political Existence in the <i>Politics of Friendshi</i> Lee, SangWon	195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벌린의 사상을 중심으로 김민혁 · 조대근	229

CONTENTS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artisanship, Media Use, and Trust in Government <i>Lee, Byung-Jae · Jho, Whasun · Kim, Beomsoo</i>	5
Election Day Weather Effects in Local Elections in the Period with the Early Voting System <i>Kim, Jihan · Kang, Woo Chang</i>	51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and Support for Social Protection: The Case of South Korea <i>Kim, Taesim</i>	79
Political Ideology and Green Attitudes: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i>Lee, Seoyoung · Park, Youngdeuk</i>	119
Who Opposes Gender Quotas: Meritocratic Beliefs and Opposition to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2010-2024 <i>Go, Min Hee · Lee, Hye Young</i>	147
우정,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편한 관계: 데리다의 『우정의 정치학』에 나타난 플라톤적 존재론의 정치적 문제들 <i>이상원</i>	195
A study on the anti-extremist tradition of postwar liberalism: on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and Isaiah Berlin’s thought <i>Kim, Minhyeok · Cho, Dae Keun</i>	229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 정파성, 미디어 사용, 정부제도 신뢰*

이병재 | 연세대학교**

조화순 | 연세대학교***

김범수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개인의 정파성, 미디어 사용 패턴, 정부 신뢰가 정치 음모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독자적으로 실시된 서베이 데이터를 로짓 회귀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보수 및 진보 성향의 음모론 신뢰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파적 성향이 음모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터넷 미디어 사용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음모론 신뢰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나 전통적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파성과 음모론 신뢰 간의 관계에서 뉴스 미디어 사용이 매개나 조절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셋째,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미디어로 분류되지만, 그 소비 패턴은 유튜브, 팟캐스트, SNS와 달리 전통적인 매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음모론은 이념이나 정파성보다는 유튜브, 팟캐스트, SNS 링크를 통해 더 많이 전파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제도 일반과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음모론 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음모론, 정파성, 정치 이념, 인터넷 미디어, 정부제도 신뢰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0S1A5C2A03093177). 세심하고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goyangdavid@gmail.com

1. 서론

음모론은 사건의 원인을 강력한 비밀 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설명한다 (Keeley 1999; Oliver and Wood 2014). 9/11 테러 공격이나 달 착륙을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나 조작으로 보고,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음모론은 현실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 하기에 정치적이다. 사회의 혼란 시기나 전환 시기에 정치적 지배와 저항 과정에서 음모론이 등장한다(Uscinski and Parent 2014).

음모론은 정치권력적 표현이다. 통치자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치 음모론을 만들고, 저항자는 통치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저항 음모론을 만든다(전상식 2014). 정치행위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체계모니가 위협받는다 느낄 때, 자신들을 정치적 권력 다툼의 패자라고 인식할 때, 음모론을 제기한다(구지혜·김민철 2023, 135; Uscinski and Parent 2014). 음모론은 상황에 대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입증이 아니라 정치적 열망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도 음모론은 권력적 표현으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활성화되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한 개인과 정당이 제기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치 갈등의 장에서 거론된다(뉴시스 2023/12/6).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여부도 국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이우연 2023; 연합뉴스 2020/9/22). 기존의 많은 연구는 천안함 사건을 한국 사회의 당파적 갈등을 드러낸 사건으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당파적 갈등을 일으켜 한국 정치와 사회의 이분법적 정치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김상균 2020; 조대근·김진원 2023, 75; 정태일 2017). 양대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음모론은 진보-보수 정치 균열을 동원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를 격화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결

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윤성이·이민규 2014; 조대근·김진원 2023, 75). 이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천안함 음모론의 신뢰 여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연결되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패자의 책임을 선거관리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패자의 정치권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II장은 음모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음모론의 정의와 음모론 신뢰의 요인을 도출한다. 정치권력적 요인으로서 정파성, 미디어 요인으로서 인터넷 미디어 활용, 그리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둔다. III장은 연구 가설 및 변수 그리고 분석 모델을 설명한다. IV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천안함 폭침을 의심하는 음모론과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이유가 진보 혹은 보수의 정치이념에 근거한 정파성과 정파적 정부 신뢰, 그리고 유튜브와 SNS를 통한 뉴스 소비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에 있음을 주장한다. V장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음모론의 정의와 유형

음모(陰謀)는 응달 음(陰)자와 꾀할 모(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꾸미는 책략”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음모(conspiracy)는 비밀 책략(secret plot)으로 정의된다. 음모의 주체는 둘 이상이다. 영어에서 음모는 권력을 가진 둘 이상의 행위자들에 의한 비밀 책략이다(Douglas et al. 2019, 4; Keeley 1999; Pigden 1995). 음모가 책략 자체라면, 음모론은 책략에 관한 이야기로서 행위에 대한 가설이자 추측이다. 음모론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남들 몰래 별이는 책략 탓으로 돌리려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선스타인 2015, 24). 전상식(2014, 39-41)은 음모론의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권력 자원의 활용: 자원, ② 둘 이상의 사람들: 공모, ③ 뚜렷한 목적: 의도, ④ 비밀스러운 계획: 비밀, ⑤ 중요한 결과: 인과관계이다.

음모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음모론은 합리적 의심과 구분된다. 음모론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여 특정 대상에게 비밀로 하고, 그 특정 대상에게 악영향을 만들기 위한 소설적 구성의 이야기 구조”로 정의된다(Abalakina-Paap et al. 1999; Golec de Zavala and Federico 2018, 1011). 음모론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소설적 구성이다. 음모론은 근거가 모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근거가 확실하고 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둘째, 음모론은 특정 대상자를 공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대상자를 이롭게 하는 비밀 공모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선스타인(2015, 26)은 해로운 음모론과 해롭지 않은 음모론으로 구분하고, 성탄절 이브에 저 멀고 먼 어느 곳에서 비밀스러운 요정 집단이 ‘산타클로스’라는 신비로운 리더의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만들어 성탄절 이브에 나눠준다는 비밀의 이야기 구성을 유해하지 않은 음모론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유해하지 않은 비밀 공모를 음모론이라 명명하기 어렵다. 음모가 사전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민’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음모론은 사실로 밝혀진 “사실 음모론”과 그렇지 않은 “허위 음모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유익하다(선스타인 2014, 25). 음모론에 관한 토론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근거와 추론의 합리성을 높여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음모론이다. 허위 음모론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제시하여 합리적 대화를 방해한다. 허위 음모론은 종교화된 신앙처럼 음모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넷째, 음모론은 수준에 따라 공적 음모론과 사적 음모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음모론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의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예컨대,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는 예전에 죽었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폴 매카트니 음모론은 사적 음모론이다. 공적 음모론은 워터게이트 추문처럼, 권력의 유지와 획득을 목표로 한 정치적 경쟁 속에서 등장한다(전상식 2014, 42). 공적 음모론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가 목표라는 점에서 정치 음모론이다.

2. 음모론과 민주주의

합리적 의심으로서의 음모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과 식민지 관료들을 겨냥한 음모론은 식민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당위성을 공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전상식 2014, 5). 권력자가 합리적 의심을 포함한 음모론을 탄압한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하기 어렵다. 합리적 의심을 음모론이라 낙인찍는 행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라는 증거이다(전상식 2014, 12). 합리적 의심으로서의 음모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 포함될 수 있다. 음모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도 억압받는다.

합리적 의심을 내포하지 못한 음모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런 음모론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이며, 잘못된 신념으로서 폭력 사태나 테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선스타인 2015, 21-23).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등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 시위를 촉발했다.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은 사회 분열을 심화하고, 정부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활성화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혼란에 빠뜨린다(Radnitz 2022b, 148-150). 혼란은 음모론을 키우고, 음모론은 혼란을 확산시킨다. 음모론은 편견과 연결되었고, 마녀사냥, 혁명, 그리고 학살(genocide)과 같은 정치 사건과 연결되었다(Douglas et al. 2019,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에이즈 처방 약을 서방의 음모라 주장하고 에이즈 백신 처방 정책을

증단하여 33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기도 했다(Chigwedere et al. 2008).

음모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모론은 공론장을 방해한다. 음모론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Radnitz 2022b, 149). 음모론은 내 편이 옳고 다른 편은 틀렸다는 이분법과 함께 작동하여 반이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안재원 2022, 41-43). 멜리(Melley 2000, 8)는 음모론의 매력을 “설명되지 않은 사태, 매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허위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둘째, 음모론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게 한다. 음모론은 정부의 보호기능을 불신하게 하고 정부 규제에 반발하게 한다(Prooijen 2022). 음모론자는 정부가 사익을 위해 모종의 계락을 짜고 국민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보 제공과 같은 방법으로는 음모론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힘들다(선스타인 2015, 26). 음모론은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기후 위기나 코로나-19의 대응 정책, 원자력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Bierwiazzonek et al. 2022; Eyles et al. 2014).

셋째, 음모론은 적대적 경쟁을 활성화한다. 정치적 경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와 언론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전제한다. 그런데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와 경쟁은 합리적 의심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의 등장 가능성도 높인다. 히틀러가 주장한 유태인 음모론은 선거 경쟁에서 선전 선동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권력자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저항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음모론을 이용한다. 정치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공직자들은 음모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약해진다(Radnitz 2022b, 148). 음모론은 선거 경쟁을 적대적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3.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들

음모론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존재한다(가상준 2014; 길정아 2019; 김형준 2015; Bramson et al. 2016; DiMaggio et al. 1996; Duclos et al. 2004; Esteban and Ray 1994; Fiorina et al. 2008; Fiorina 2010; McCarty 2019; McCarty et al. 2016; Przeworski 2022; Sides and Hopkins 2015; Stanig 2011). 음모론은 기존의 신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개인들 사이에 부족주의(tribalism)를 조성하게 되어 정치 양극화와 연결된다(Chua 2018; Mason 2015, 2018). 정파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정파적 음모론을 신뢰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정파성에 따른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결속될수록 음모론에 빠져들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선스타인 2015, 49).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개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신념과 다른 관점을 고려하거나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Iyengar and Hahn 2009).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보이는 경향이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다(Miller et al. 2016; Radnitz 2022a).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정파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추론을 하게 되며 정치적, 공적 음모론을 더욱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이 아닌 다른 원인, 아군의 잠수함이나 해저지물에 의해 좌초되었다는 음모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다. 진보적 이념 성향의 사람들이 천안함이 북한어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했다는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국회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다. 정치이념이 보수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이념적 정파성과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이 도출된다.

H1: 자신의 진보-보수 이념에 따라 음모론을 신뢰한다.

H1-1: 자신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한다.

H1-2: 자신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한다.

둘째,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다고 생각하는 정부 비판자들은 음모론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정부 불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권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음모론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어친스키 등(Uscinsky et al. 2021)은 미국의 경우 대중들이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념적인 좌-우의 양극화에 포착되지 않는 기성체제-반기성체제(establishment vs anti-establishment)의 다른 차원의 양극화가 관찰된다고 주장한다(Uscinsky et al. 2021).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자와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자 사이에는 음모론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불신자일수록 음모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또한 개인의 정파성과 연관된다. 정파적 선호에 따라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다르고, 신뢰 수준의 차이는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일체가 아니며,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군대와 경찰 등을 모두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를 세부적인 기구 및 제도들로 구성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제도로 파악한다. 대통령, 행정부 및 국회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격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군대, 경찰, 법원 등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의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분리하여 파악한다.

H2-1: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

H2-2: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음모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Corbu 2023; Lee et al. 2023). 공중파나 종이신문과 같이 공정성에 대하여 심의받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1인 미디어는 공정성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 결과 정파적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생산 및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이하림·유홍식 2021). 특

히,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은 정파적으로 극단화되어 있으며, 진실성 검증은 인터넷 1인 미디어에서 이차적인 관심사다. 정파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회피하며 팩트체크 등을 통한 수정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Iyengar and Hahn 2009; Stroud 2011). 하지만, 포털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와 구분된다. 포털의 기사는 대부분 유력 언론사 및 방송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공중파 기사와 포털 기사보다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음모론을 더 신뢰할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H3: 공중파보다 인터넷 미디어(유튜브 등)를 이용할수록 음모론을 신뢰한다.

넷째, 대중들은 자신의 정파적 시각을 강화하는 정보와 매체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Lazarsfeld et al. 1948). 정파 미디어 선택과 정파 음모론의 관계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이론적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Festinger 1962; Knobloch-Westerwick 2015; Zillman and Bryant 1985). 개인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고, 자신의 기존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Bennett and Iyengar 2008; Dylko et al. 2017; Iyengar et al. 2008; Nyhan and Reifler 2010; Stroud 2011). 개인의 이러한 경향은 정확한 사실 추구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소비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네 번째 가설이 도출된다.

H4: 인터넷 매체의 사용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부합하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 외에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성향이 음모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심리적 기질로 인해, 하나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Goertzel 1994; Swami et al. 2010, 758).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는 개인 심리 성향 설문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의 다양한 심리 요인을 변수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I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 8월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넷 기반 서베이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전체 표본은 1,000명이었으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에 따라 할당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사용된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는 <첨부 1> 참조).

1. 주요 변수

1) 종속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정파적인 성격을 띠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음모론에 대한 신뢰이다. 첫째, “천안함은 북한군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다”(이하 “천안함 피격 음모론”)라는 음모론이며, 둘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이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라는 음모론이다. 이 두 음모론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각각 질문한 후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4점 척도를 동의하지 않음(0), 동의함(1)의 이항 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으며,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은 생존한 사건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34). 이 사건에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었다. 국방부는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당하였고,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205).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¹⁾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상철 조사위원은 최근 2023년 6월 15일 한 유튜브²⁾ 방송에 출연하여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를 주장하였다(촛불행동TV 2023/6/15).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주장해오던 내용의 요약이었다. 첫째, 어뢰 폭발설이 아닌 좌초설이다. 둘째, 어뢰 추진체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창고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열추적 적외선(TOD) 카메라 영상에 대한 의문이다. 넷째, 어뢰 추진체에 흡착된 흰 물질은 폭발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 녹인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생존자 중 다수가 폭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상철 위원을 대상으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 판결은 2016년 1월 25일에 “천안함 좌초설 주장”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였다(김효은 2016).³⁾ 1심 법원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폭발로 침몰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상철 조사위원이 좌초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34건의 게시글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 측과 검찰 측이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2020년 10월 6일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2심 법원은 ‘흡착물질’과 ‘스크루 휩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수중

-
- 1) 신상철 조사위원은 국방부가 한국인 49명, 외국인 24명으로 구성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국회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민주당이 신상철 위원을 추천했다.
 - 2) 촛불행동TV. 2023.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 [신상철 특집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hgbEAYmifYY> (검색일: 2024. 5. 3).
 - 3) 김효은. 2016.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
<https://v.daum.net/v/20160125173405522> (검색일: 2024. 5. 3).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천안함 북한 어뢰 폭침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위의 자료 26). 3심인 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2심 법원의 선고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여당이었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야당이였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사 위원이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한나라당과 현재의 국민의힘 정당이 보수 성향이며, 민주당이 진보 성향임을 고려할 때 천안함 피격에 관한 음모론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믿기 쉬운 음모론으로 볼 수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등장하였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욱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투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된다”라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김태훈 2020).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1심을 맡아 단심으로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거나 그에 관한 증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선고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결정했다(정성조 202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민경욱 후보는 보수 성향인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2024년)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으며, 많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총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에는 미디어 사용 유형, 이념적 성향 그리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었다.

가. 미디어 사용 유형

최근 들어 공중파 매체보다는 팟캐스트, 유튜브, SNS를 통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미디어 사용 패턴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선생님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공중파 TV 시청(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2. 포털 사이트, 3. 정치 및 시사 팟캐스트(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제외), 4. SNS를 통해 전달된 링크, 5. 종이신문 구독, 6. 정치 및 시사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매체의 특성에 따라 1. 공중파 TV 시청 (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및 종이신문 구독, 2. 포털 사이트, 3. 팟캐스트, SNS 링크, 그리고 유튜브의 세 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포털 사이트는 주로 뉴스, 검색 및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반면, 유튜브, SNS, 팟캐스트 등의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포털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유사하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크며, 비교적 공식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1인 미디어는 제작자의 창의성과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응답자에게 20개의 주요 미디어에 대한 사용빈도를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 방식은 응답자에게 20개의 매체에 대해 “선생님은 해당 매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5의 리커트 척도로 “매우 자주”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서 제시된 매체는 공중파(KBS, MBC, SBS, CBS, YTN), 주요 중앙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신문, 문화일보),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 팟캐스트(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로세로연구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신의한수, 펜앤마이크)였다. 20개 매체에 대한 사용빈도를 요인분석하여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세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이었으며, 세 요인에 의한 합계 설명은 95.97%였다. 세 요인과 각 문항의 변량을 비교한 후 각 요인을 1. 인터넷 매체 성향, 2. 공중파 매체 성향, 3. 진보 매체 사용 성향으로 보았다. 인터넷 매체 성향은 KBS, MBC, SBS, YTN 등의 공중파 TV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인터넷 신문 및 팟캐스트)의 매체 사용 경향을 나타내며, 공중파 매체 성향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로세로연구소, 신의한수, 다스뵈이다, 펜앤마이크 및 CBS 등의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대해 음의 요인 로딩을 나타내며, 주요 방송사, 중앙일간지를 빈번히 사용하는 성향을 나타낸다.⁴⁾ 진보매체 사용성향은

4) CBS는 공중파임에도 응답자들의 사용 패턴이 팟캐스트 및 인터넷 매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CBS가 종교방송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에서는 CBS 방송 매체의 사용빈도가 아니라 뉴스매체로서의 CBS 사용 빈도만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CBS의 시사 관련 프로그램 및 재생 팟캐스트에 대한 사용빈도를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신문, 가로세로연구소, 신의한수, 펜앤마이크 등의 보수 매체에 대해서 음의 요인 로딩(factor loading)을 나타냈다(미디어 사용 패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첨부 2> 참조). 이 세 개의 요인을 활용하여 각 성향별 예측값을 생성하였다.

나.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

컨버스(Philip Converse)에 따르면 이념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Converse 1964). 이념의 측정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본 서베이에서는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적 이념성향의 두 가지의 이념을 각각 측정하였다. 주관적 이념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으로서 0~10의 11개의 값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표시하였다(0: 진보 ~ 10: 보수).

정책적 이념성향은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8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 최저임금 인상, 복지정책, 교육정책,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10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 답변하였다(전체 설문 문항은 <첨부 3> 참조). 8가지 쟁점에 대한 응답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은 2.62였으며, 요인 2 이하의 고유값은 1.00 이하였다. 제1 요인을 활용하여 정책적 이념성향 예측값을 생성하였다.⁵⁾

본 연구에서 이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기응답식 이념 응답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주관적인 이념과 정책적인 이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장승진 2020; Ellis and Stimson 2012).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을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이념적 성향과 정당일체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초래할, 효과의 불명확성에 대한

5)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여 부분점수 방법(partial credit score)을 활용한 경우도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우려에 기인하였다(장승진·하상웅 2022; 허석재 2013).

다.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통령, 법원, 중앙정부, 국회, 군대, 경찰 등의 정부 기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하였다(설문 문항은 <첨부 4> 참조). 각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이 3.41 이상이었으며 56.98%의 설명력을, 요인 2의 고유값이 1.01이며 16.7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분석 결과는 <첨부 5> 참조). 요인 1은 모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 양의 요인 로딩을 나타내며, 요인 2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강한 양의 요인 로딩을, 국회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양(+의) 로딩, 법원, 군대, 경찰에 대해서는 강한 음(-)의 요인 로딩을 나타냈다. 요인 1은 행정, 입법,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정부제도는 물론 법원, 군대, 경찰 등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강한 로딩을 나타냈다. 요인 2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라는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기관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법원, 군대, 경찰 등의 중립적인 기관에는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정부기관 일반에 대한 포괄적 신뢰로, 요인 2는 정파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비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립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파악하였다. 요인 1과 요인 2를 활용하여 각 정부기관 신뢰도 예측값을 생성하였으며, 요인 2의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예측값의 부호를 바꾸었다. 따라서 요인 2에 근거한 예측값은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3) 통제 변수

가.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는 정치관련 뉴스를 챙겨

본다”, “나는 정치적 이슈로 주변인과 토론을 자주 한다”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였다. 정치지식 변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1. 국회 다수당, 2.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 3. 당시 일본 총리의 이름, 4.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 4. 검찰총장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맞은 답의 개수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정치 참여 정도의 비교를 위해 20대 총선 투표 참여 여부도 고려하였다.

나. 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코딩되었다. 연령은 서베이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20대 (또는 이하),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가계소득, 교육수준 등이 인구학적 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2>는 주요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첨부 1> 참조).

<표 1> 변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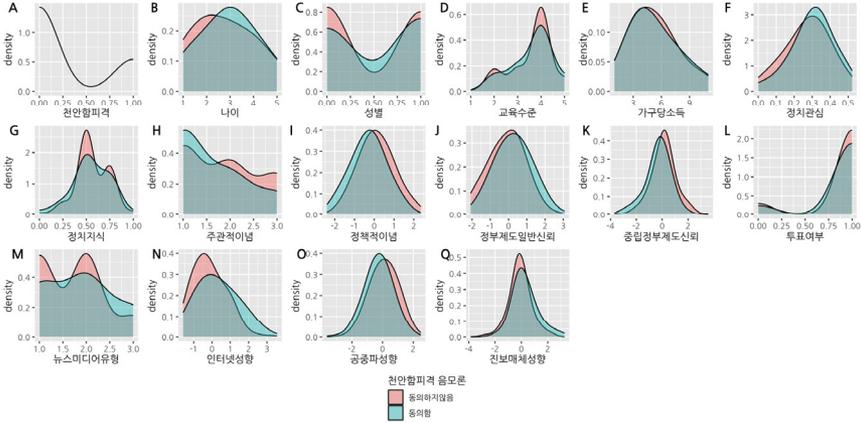
변수		문항	측정	
종속	“천안함 피격” 음모론	선생님은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2 => 0 3, 4 => 1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 동의한다		
독립	정치적 요인	주관적 이념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표시해 주십시오. 0: 매우 반대 ~ 10: 매우 찬성	
		정책적 이념	선생님은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매우 반대 ~ 10: 매우 찬성	요인 분석 결과 제1요인으로 예측값 생성
		정부제도 신뢰	선생님은 다음의 기관(대통령, 중앙정부, 국회, 법원, 군대, 경찰)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2개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 매우 신뢰한다.	요인으로 예측값 생성
	미디어 요인	미디어 사용 유형	선생님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십니까? 1: 공중파 TV 시청(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2: 포털사이트, 3: 정치시사 팟캐스트(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제외), 4: SNS를 통해 전달된 링크, 5: 종이신문 구독, 6: 정치.시사 유튜브 동영상	1, 5 -> 1; 2 -> 2; 3, 4, 6 -> 3
		미디어 사용 성향 점수	20개 주요 매체 사용빈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 성향; 공중파 사용 성향 및 진보매체 사용 성향 점수 추출	
통제	정치지식		4개의 정치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의 개수를 표준화	0~1
	정치관심 요인	관심도	정치관심 관련 문항 3개에 대한 4점 척도 응답을 종합하여 표준화	0~1
		투표 여부	2020년 국회의원선거 투표 여부	0~1
	사회경제 요인	성별	0: 남성, 1: 여성	기준: 남성
		연령	0: 20대 또는 이하,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기준: 20대 이하
		교육수준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석사 이상	1~5
가구 월 소득		한 달 가구 소득? 1: 100만 원 미만 ~ 11:1,000만 원 이상	1~11	

2. 주요 변수 분포

1) 천안함 피격 음모론

<그림 1>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 분포



<그림 1>은 “천안함은 북한군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따른 주요 인구변수, 정치지식, 정치관심, 이념 성향, 정부 신뢰, 미디어 사용자 유형 및 투표 여부 등에 따른 분포를 비교한 밀도 그래프이다. 이 음모론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이 음모론을 사실로 판단(동의)한 집단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집단이고, 허위로 판단한 집단이 음모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림 1>의 패널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는 응답자(276명)보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724명)가 훨씬 많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 동의 여부에 따른 각 변수별 분포를 보면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정치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는 이 음모론을 허위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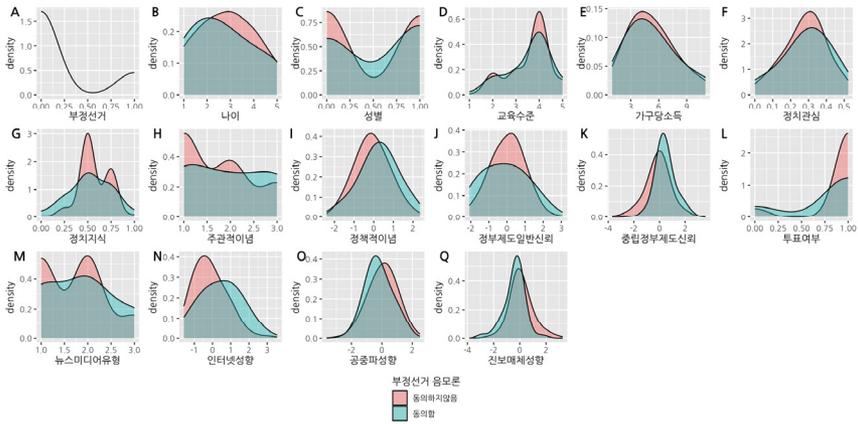
주관적 이념의 분포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책적 이념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

이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제도 일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⁶⁾ 투표율은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사용 유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파 매체와 포털을 더 많이 사용하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공중파를 덜 사용하며, 진보 매체에는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그림 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 분포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베이가 실시된 시점이 2021년이었던 점에서 정부제도 신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2021년 당시는 문재인 정부시기였으며, 국회의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와 천안함 피격 음모론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제도 신뢰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포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주요 요인을 추출한 후 예측값을 구하였다.

<그림 2>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별 밀도 그래프이다. “21대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음모론(이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응답자(212명)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788명)보다 훨씬 더 적었다(<그림 2>-A).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이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믿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지식이 중간과 중상위인 사람들이 허위로 믿는 경향이 높았으나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투표한 집단에서 하지 않은 집단보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 모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사실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분포를 보여준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부정 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신뢰를 보이는 반면, 동의하는 사람들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도를 보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사용하는 뉴스 미디어 유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파 매체와 포털을 더 많이 사용하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공중파를 덜 사용하며, 진보매체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총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두 번째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각 음모론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이항 변수(동의, 비동의)로 재코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결과에서 회귀계수가 아닌 승산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이 추가됨에 따라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둘째, 정치지식, 정치관심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셋째,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정부 기관 신뢰 등의 정파적 성향에 관련된 변수들을, 넷째는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정파적 이념과 뉴스 미디어 사용 유형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켰다.

1) 천안함 피격 음모론 분석

〈표 2〉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1	모델 1-2	모델 1-3	모델 1-4	모델 1-5
연령대(기준 범주: 20대 또는 이하)					
30대	0.928 (0.218)	0.952 (0.226)	0.976 (0.240)	1.056 (0.267)	1.059 (0.268)
40대	1.812 ^{***} (0.400)	1.921 ^{***} (0.429)	1.739 ^{**} (0.402)	1.880 ^{***} (0.457)	1.871 ^{**} (0.456)
50대	1.330 (0.317)	1.331 (0.322)	1.194 (0.300)	1.433 (0.381)	1.431 (0.381)
60대 이상	1.294	1.165	1.467	1.788 [*]	1.790 [*]

	(0.362)	(0.333)	(0.441)	(0.568)	(0.569)
여성(기준 범주: 남성)	1.241	1.365**	1.292*	1.289	1.279
	(0.179)	(0.203)	(0.201)	(0.209)	(0.208)
가구당소득	0.994	0.986	1.006	0.998	0.999
	(0.0294)	(0.0296)	(0.0315)	(0.0320)	(0.0321)
교육수준	1.063	1.019	0.988	1.002	1.003
	(0.0914)	(0.0892)	(0.0904)	(0.0948)	(0.0949)
정치관심		11.60***	5.141**	2.211	2.139
		(7.364)	(3.549)	(1.680)	(1.629)
정치지식		0.559	0.615	0.930	0.945
		(0.226)	(0.258)	(0.401)	(0.408)
주관적 이념			0.931*	0.941	0.950
			(0.0387)	(0.0416)	(0.0631)
정책적 이념			0.701***	0.729***	0.737***
			(0.0640)	(0.0694)	(0.0711)
뉴스 미디어 사용(기본 범주 (공중파))					
포털				1.307	1.555
				(0.228)	(0.661)
인터넷				1.820**	1.600
				(0.436)	(0.843)
주관적 이념*포털					0.958
					(0.0896)
주관적 이념*인터넷					1.031
					(0.113)
정부제도 신뢰					
정부제도 일반 신뢰			1.339***	1.231**	1.226**

			(0.109)	(0.108)	(0.107)
중립 정부제도 신뢰			0.760 ***	0.770 ***	0.773 ***
			(0.0644)	(0.0721)	(0.0725)
인터넷 사용 성향				1.493 ***	1.492 ***
				(0.129)	(0.129)
공중파 사용 성향				0.741 ***	0.739 ***
				(0.0657)	(0.0655)
진보매체 사용 성향				1.129	1.135
				(0.113)	(0.114)
Constant	0.223 ***	0.174 ***	0.277 **	0.185 ***	0.178 ***
	(0.0818)	(0.0791)	(0.139)	(0.0984)	(0.102)
Loglikelihood	-581.170	-572.697	-538.485	-512.484	-512.260
AIC	1178.340	1165.394	1104.970	1062.968	1066.520
BIC	1217.602	1214.471	1173.678	1156.215	1169.582
Pseudo-R ²	0.014	0.028	0.086	0.130	0.130
Observations	1,000	1,000	1,000	1,000	1,000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모델 1-1은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 간의 차이이다. 40대는 20대에 비해 81.2% 더 많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믿는 경향을 보였다. 50대와 60대 역시 20대보다 음모론을 사실로 보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0대는 20대에 비해 7.2% 덜 믿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소득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1-2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추가하였을 때에도 세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0대는 20대에 비해

거의 2배(192.1%)의 확률로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높은 음모론 신뢰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관심과 정치지식은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나타났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치지식은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1-3에서는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및 정부제도 신뢰를 포함하였다. 40대와 20대의 세대 간 차이는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모델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에서 보수 성향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덜 신뢰하며, 진보적일수록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나며,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I장에서 제시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 관한 가설(H2-1)은 기각하지만, 중립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 신뢰의 관계가 관한 가설(H2-2)는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정파성이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정파성의 반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의 검증을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 신뢰의 변화를 추적한 시계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제도와 비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동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의 2번째 요인 로딩을 변환한 예측값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라는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를, 법원, 군대, 경찰이라는 중립적인, 비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요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와 일반적인 정부제도 신뢰는 양의 관계를,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천안함 피격 음모론 간의 음의 관계이다.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1-4에서는 뉴스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뉴스 미디어 사용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세대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에 비하여 40대는 90%, 50대는 39.9%, 60대 이상은 72.9% 더 높은 확률로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32.6% 더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사용을 통제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 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는 높을수록,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공중파 방송 시청자에 비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믿을 확률은 공중파 뉴스 소비자에 비해 82.0%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 사용 유형에서도 관찰된다. 인터넷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확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은 사람들도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공중파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모델 1-5에서는 모델 1-4에 주관적 이념과 매체 사용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이념적 성향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른 강화 또는 약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상호작용변수는 포털의 경우 공중파에 비해 부의 효과, 인터넷의 경우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⁷⁾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로그우도, AIC, BIC, 그리고 맥파든의 유사 R제곱 (Pseudo- R^2)을 비교한 결과 모델 1-4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로 판명된다.

2)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분석

모델 2-1 ~ 모델 2-5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석이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경우 1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회귀계수가 아닌 승산비를 보고하였다.

〈표 3〉 “총선 부정선거” 신뢰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2-1	모델 2-2	모델 2-3	모델 2-4	모델 2-5
연령대(기준 범주 20대 또는 이하)					
30대	0.879	0.919	0.876	0.965	0.965
	(0.199)	(0.210)	(0.208)	(0.239)	(0.239)

7)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 모델 1-5 외에 정책적 이념*뉴스 미디어 사용, 주관적 이념*인터넷 사용, 주관적 이념*공중파 사용, 주관적 이념*진보매체 사용 등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0대	0.580**	0.613**	0.715	0.793	0.792
	(0.137)	(0.146)	(0.176)	(0.206)	(0.206)
50대	0.461***	0.486***	0.489**	0.620	0.619
	(0.122)	(0.130)	(0.137)	(0.184)	(0.184)
60대 이상	1.055	1.081	0.781	0.825	0.824
	(0.290)	(0.304)	(0.233)	(0.269)	(0.269)
여성 (기준 범주: 남성)	1.305*	1.304	1.575***	1.491**	1.491**
	(0.206)	(0.211)	(0.270)	(0.270)	(0.270)
가구당소득	1.020	1.021	0.993	0.981	0.981
	(0.0324)	(0.0329)	(0.0336)	(0.0347)	(0.0348)
교육수준	0.972	0.946	0.972	1.018	1.017
	(0.0906)	(0.0895)	(0.0950)	(0.106)	(0.107)
정치관심		2.304	3.445*	0.962	0.960
		(1.554)	(2.473)	(0.794)	(0.793)
정치지식		0.310***	0.278***	0.484	0.485
		(0.134)	(0.124)	(0.224)	(0.224)
주관적 이념			1.104**	1.100**	1.105
			(0.0495)	(0.0529)	(0.0806)
정책적 이념			1.240**	1.264**	1.266**
			(0.122)	(0.134)	(0.137)
뉴스 미디어 사용(기본 범주 (공중파))					
포탈				0.965	1.009
				(0.190)	(0.548)
인터넷				1.529	1.563
				(0.398)	(0.957)
포탈*주관적이념					0.991
					(0.103)
인터넷*주관적이념					0.995

					(0.116)
정부제도 신뢰					
정부제도 일반 신뢰			0.885	0.791**	0.791**
			(0.0754)	(0.0761)	(0.0764)
중립 정부제도 신뢰			1.717***	1.664***	1.664***
			(0.170)	(0.182)	(0.183)
인터넷 사용				1.892***	1.893***
				(0.186)	(0.187)
공중파 사용				0.708***	0.707***
				(0.0734)	(0.0735)
진보매체 사용				0.704***	0.704***
				(0.0865)	(0.0866)
Constant	0.316***	0.501	0.256***	0.182***	0.178***
	(0.122)	(0.237)	(0.134)	(0.104)	(0.113)
Loglikelihood	-507.524	-503.266	-467.822	-424.730	-424.726
AIC	1031.049	1026.533	963.645	887.461	891.453
BIC	1070.311	1075.610	1032.353	980.708	994.516
Pseudo-R ²	0.018	0.026	0.094	0.178	0.178
Observations	1,000	1,000	1,000	1,000	1,000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모델 2-1은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다. 2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 40대, 50대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는 50대에서 가장 낮게,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60대 이상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의 순서로 나타난 것이다. 20대에 비해 50대는 53.9%, 40대는 42.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5% 이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2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추가하였을 때 세대 간의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40대와 5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대는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델 2-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3에서는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및 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였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50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은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했던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정파성의 관계를 고려하면 예측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역시 높게 나타나며,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도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II장에서 제시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 관한 가설(H2-1)은 지지하지만, 중립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 신뢰의 관계가 관한 가설(H2-2)는 기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일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정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법원, 경찰, 군대 등의 비정치적, 중립적으로 간주되는 정부제도에 대해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연관된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에서도 보수성향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며, 진보적일수록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모델 2-4에서는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매체 사용 관련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20대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40.5% 더 이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사용을 통제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델 2-3에서와 달리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치관심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치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델 1-4와 마찬가지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을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공중파 방송 시청자와 포털 사용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팟캐스트, SNS 링크,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공중파 사용자에 비해 52.9% 정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공중파 사용 성향이 낮을수록, 진보 매체에 대한 노출 성향이 낮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모델 2-5에서는 모델 2-4에 주관적 이념과 매체 사용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이념적 성향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른 강화 또는 약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상호작용변수는 공중파에 비해 포털과 인터넷의 경우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⁸⁾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로그우도, AIC, BIC, 그리고 맥파든의 유사 R제곱 (Pseudo- R^2)을 비교한 결과 모델 2-4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로 판명된다.

3) 분석 결과 종합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총선 부정 선거 음모론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정파적 성격을 가지는 음모론에 대한 개인적 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세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두드러졌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40대와 50대에 비해 20대가 더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 두 음모론 모두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지식이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주관적 이념은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변할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약 5.9%씩 감소하였으며(승산비 0.941, $p<0.01$),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1.100, $p<0.01$). 정책적 이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였다. 정책적 이념이 진보에서 보수로 변할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은 27.1% 감소하였으며(승산비 0.729, $p<0.01$),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 26.4% 증가하였다(승산비 1.264, $p<0.05$).

셋째, 공중파를 사용하여 뉴스를 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확률

8)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모델 2-5 외에 정책적 이념*뉴스 미디어 사용, 주관적 이념*인터넷 사용, 주관적 이념*공중파 사용, 주관적 이념*진보매체 사용 등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은 낮아졌다(승산비 0.741, $p < 0.01$). 반면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통해 뉴스를 보는 인터넷 사용 성향이 높아질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은 증가했다(승산비 1.493, $p < 0.01$). 부정선거 음모론에서도 인터넷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승산비 1.892, $p < 0.01$), 공중파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음모론 신뢰확률이 감소하였다(승산비 0.708, $p < 0.01$). 두 음모론에서 모두 팟캐스트,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집단은 공중파를 통해 뉴스를 보는 집단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며,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 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념 성향과 공중파,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을 비롯한 뉴스 미디어 사용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석 결과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신뢰에 미치는 매개 또는 조절 효과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 뉴스 매체를 선택하고, 정파적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용 뉴스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과 21대 총선 부정선거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파성을 띠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모론이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복수의 행위자가 비밀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낸 소설적 구성의 이야기 구조이다 (Abalakina-Paap et al. 1999; Golec de Zavala and Federico 2018, 1011). 음모론은 통치자가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거나, 피지배자가 저항하려는 권력적 표현이며 정치적 열망이다(전상식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천안함 피격 음모론은 보수정권의 권력에 저항하는 진보세력의 저항 음모론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진보정권의 권력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저항 음모론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두 음모론이 한국의 정파적 이념 대결을 반영하고 있으며,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정파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첫째, 진보—보수의 정치이념에 따라 각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두 가지로 측정된 이념의 영향력이 명확히 나타났다.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사실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정치이념의 부족주의적(tribalistic) 경향을 드러낸다. 1960년대 미국에서 정치이념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생각체계로서 정치과정에서 일관성있는 사고 체계로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Converse 1964), 2020년대 한국에서 이념은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의 정파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부족주의적 성향을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파적 성향이 정부제도 신뢰와 미디어 사용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의 매개 또는 조절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파적 성향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입증한다.

둘째, 인터넷 미디어는 보수 혹은 진보 음모론 모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미디어(유튜브, 팟캐스트 등)를 통해 정치정보를 이용할수록 공중파 매체, 종이신문, 그리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터넷 미디어가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정치분야에 도입된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은 낮은 정치정보 획득비용을 장점으로 시민의 참여 확대와 참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유튜브와 팟캐스트는 음모론 확산의 도구가 되고 있다. 포털은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유튜브는 한국의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⁹⁾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도록 한국 정부는 외국 국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업에게 요구하고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서 공중과 언론사와 포털 기사를 통해 비교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다면적이며 복잡적이라는 점이다(류태건 2016; 서재권·이병재 2022).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며,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 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9) 한국의 자율규제 기구는 KISO(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가 있으며, 회원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적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4.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권 2호, 247-272.
- 구지혜·김민철. 2023.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연구: GS25 남성혐오 논란과 음모론.” 『아시아여성연구』 62권 3호, 115-153.
- 길정아. 2019.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상균. 2020. “보수 신문의 천안함 침몰사건의 보도에 관한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권 2호, 147-182.
- 김태훈. 2020. “결국 대법원 가는 4·15 총선...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내.” 『세계일보』 (5월 7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507510631> (검색일: 2024. 5. 17)).
- 김형준. 2015.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권 1호, 71-97.
- 김효은. 2016.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 『CBS노컷뉴스』(1월 25일) <https://v.daum.net/v/20160125173405522> (검색일: 2024. 5. 3).
- 뉴스시스. 2023. “대법원장 신청서 부정선거 논란 공방...여 ‘사전투표방식 달라’ vs. 야 ‘불가능’” 12월 6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06_0002548671 (검색일: 2024. 6. 15)
- 대법원. 2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번호: 2020도14513, 2022년 6월 9일 판결문.
- 대한민국 국방부. 2010.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9월 민·군 합동조사단.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검색일: 2024. 5. 20.)
- 류태진. 2016.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6권 1호, 1-28.
- 서울고등법원. 2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번호: 2016노444, 2020년 10월 6일 판결문.
- 서재권·이병재. 2021.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화?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3권 4호, 153-183.
- 선스타인, 캐스 저. 이시은 옮김. 2015.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쓴 음모론과 위험한 생각들』. 파주: 21세기북스.
- 안재원. 2022. “반지성주의와 음모론.” 『서양사연구』 66권, 29-57.
- 윤성이·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결정 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271-292.
- 이우연. 2023. “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안함 북한 소행 맞다...부적절 표현 사과.’” 『한겨레신문』 6월 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4894.html>(검색일: 2024. 6. 15).
- 이하림·유홍식. 2021.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권 1호, 119-152.
- 장승진·하상웅. 2022.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6집 2호, 37-58.
- 전명훈. 2020. “여 추천 선관위원 ‘천안함은 북소행...과거 발언 사죄.’” 『연합뉴스』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079951001> (검색일: 2024. 6. 15).
- 전상식. 2014. 『음모론의 시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성조. 2022. “대법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냐”...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종합).” 『연합뉴스』 7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110752004> (검색일: 2024. 5. 17).
- 정태일. 2017.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 운동’, ‘천안함 침몰’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권 1호, 7-30.
- 조대근·김진원. 2023. “천안함 피격사건과 2030세대 남성 보수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문화해석.” 『문화와 정치』 10권 1호, 73-111.

- 춧불행동TV. 2023.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 [신상철 특집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hgbEAymifYY> (6월 15일) (검색일: 2024. 5. 3).
- 허석재. 2013.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65-93.
- Abalakina-Paap, Marina, Walter G. Stephan, Traci Craig, and W. Larry Gregory. 1999. “Beliefs in Conspiracies.” *Political Psychology* 20(3): 637-647.
- Bennett, W. Lance, and Shanto Iyengar. 2008. “A New Era of Minimal Effects? The Changing Foundatio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8(4): 707-731.
- Bierwaczonok, Kinga, Alecksander B. Gundersen, and Jonas R. Kunst. 2022. “The Role of Conspiracy Beliefs for COVID-19 Health Responses: A Meta-analysi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6: 1-4.
- Bramson, Aaron, Patrick Grim, Daniel J. Singer, Steven Fisher, William Berger, Graham Sack, and Clarissa Flocken. 2016. “Disambigua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ncepts and Measure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40(2): 80-111.
- Chigwedere, Pride, George R. Seage, III, Sofia Gruskin, Tun-Hou Lee, and M. Essex. 2008. “Estimating the Lost Benefit of Antiretoviral Drug Use in South Africa.” *Journal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49(4): 410-415.
- Chua, Amy. 2018. *Political Tribes: Group Instinct and the Fate of Nations*. London: Penguin Books.
- Converse, Phili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Corbu, Nicoleta. 2023. “Do Conspiracy Theories Circulating in the Media or Their Debunking Affect People’s Trust in the Media?” *Social Science Information* 62(3): 345-366.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3): 690-755.
- Douglas, Karen M., Joseph E. Uscinski, Robbie M. Sutton, Aleksandra Cichocka, Turkey Mefes, Chee Siang Ang, and Farzin Deravi. 2019. “Understanding Conspiracy Theories.” *Political Psychology* 40(1): 3-35.
- Duclos, Jean-Yves, Joan Esteban, and Debraj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Dylko, Ivan, Igor Dolgov, William Hoffman, Nicholas Echhart, Maria Molina, and Omar Aaziz. 2017. “The Dark Side of Technolog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Customizability Technology on Online Political Selective Exposur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3: 181-190.
- Ellis, Christopher, and James A. Stimson. 2012. *Ideology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teban, Jean-Maria, and Debraj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Eyles, John, Jana Fried, and Emily Catherine Eyles. 2014. “Redacted in Nebraska: the Noises of Conspiracy around Nuclear Power Problems.” *GeoJournal* 79(30): 329-342.
- Festinger, Leon. 1962.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Samuel A. Abrams, and Jeremy C. Pope.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56-560.
- Fiorina, Morris. 2010. *Culture Wars? The Myth of Polarized America*. 3rd ed. New York: Longman.
- Goertzel, T. 1994.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olitical Psychology* 15(4): 731-742.
- Golec de Zavala, Agnieszka, and Christopher M. Federico. 2018. “Collective

- Narcissism and the Growth of Conspiracy Thinking over the Course of the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7): 1011-1018.
- Iyengar, Shanto, and Kyu S. Hahn.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 Iyengar, Shanto, Kyu S. Hahn, Jon A. Krosnick, and John Walker. 2008. “Selective Exposure to Campaign Communication: The Role of Anticipated Agreement and Issue Public Membership.” *The Journal of Politics* 70(1): 186-200.
- Keeley, Brian L. 1999. “Of Conspiracy Theories.” *The Journal of Philosophy* 96(3): 109-126.
- Knobloch-Westerwick, Silvia. 2015. *Choice and Preference in Media Use: Advances in Selective Exposure Theory*. New York: Routledge.
- Lazarsfeld, Paul Felix,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Sangwon, Homero Gil de Zuniga, and Kevin Munger. 202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Fake News Exposure: A Two-panel Study on How News Use and Different Indicators of Fake News Exposure Affect Media Trus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9(4): 408-420.
- Mason, Lilliana.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 Mason, Lilliana. 2018.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arty, Nolan. 2019. *Polarization: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y, Nolan, Keith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16. *Polarized America: The*

-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2nd e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elley, Timothy. 2000. *Empire of Conspiracy: The Culture of Paranoia in Postwar America*.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iller, Joanne M., Kyle L. Saunders, and Christina E. Farhart. 2016. "Conspiracy Endorsement as Motivated Reasoning: The Moderating Roles of Political Knowledge and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4): 824-844.
- Nyhan, Brendan, and Jason Reifler.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 Oliver, J. Eric, and Thomas J. Wood. 2014. "Conspiracy Theories and the Paranoid Style(s) of Mass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952-966.
- Pigden, Charles. 1995. "Popper Revisited or What is Wrong with Conspiracy Theories?"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25(1): 3-34.
- Prooijen, Jan-Willem van, Giuliana Spadaro, and Haiyan Wang. 2022. "Suspicion of Institutions: How Distrust and Conspiracy Theories Deteriorate Social Relationship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3: 65-69.
- Przeworski, Adam. 2022. "What Do Measures of Polarization Measure and What They Do Not?" (May 10, 202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105625>.
- Radnitz, Scott. 2022a. "Dilemmas of Distrust: Conspiracy Beliefs, Elite Rhetoric, and Motivated Reaso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5(4): 1143-1157.
- Radnitz, Scott. 2022b. "Why Democracy Fuels Conspiracy Theories." *Journal of Democracy* 33(2): 147-161.
- Sides, John, and Daniel Hopkins, eds. 2015.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Bloomsbury.
- Stanig, Piero. 2011. "Measuring Political Polar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nual Meeting in Seattle, U.S.A. September.

- Stroud, Natalie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wami, Viren, Tomas Chamorro-Premuzic, and Adrian Furnham. 2010. "Unanswered Ques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of 9/11 Conspiracist Belief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 749-761.
- Uscinski, Joseph E., and Joseph M. Parent. 2014. *American Conspiracy The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scinsky, Joseph E., Adam M. Enders, Michelle I. Seelig, Casely A. Kofstad, John R. Funchion, Caleb Everett, Stefan Wuchty, Kamal Premaratne, and Monohar N. Murthi. 2021. "American Politics in Two Dimensions: Partisan and Ideological Identities versus Anti-Establish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5(4): 877-895.
- Zillman, Dolf, and Jennings Bryant. 1985. *Selective Exposure to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투고일: 2024.06.22. 심사일: 2024.07.21. 게재확정일: 2024.07.22.

〈첨부 1〉 주요 변수 기술 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1,000	41.85	12.37	19	81
성별	1,000	0.500	0.500	0	1
가구당 소득	1,000	5.201	2.533	1	11
교육수준	1,000	3.610	0.879	1	5
정치관심	1,000	0.282	0.122	0	0.522
정치지식	1,000	0.562	0.180	0	1
주관적 이념	1,000	4.459	1.946	0	10
정책적 이념	1,000	-2.48e-10	0.909	-2.399	2.352
정부제도 일반 신뢰	1,000	-3.25e-09	1	-2.076	3.070
중립 정부제도 신뢰	1,000	-1012e-09	1	-3.693	3.573
뉴스 미디어 사용	1,000	1.722	0.695	1	3
인터넷 사용 성향	1,000	-1.45e-09	0.982	-1.574	3.546
공중파 사용 성향	1,000	1.18e-09	0.930	-3.629	2.494
진보 매체 사용 성향	1,000	-9.12e-10	0.915	-3.890	3.273
천안함 피격 음모론	1,000	0.276	0.447	0	1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1,000	0.212	0.408	0	1

〈첨부 2〉 미디어 사용빈도 요인 분석 결과

요인	고유값	차이	비율	누적비율
요인 1	8.623	6.337	0.662	0.662
요인 2	2.285	0.695	0.176	0.838
요인 3	1.590	0.789	0.122	0.960

미디어	요인 1	요인 2	요인 3
조선일보	0.525	0.245	-0.551
중앙일보	0.638	0.250	-0.519
동아일보	0.669	0.198	-0.499
한겨레	0.689	0.098	0.194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artisanship, Media Use, and Trust in Government

Lee, Byung-Jae | Yonsei University

Jho, Whasun | Yonsei University

Kim, Beomsoo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dividual partisanship, media consumption patterns, and trust in government influence belief in political conspiracy theories. The analysis, based on a 2021 independent survey, utilizes a logit regression model to assess beliefs in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conspiracy theo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partisanship significantly affects the likelihood of believing in conspiracy theories. Moreover, those who consume news via internet platforms - such as YouTube, podcasts, and social media - are more prone to such beliefs than those who rely on traditional media like television and newspapers. Interestingly, media consumption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ship and conspiracy theory beliefs. Although internet portals are categorized as internet media, their consumption patterns align more closely with traditional media than with platforms like YouTube, podcasts, and social media, which are the primary sources for the dissemination of conspiracy theories. Additionally, the degree of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is influenced by the level of trust in political versus neutral governmental institutions.

Key Words | Conspiracy Theory, Partisanship, Political Ideology, Internet Media, Trust in Government

지방선거와 선거 당일 날씨 효과: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김지한 | 고려대학교**

강우창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선거 당일 날씨 효과를 분석한다. 읍면동 수준에서 추정된 선거일 강수량 및 기온 자료와 제7~8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 당일 강수량이 1표준편차(3.1 mm) 증가할 때마다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1.8% 증가하고, 보수 정당의 득표율은 2.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날씨가 여전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던 강수량의 효과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 날씨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선거 당일 날씨, 투표율, 정당지지율,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NRF-2020S1A5A8040724)과 고려대학교연구비(K210438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woochang_kang@korea.ac.kr

I. 서론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 날씨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는 언론의 보도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별 선거 및 기상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선거 당일 날씨와 집합적 선거 결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메즈 외(Gomez et al. 2007)를 비롯해서 선거일의 강수량과 강설량이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뤄졌다(Fraga and Hersh 2010; Hansford and Gomez 2010; Horiuchi and Kang 2018; Rogers 2019). 네덜란드(Eisinga et al. 2012a, 2012b)와 독일(Arnold and Freier 2016), 스페인(Artés 2014)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다. 국내 연구에서는 강우창(2016), 이준환과 황원재(Lee and Hwang 2017), 강우창·김지한(2024) 등이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날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선거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날씨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나, 후보자의 미소와 같은 이른바 선거의 비본질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선거에 비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아란 2010). 즉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당일 날씨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읍면동 수준에서 추정된 선거일 강수량 및 기온 자료와 제7·8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선거 당일 강수량이 1표준편차(3.1 mm) 증가할 때마다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1.8% 증가하고, 보수 정당의 득표율은 2.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의 효과는 강수량과 비교할 때 크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사전투표제의 도입 이후 선거 당일 날씨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국회의원 선거(강우창·김지한 2024)와 대비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선거 당일 날씨 효과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나타난다. 합리적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투표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클 때 투표장에 나서고, 그렇지 못 할 때는 기권한다(Riker and Ordeshook 1968). 선거 당일 날씨는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다운스(Downs 1957)는 투표 참여의 비용을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직접비용은 투표에 참여할 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명시적 비용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소로 향하고, 투표할 후보 및 정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기회비용은 투표에 참여하느라 포기한 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묵적인 비용이다. 이를테면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국가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근무 시간 외의 개인 시간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제한된 개인 시간에 투표에 참여하느라 휴식 등의 대안적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선거 당일의 날씨는 투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당일 비나 눈이 오는 등 날씨가 궂은 경우, 투표 참여의 직접비용이 증가한다. 궂은 날씨는 투표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투표 참여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선거 당일 날씨의 직접비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선거 당일 날씨가 궂을 때 투표율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Gomez et al. 2007). 반면, 선거 당일 날씨가

맑을 경우에 투표 참여의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 참여가 아닌 다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투표소에 나서느라 다른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투표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된다. 날씨가 좋을수록,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야외 여가활동의 가치도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반대로 선거 당일 날씨가 껏은 경우, 야외활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투표 참여의 기회비용은 줄어들게 된다(강우창 2016).

따라서 선거 당일 날씨가 투표 참여의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날씨가 좋을 때, 투표 참여의 직접비용은 감소하지만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반대로 껏은 날씨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직접비용을 증가시킨다.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각 비용에 민감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날씨가 집합적인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직접비용에 민감한 유권자와 기회 비용에 민감한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요컨대 전자가 후자보다 많을 경우 껏은 날씨는 투표율을 감소시키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많을 경우 껏은 날씨는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한편 전자와 후자의 수가 비율이 유사할 경우, 선거일 날씨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껏은 선거일 날씨로 인한 직접비용 증가의 효과와 기회비용 감소의 효과가 상쇄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날씨로 인해 투표 참여 결정을 바꾸는 유권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들은 대체로 선거일 날씨가 껏을수록 공화당 및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Arnold and Freier 2016; Gomez et al. 2007). 이들 국가의 경우, 껏은 날씨는 주로 직접비용

의 증가로 나타난다. 연령대가 높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일수록 직접비용의 증가에 민감한데, 이러한 유권자들일 경우 민주당 또는 진보 정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에 비가 오는 경우, 보수 정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강우창 2016). 해당 연구에서 읍면동별 투표자 수가 아닌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했음을 고려하면, 굿은 날씨에 따른 보수 정당 득표율의 감소는 선거일 강수량 증가로 인해 저조해진 보수 정당 지지자의 투표 참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령층에 따라 각 유권자의 지지 정당 성향과 투표 참여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강우창·김지한 2024; Kang 2019). 이를테면 유권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직접비용에도 민감하다. 그 결과, 선거일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보수 정당 지지자인 고령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감소함에 따라 보수 정당의 득표 또한 감소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사전투표제의 도입이 선거일 날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1948-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들을 분석한 존슨과 스테인(Johnson and Stein 2023)은 조기투표(early voting) 제도가 선거일 날씨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투표 제도의 도입 이후 굿은 선거일 날씨가 투표율 및 공화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조기투표 제도의 조절효과는 본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소용되는 비용을 피하거나 줄일 제도적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강우창·김지한(2024)이 사전투표제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08-2020년 한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사전투표제 도입 이전에는 선거일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증가하고 보수 정당의 득표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거일 날씨 효과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라졌다. 연령대별 투표율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투표제 도입 이전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고령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의 도입 이후, 이러한 효과 역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기회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제는 투표 참여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참여의 비용을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제의 도입 이전, 직접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비가 오면 기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가 도입 이후 이들은 선거일 날씨에 대한 예보를 통해 날씨를 예측하고, 선거일 날씨가 궂을 경우 이를 피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물론 제도로서의 사전투표제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뿐, 유권자가 비용을 회피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의 도입 효과가 이론적 기대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일 날씨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관심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제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연구들은 대통령 선거(Johnson and Stein 2023)나 국회의원 선거(강우창·김지한 2024)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반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김욱 2006; 유성진 201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도 후보에 대해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 후보를 결정한다(황아란 2011). 이와 같은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선거 관심도를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일 날씨에 대한 정보를 탐색 및 예측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설령 일부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날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제가 없더라도 투표에 참여했을 유권자일 확률이 높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기호처럼 비본질적인 요인에 따라 후보자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황아란 2010)는 것도 것도 선거일 날씨와 같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방선거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의 날씨에 대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사전투표제의 도입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날씨 효과가 나타난다.

III.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4년과 2018년 치러진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모두 사전투표 도입 이후의 선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 선거 당일 날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선거 당일 날씨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선택은 2014년 이전에 치러진 제4회와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상관측소를 통해 관측된 자료에 따르면, 제4회와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95.7%와 97.0%의 관측소에서 0mm의 강수량이 보고됐다. 일부 비가 관측된 관측소에서도 강수량이 현저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에 초점을 맞추되, 이를 2016년과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와 비교해서, 제도의 효과가 선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선거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있다. 이 중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의석수 배정의 제한이 없다. 이에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경우, 다른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인이 빈번하게 나온다. 그 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는 각 읍면동 수준에서의 합계 투표율, 사전투표비율, 보수 정당 득표율, 진보 정당 득표율, 기타 정당 득표율을 사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읍면동 수준에서 패널 데이터를 구축했다. 종속변수들은 모두 각 읍면동별 선거인수, 즉 읍면동별로 등록된 전체 유권자의 수를 분모로 삼아 산출된다. 즉, 다섯 가지 종속변수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선거일 날짜에 따라 각 변수와 관련된 분자가 변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합계 투표율의 변화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변화를, 사전투표비율의 변화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정당 득표율의 변화는 각각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기타 정당의 득표수의 변화를 반

영한다. 비례대표 선거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은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으로 분류했으며, 그렇지 못한 정당은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기타 정당으로 구분했다.¹⁾

독립변수는 선거일 강수량과 기온이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기상청은 전국에서 500여 개의 유인 및 무인 기상관측소를 통해 온도와 강수량 등의 기상 자료를 수집한다. 분석 대상인 읍면동의 개수가 3천 개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만으로 읍면동별 선거일 날씨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창·김지한(2024)의 방법을 활용했다. 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측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의 날씨를 보간(interpolate)하는 것이다. 우선, 전국을 작은 셀로 나눈 뒤 관측소의 위경도 좌표를 지도에 표시했다. 이후 역거리가중치(Inverse Distance Weighting) 방법을 통해 공간상에서 강수량과 기온의 분포를 점추정한다. 이 때, 공간 상의 한 점과 가까운 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수량과 기온의 값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각 셀에 포함된 점추정치의 평균값이 해당 셀에서의 예측값이 된다. 이후 읍면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폴리곤 내 셀들의 강수량 및 기온의 평균치를 계산해 각 읍면동의 예측 강수량 및 기온 자료를 구축했다. 기온의 경우 선거일의 절대적인 기록뿐 아니라, 선거가 있는 주의 평균 기온 대비 선거일의 상대적인 기온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선거일 기온에서 선거일 전후 일주일 동안의 평균 기온을 빼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기온을 산정해 분석에 사용했다.

1)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을 진보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보수 정당으로 구분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보수 정당으로 구분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진보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보수 정당으로 구분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보수 정당으로 구분했다.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해 투표율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했다. 우선 선거 경쟁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박경미 2014; 조진만 2009; 한정훈·강현구 2009; 황아란 2008; Cancela and Geys 2016)을 반영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구도와 양상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율 및 정당 득표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지역구 선거 경쟁도를 통제 변수로 포함했다. 선거 경쟁도는 각 지역구 선거의 1위 후보 득표율에서 2위 후보 득표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해당 지역구 선거가 치열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특성이 투표율 및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읍면동별 총 인구 수(정수현 2012; 황아란 1997)와 60대 이상 인구 비율(한정훈·강현구 2009; Brady et al. 1995), 20대 인구 비율(박경미 2014)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또한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요인들을 반영했다. 투표 참여나 정당 지지 성향에 대한 잠재적 도농 효과(김재한 2011; 황아란 2011; Lee 2004; Mo et al 1991)를 통제하기 위해 시군구별 농가인구 비율을 고려했다. 지역별 경제상황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재철 2008; 장승진 2012)을 고려해서 각 시군구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표 1〉 기술통계 요약 (1) - 지방선거 광역비례의원 (2014년, 2018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합계 투표율	6,886	59.3	9.0	24.4	92.8
사전투표 비율	6,886	12.5	7.0	1.6	63.2
진보 정당 득표율	6,886	28.1	11.8	4.0	63.0
보수 정당 득표율	6,886	25.9	11.9	2.8	65.6
기타 정당 득표율	6,886	2.9	2.3	0.3	16.7

선거일 강수량	6,886	1.2	3.1	0.0	30.2
선거일 기온	6,886	21.0	1.6	6.4	24.4
선거일 기온 - 주 평균 기온	6,886	0.4	0.7	-13.4	2.3
선거경쟁도(기초자치단체장)	6,886	18.4	14.7	0.1	67.5
인구(로그)	6,886	9.1	1.0	4.7	11.6
60세 이상 비율	6,886	27.8	13.4	1.8	66.4
20대 인구 비율	6,886	13.9	4.0	1.2	53.7
농가인구 비율(시군구)	6,886	10.2	12.3	0.0	44.6
사회복지예산비율(시군구)	6,886	35.7	14.7	9.3	65.9
재정자립도(시군구)	6,886	29.3	14.6	7.6	71.6

주: 선거경쟁도는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수준에서, 농가인구 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되었음. 기타 변수는 읍면동 수준에서 측정됨.

〈표 2〉 기술통계 요약 (2) -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2016년, 2020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합계 투표율	6,964	61.4	7.3	28.4	90.0
사전투표 비율	6,964	18.4	10.5	0.0	61.9
진보 정당 득표율	6,964	31.2	11.8	6.5	63.8
보수 정당 득표율	6,964	21.3	11.2	1.0	24.7
기타 정당 득표율	6,964	6.1	2.7	1.0	24.7
선거일 강수량	6,964	5.8	9.6	0.0	107.0
선거일 기온	6,964	13.1	1.7	4.4	17.2
선거일 기온 - 주 평균 기온	6,964	0.8	0.9	-6.7	3.3
선거경쟁도(지역구)	6,934	12.5	14.8	0.0	75.3
인구(로그)	6,962	9.1	1.1	4.7	11.8
60세 이상 비율	6,962	30.3	14.1	1.8	68.8
20대 인구 비율	6,962	13.5	4.2	2.3	44.2

농가인구 비율(시군구)	6,928	9.6	11.3	0.0	44.3
사회복지예산비율(시군구)	6,878	37.7	14.6	9.2	71.5
재정자립도(시군구)	6,878	28.3	14.2	6.6	68.0

주: 선거경쟁도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수준에서, 재정자립도, 농가인구 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되었음. 기타 변수는 읍면동 수준에서 측정됨.

<표 1>과 <표 2>는 각각 지방선거 광역비례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나타낸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합계투표율 평균은 각각 59.3%와 61.4%로 나타났다. 평균 사전투표 비율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18.4%인 반면, 지방선거는 12.5%에 불과했다. 주요 종속변수인 진보 정당 득표율과 보수 정당 득표율의 읍면동 수준 평균의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28.1%와 25.9%,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1.2%와 21.3%로 나타났다. 주요 독립변수인 강수량의 읍면동 수준 평균은 지방선거의 경우 1.2mm,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8mm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경우, 비가 거의 오지 않은 2006년과 2010년, 2022년 선거를 포함하지 않은 값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화창한 날씨가었다.)

경험적 분석은 다섯 가지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 다음의 고정효과 회귀분석(OLS) 모형을 추정하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각각에 대해 진행했다. 아래 모형에서 i 는 읍면동, d 는 지역구, j 는 시군구, t 는 선거해를 의미한다. 이어 X 는 통제변수들을 나타내고, α 와 δ 는 각각 읍면동 고정효과를 뜻한다. 읍면동 고정효과를 통해 지역주의를 비롯해 시간에 대해 불변하는 각 읍면동의 특성이

2) 익명의 심사자가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 강수량이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고민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투표 참여를 저해할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강우창(Kang 2019)에 따르면, 강수량의 증가 뿐 아니라, 강수 유무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온다는 사실 자체가 투표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표율 및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선거해 고정효과의 경우, 각 선거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이를테면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이슈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text{종속변수}_{idjt} = \beta_1 \text{날씨}_{idjt} + X\Psi_{idjt} + \alpha_{idj} + \delta_t + \varepsilon_{idjt}.$$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선거 경쟁도를 제외한 통제 변수들은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주요 독립변수인 읍면동별 선거일 강수량의 경우, 평균으로 뺀 뒤 표준편차를 나눠 표준화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다른 지역구에 속한 읍면동 대비 같은 지역구에 속한 읍면동 간의 유사성이 크게 나타난다. 다만 지역구의 경우, 선거별로 경계 조정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 수준에서의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했다.

IV. 분석결과

1. 선거 당일 강수량의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표 3>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종속 변수에 대한 선거 당일 강수량의 효과를 보여준다. 모형 (1)과 (2)는 각각 합계투표율과 사전투표비율, 모형 (3), (4), (5)는 진보 정당, 보수 정당, 기타 정당으로 분류된 정당들의 합계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다. 모형 (1)에서 강수량의 계수는 $-0.120(\text{se}=0.217)$ 으로, 강수량이 합계투표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2)는 선거일 강수량이 사전투표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강수량의 계수는 $-1.034(\text{se}=0.252)$ 이다. 이는 선거일 강수량이 1표준편차(3.1mm) 증가할 때마다 사전투표비율이 약 1.03%p 감소함을 의미하며, 그 효과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사전투표비율이 전체 선거인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형 (2)의 결과는 선거일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사전투표일보다는 본투표일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투표 참여의 직접비용 대비 기회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더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3〉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일 강수량 효과

	(1)	(2)	(3)	(4)	(5)
종속변수	합계투표율	사전투표 비율	진보 정당 득표율	보수 정당 득표율	기타 정당 득표율
강수량	-0.120 (0.217)	-1.034*** (0.252)	1.812*** (0.306)	-2.648*** (0.299)	0.599*** (0.143)
선거경쟁도	-0.032*** (0.012)	-0.026** (0.011)	-0.018 (0.016)	0.020 (0.014)	-0.022*** (0.007)
인구(로그)	2.478*** (0.880)	-1.406* (0.769)	5.112*** (0.958)	-3.759*** (1.130)	1.132*** (0.373)
60세 이상 비율	0.002 (0.084)	-0.090 (0.064)	-0.072 (0.094)	-0.087 (0.110)	0.126*** (0.033)
20대 인구 비율	0.064 (0.116)	-0.231** (0.095)	0.004 (0.137)	-0.046 (0.120)	0.091* (0.052)
농가인구 비율 (시군구)	0.168* (0.087)	-0.318*** (0.121)	-0.011 (0.117)	0.130 (0.104)	0.070 (0.051)
사회복지예산비율 (시군구)	-0.103 (0.084)	-0.015 (0.079)	0.121 (0.122)	-0.261** (0.132)	0.028 (0.047)
재정자립도 (시군구)	-0.039 (0.071)	0.009 (0.061)	0.074 (0.099)	-0.167* (0.101)	0.049 (0.037)

상수항	61.086***	17.005***	33.515***	28.592***	2.401***
	(0.351)	(0.352)	(0.524)	(0.605)	(0.193)
관측치	6,886	6,886	6,886	6,886	6,886
R^2	0.965	0.930	0.973	0.974	0.860

주: 강수량은 음면동 수준에서 추정되었으며 단위는 mm. 선거경쟁도를 제외한 통제변수는 모두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조정되었음. 각 선거해가 터미 변수로 포함되었으나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 $p < 0.1$, ** $p < 0.05$, *** $p < 0.01$

모형 (3), (4), (5)는 각각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기타 정당으로 구분된 정당들의 합계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한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 강수량이 1표준편차(3.1mm) 증가할 때마다 진보 정당 득표율과 기타 정당 득표율은 각각 1.81%p와 0.6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보수 정당 득표율의 경우 크게 감소한다(-2.65%p). 이는 선거일 강수량이 증가할 때 진보 정당 지지율은 증가하고 보수 정당 지지율은 감소한다는 강우창(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 사전투표 도입 이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일 강수량 효과

	(1)	(2)	(3)	(4)	(5)
종속변수	합계투표율	사전투표 비율	진보 정당 득표율	보수 정당 득표율	기타 정당 득표율
강수량	-0.243	-0.621*	-0.028	-0.057	-0.195
	(0.349)	(0.355)	(0.268)	(0.324)	(0.152)
선거경쟁도	-0.083***	-0.001	-0.030**	-0.024	-0.016**
	(0.018)	(0.021)	(0.012)	(0.016)	(0.008)
인구(로그)	1.650*	-2.551**	3.111***	-1.361	0.233
	(0.984)	(1.046)	(0.662)	(0.976)	(0.231)
60세 이상 비율	0.019	0.101	-0.029	-0.029	0.085***
	(0.083)	(0.090)	(0.064)	(0.085)	(0.028)

20대 인구 비율	-0.223**	-0.374***	-0.275***	-0.026	0.030
	(0.102)	(0.118)	(0.088)	(0.106)	(0.036)
농가인구 비율 (시군구)	0.294	-0.572**	-0.056	0.375**	-0.059
	(0.184)	(0.253)	(0.136)	(0.164)	(0.101)
재정자립도 (시군구)	-0.048	0.115	-0.107	0.045	0.011
	(0.076)	(0.094)	(0.069)	(0.073)	(0.038)
사회복지예산비율 (시군구)	-0.075	-0.055	0.016	-0.052	-0.033**
	(0.060)	(0.059)	(0.034)	(0.064)	(0.017)
상수항	67.051***	25.595***	32.406***	23.222***	7.714***
	(0.458)	(0.586)	(0.360)	(0.528)	(0.174)
관측치	6,810	6,810	6,810	6,810	6,810
R^2	0.930	0.943	0.985	0.975	0.906

주: 강수량은 읍면동 수준에서 추정되었으며 단위는 mm. 선거경쟁도를 제외한 통제변수는 모두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조정되었음. 각 선거해가 더미 변수로 포함되었으나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 0.1 ** .05 *** .01

<표 4>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종속변수에 대한 선거일 강수량의 효과를 보여준다. <표 4>의 모형 (1)과 (2)는 각각 합계투표율과 사전투표비율, 모형 (3), (4), (5)는 진보 정당, 보수 정당, 기타 정당으로 분류된 정당들의 합계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다. <표 3>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표 4>의 모형 (1) 역시 선거일 강수량이 합계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의 모형 (2)의 경우 강수량의 계수는 $-0.621(\text{se}=.355)$ 로, 선거일 강수량이 1표준편차(9.6 mm) 증가할 때마다 사전투표비율이 0.6%p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표 3>의 모형 (2)와 비교하면 강수량의 계수값 크기도 작아졌고 통계적 유의 수준도 낮아지기는 했지만, 선거 종류와 무관하게 선거일 강수

량이 사전투표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3), (4), (5)에서 강수량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3>과 <표 4>의 결과는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날씨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집합자료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 날씨 효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유권자 수준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는 사전 투표가 도입되기 이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강우창(2016)의 결과와 유사하다. 사전투표 도입 이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날씨가 좋지 않을수록 직접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는 기권하고 기회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한 결과 진보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유권자들은 각자 선거 당일 날씨에 대한 일기예보를 고려하여 투표 참여 관련 비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당일 날씨의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가 날씨에 따라 치르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비용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사전투표를 활용해 날씨로 인한 투표 참여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제로 한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선거 당일 날씨를 고려하여 사전투표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선거 당일 날씨는 여전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2. 선거 당일 기온의 효과에 대한 분석

선거 당일의 기온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후보자 기호 등 비본질적 요소에 의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방선거의 맥락(황아란 2010)에서는 날씨의 효과가 강수량에 국한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온의 경우, 강수량과 비교할 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작을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온과 투표 비용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van Assche et al. 2017; Eisinga et al. 2012b; Gatrell and Bierly 2002; Lamare 2013; Stockemer and Wigginton 2018). 아이징거 외(Eisinga et al. 2012b)에서는 기온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증가했지만, 라마레(Lamare 2013)의 경우 높은 기온이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의 계절이나 평균 기온에 따라 기온 상승이 투표 참여의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선거가 추운 겨울에 치러질 경우, 기온 상승은 투표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선거가 무더운 여름에 치러질 경우, 기온 상승은 투표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선거 당일 기온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온의 절대치보다는 상대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 당일 기온과 선거가 있는 주의 평균 기온 간의 차이를 독립변수로 삼아 선거 당일 기온 효과를 분석한다.

〈표 5〉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일 기온 효과

	(1) 합계투표율	(2) 사전투표 비율	(3) 진보 정당 득표율	(4) 보수 정당 득표율	(5) 기타 정당 득표율
온도차	-0.027 (0.255)	-0.480* (0.273)	0.886** (0.440)	-0.028 (0.115)	0.022 (0.036)
상수항	61.179*** (0.417)	18.027*** (0.448)	31.682*** (0.891)	25.852*** (0.925)	1.533*** (0.275)
관측치	6,886	6,886	6,886	6,886	6,886
R^2	0.965	0.922	0.965	0.960	0.849

주: 독립변수는 선거일 기온과 선거주의 평균 기온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 양의 값을 갖게 됨. 추정모형에는 <표 3>과 <표 4>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음.

* 0.1 ** .05 *** .01

<표 5>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일 기온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본 표는 앞선 <표 3>이나 <표 4>와 동일한 구성의 모형을 추정된 결과이지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해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은 보고하지 않았다. 모형 (1)에 따르면 선거 당일의 기온은 합계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도 강수량의 효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3)에서 선거 당일의 평균 기온이 선거가 있는 주의 평균 기온보다 1 표준편차(0.7도) 높을수록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0.9% 가량 증가했으나, 보수 정당 득표율이나 기타 정당 득표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월이라는 시점과 평균 21.0도의 기온(<표 1>)을 생각하면,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일의 기온이 선거가 있는 주의 평균 기온에 비해 높아질 경우 기회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보 정당의 득표 이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표 6> 사전투표 도입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일 기온 효과

	(1) 합계투표율	(2) 사전투표 비율	(3) 진보 정당 득표율	(4) 보수 정당 득표율	(5) 기타 정당 득표율
온도차	0.914*** (0.227)	-0.024 (0.273)	0.071 (0.148)	1.016*** (0.193)	-0.039 (0.098)
상수항	66.432*** (0.450)	25.853*** (0.661)	32.361*** (0.339)	22.452*** (0.518)	7.820*** (0.188)
관측치	6,810	6,810	6,810	6,810	6,810
R^2	0.937	0.942	0.985	0.979	0.905

주: 독립변수는 선거일 기온과 선거주의 평균 기온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 양의 값을 갖게 됨. 추정모형에는 <표 3>과 <표 4>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었음.

* 0.1 ** .05 *** .01

<표 6>은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일 기온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표 5>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은 보고하지 않았다. 모형 (1)에 따르면 선거일 평균 기온이 선거주 평균 기온보다 1 표준편차 (0.9도) 높을수록 합계투표율은 0.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모형 (2)는 선거일 기온이 사전투표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표 5>와 <표 6>을 비교했을 때, 선거일 기온의 증가로 득표 이득을 얻는 정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평균 기온이 선거주 평균 기온보다 1 표준편차(0.7도) 높을수록 진보 정당 득표율만 0.89%p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평균 기온이 선거주 평균 대비 1 표준편차(0.9도) 높을수록 보수 정당 득표율이 1.02%p 증가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진행되며 평균 기온이 13.1도로 쌀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거일 기온 상승은 투표참여의 직접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늘어난 결과 보수 정당 득표율이 증가했을 수 있다. 결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상이하고 평균 기온도 다름에 따라, 선거일 기온 상승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온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선거 당일의 기온까지는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한국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당일 날씨가 투표율과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당일의 굵은 날씨가 진보 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강수량이 1 표준편차(3.1mm) 증가할 때마다 진

보 정당의 득표율은 1.8%p 증가하고, 보수 정당의 득표율은 2.7%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 도입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강우창 2016). 다만 해당 연구에서 강수량 10mm가 증가할 때, 유사한 진보 정당 득표율이 0.9%p 가량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선거에서 강수량의 효과는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강수량이 정당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전투표제도가 날씨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강우창·김지한(20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집합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논문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를 엄밀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관심이 높고,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사전 투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선거 당일 날씨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전투표제도가 투표 의지가 높은 유권자에게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관심도나 투표 의지가 낮아 사전투표제도가 날씨 효과를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의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³⁾

3) 2018년 7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또한 다른 심사자는 유권자의 전반적인 관심이 높고, 선거경쟁이 당파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정당의 동원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 당일 강수량이 예상될 경우, 사전투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전개될 수 있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논문의 분석 수준을 고려할 때, 유권자 수준에서 날씨 효과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기온의 효과는 강수의 효과에 비해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사전투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선거 당일 기온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선거가 있는 주의 평균 기온에 비해 선거 당일의 기온이 증가할 때, 그 효과는 선거에 따라 달랐다.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당일 기온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0.7도) 높을수록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0.9%p 증가했다. 반면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당일 기온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0.9도) 높을수록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1.0%p 증가했다. 이는 각 선거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로 인해 기온 상승이 투표 참여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6월에는 선거 당일 기온 상승이 기회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비교적 기온이 낮은 4월에는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아질 때 직접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의 효과가 항상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거 경쟁의 비본질적인 요소인 선거일 날씨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선거가 책임성과 대표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도의 도입과 함께 선거 당일 날씨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날씨의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도는 유권자가 고려하는 보상과 비용의 구조를 바꾸어, 정치적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기대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의 여부는 유권자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와 같이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날씨의 효과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그 영향력도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우창. 2016. “선거 당일 날씨와 정당 투표.” 『한국정당학회보』 15권 1호, 107-30.
- 강우창·김지한. 2024. “사전투표제 도입과 선거 당일 날씨 효과: 제18~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율과 정당득표율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8집 1호, 33-54.
- 김육.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 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5권 1호, 99-121.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권 3호, 183-206.
- 박경미. 2014. “선거별 투표율 결정 요인: 서울시 선거구의 집합자료 분석 (1987~2010년).” 『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95-122.
- 유성진. 2014.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 한계와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8집 5호, 97-117.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11-36.
- 장승진. 2012.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99-120.
-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집 1호, 27-54.
- 조진만.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권 2호, 5-34.
- 한정훈·강현구. 2009.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18권 1호, 51-82.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285-98.
- 황아란. 2008. “선거환경 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제18대 총선에서

- 영남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83-109.
- 황아란. 2010. “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4집 1호, 107-24.
- 황아란. 2011.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년 지방선거의 변화와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권 1호, 217-36.
- Assche, Japser van, Alain Van Hiel, Jonas Stadeus, Brad J. Bushman, David De Cremer, and Arne Roets. 2017. “When the Heat Is On: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Voter Behavior in Presidential Elec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8: 1-5.
- Arnold, Felix, and Ronny Freier. 2016. “Only Conservatives Are Voting in the Rain: Evidence from German Local and State Elections.” *Electoral Studies* 41: 216-21.
- Artés, Joaquín. 2014. “The Rain in Spain: Turnout and Partisan Voting in Spanish Ele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4: 126-41.
-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ehman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94.
- Cancela, João, and Benny Geys. 2016. “Explaining Voter Turnout: A Meta-Analysis of National and Subnational Elections.” *Electoral Studies* 42: 264-75.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NY: Harper and Row.
- Eisinga, Rob, Manfred Te Grotenhuis, and Ben Pelzer. 2012a. “Weather Conditions and Political Party Vote Share in Dutch National Parliament Elections, 1971-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56(6): 1161-65.
- Eisinga, Rob, Manfred Te Grotenhuis, and Ben Pelzer. 2012b. “Weather Conditions and Voter Turnout in Dutch National Parliament Elections, 1971-2010.”

-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56(4): 783-86.
- Fraga, Bernard, and Eitan Hersh. 2010. "Voting Costs and Voter Turnout in Competitive Election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339-56.
- Gatrell, Jay D., and Gregory D. Bierly. 2002. "Weather and Voter Turnout: Kentucky Primary and General Elections, 1990-2000." *Southeastern Geographer* 42(1): 114-34.
- Gomez, Brad T., Thomas G. Hansford, and George A. Krause. 2007. "The Republican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Turnout,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9(3): 649-63.
- Hansford, Thomas G., and Brad T. Gomez. 2010. "Estimating the Electoral Effects of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2): 268-88.
- Horiuchi, Yusaku, and Woo Chang Kang. 2018. "Why Should the Republicans Pray for Rain? Electoral Consequences of Rainfall Revisited." *American Politics Research* 46(5): 869-89.
- Johnson, Martin, and Robert M. Stein. 2023. "Mitigating the Turnout Effects of Bad Weather With Early Voting: 1948-2016." *American Politics Research* 51(2): 197-209.
- Kang, Woo Chang. 2019. "Liberal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Opportunity Costs of Voting and Electoral Outcomes in South Korea." *Political Science* 59(2): 322-54.
- Lamare, J. Ryan. 2013. "Mobilization and Voter Turnout: Should Canvassers Worry about the Weathe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6(3): 580-86.
- Lee, Junhan. 2004. "Who Votes and Wh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2): 183-198.
- Lee, Junhan, and Wonjae Hwang. 2017. "Weather, Voter Turnout and Partisan Effects in Korea, 1995-1999."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5(4-5): 507-28.
- Mo, Jongryn, Daid Brady, and Jaehun Ro. 1991. "Urbanization and Voter Turnout in Korea: An Update." *Political Behavior* 13(1): 21-32.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2.
- Rogers, Steven. 2019. "Coattails, Raincoats, and Congressional Election Outcome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2(2): 251-55.
- Stockemer, Daniel, and Michael Wigginton. 2018. "Fair Weather Voters: Do Canadians Stay at Home When the Weather Is Bad?"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62: 1027-37.

투고일: 2024.06.23. 심사일: 2024.07.23. 게재확정일: 2024.07.23.

Election Day Weather Effects in Local Elections in the Period with the Early Voting System

Kim, Jihan | Korea University

Kang, Woo Chang |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ion day weather effects in South Korean local elections. Analyzing the election day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data estimated at the town level, along with the results of the 7th and 8th provincial counci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we found that for every 1sd (3.1mm) increase in election day precipitation, the vote share of progressive parties increases by 1.8%, while that of conservative parties decreases by about 2.7%. Unlike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election day weather still influences election results. Furthermore, compared to the precipitation effects observed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sul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the effect of election day weather in local elections appears to be larger.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심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업무 자동화 현상은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연구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는지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서구 국가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비서구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6년 및 201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의 상승이 장기적인 목적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기적인 목적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업무 자동화, 기술 변화, 사회적 보호, 복지 태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8356).

I. 서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기술 변화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업무 자동화(task automation)이다. 기계,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이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면서 노동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노동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7),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의 규모와 강도가 이전의 산업 혁명들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Ford 2015). 실제로 전체 직업의 약 40 ~ 50%가 기술 변화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영향을 받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되고 있다(Frey and Osborne 2017; Manyika et al. 2017). 특히 챗GPT(Chat GPT)를 비롯하여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인간의 일과 노동에 대한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Marr 2023;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는지 주목해왔다. 기존의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적 동기에 기반한 복지 태도 결정 이론들(e.g., 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을 고려해 본다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복지국가와 사회 정책을 통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적이지 못하고 복합적이다(Busemeyer and Sahm 2022; Dermont and Weisstanner 2020; Gallego et al. 2022; Im 2021; Kurer and Hausermann 2022; Sacchi et al. 2020; Thewissen and Rueda 2019; Weisstanner 2023; Zhang 2022).

게다가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서구 국가들의 제도적 맥락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령 에스핑 —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은 복지 레짐(welfare regime) 유형을 세분화하였지만, 이는 서구 국가 중심의 분류이며 비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대중의 복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해온 것을 고려해 볼 때(Edlund 1999; Jakobsen 2011; Larsen 2008; Svallfors 1997), 비서구 국가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대중의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양상이 서구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비서구 국가로 확장하는 것은 업무 자동화라는 새로운 실업 위험과 그것이 노동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가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비서구 국가 가운데 한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6년 및 2018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의 상승이 장기적인 목적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기적인 목적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의 기술 변화 — 특히 업무 자동화 — 의 정치적·정책적 영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이론적 초점과 가설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이어서 자료의 실증적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분석 결과의 함의에 대한 정리 및 토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의 불균등한 분포

최근의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기술 변화는 노동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업무 자동화 현상은 인간의 노동력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많은 일자리의 축소나 소멸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경제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업무 자동화에 대한 취약성 역시 사회 전반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더 빨리 피해를 보는 집단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누가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위험에 더 취약한지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개인들이 가진 직업에 따라 달리 수행하는 업무(tasks)의 속성이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속도를 달리한다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져왔다(Arntz et al. 2016; Autor et al. 2003; Frey and Osborne 2017).

지난 20년간 관련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선구적인 시도는 오토 등(Autor et al. 2003)이 제시한 정형화된 업무 편향 기술 변화(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RBTC) 가설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각 직업이 가진 정형성(routineness), 즉, 업무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정도이다. 정형화된 업무의 강도(routine task insensivity: RTI)가 높을수록 인간 노동자의 역할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업무 자동화에 따른 실업 위험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RTI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단순 사무직이나 판매직과 같이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 수준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들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보통 중간 정도의 기술(skills) 수준을 요하며, 종사자들은 사회 내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력이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되고 노동 시장 내에서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위 직업의 양극화(job polarization) 양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즉, RTI가 높은 중간 수준 기술 보유자들이 노동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요구되는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높고, 따라서 기계나 컴퓨터로 쉽게 대체되기가 어려운 직업들은 RTI가 높지 않다.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관련 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와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업무 자동화에 따른 직업의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내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Autor and Dorn 2013; Goos et al. 2009; 2014).

일련의 연구들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실업 위험이 단순한 우려나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아제몰루와 레스트레포(Acemoglu and Restrepo 2020)의 연구는 로봇의 도입이 일자리 수의 감소와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얄과 아네자(Goyal and Aneja 2020)는 인공지능의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이러한 경향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앞서 이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최근의 급속한 기술 변화는 실업 위험의 증가와 경제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령 다우스 등(Dauth et al. 2021)의 연구는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의 득실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은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대신 서비스직의 증가로 이어진다. 즉, 앞서 예측된 바(Autor et al. 2003; Goos et al. 2009; 2014)와 같이 중간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대신 낮은 수준의 기술만 필요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과 엔지니어는 로봇

도입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 양극화 현상은 이미 취직하여 자리를 잡은 나이 든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취직한 노동자들은 다소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실직을 하는 경우는 적었지만, 대신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자리 감소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아제몰루 등의 연구(Acemoglu et al. 2022)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고용은 늘리지만, 대신 기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은 줄이는 양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져온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모두에게 균등하지 않으며,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포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형성된 계층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동화 양상에 가장 취약한 것은 기존에 중산층의 위치를 차지해왔던 중간 수준 기술 보유 노동자들이다(Autor et al. 2003). 이들은 정치적으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Kurer and Palier 2019).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른 실업 위험이 노동자들의 정치 태도 및 행태와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왔다(Gallego and Kurer 2022).

2. 업무 자동화에 따른 실업 위험은 사회적 보호 지지로 이어지는가?

연구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개인들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통적으로 정치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경제적 위험이 복지국가나 사회 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들이 보유한 기술의 성격이나 혹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특

성에 따라 그들이 잠재적으로 겪게 될 실업의 가능성과 그 기간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실업의 가능성이 높거나 일단 실직할 경우 그것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insurance)의 목적으로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업무 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실업 위험 역시 개인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시되어온 실증적 증거들은 복합적인 함의를 지닌다. 우선 테위센과 루에다(Thewissen and Rueda 2019)의 연구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02년 ~ 2012년 사이 수집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RTI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재분배를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비우호적인 고소득층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RTI에 비해 보다 최근의 노동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두 개의 지표(Arntz et al. 2016; Frey and Osborne 2017)¹⁾를 사용하여 부시메이어와 삼(Busemeyer and Sahn 2022) 역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재분배에 대한 강한 지지로 이어짐을 확인했다.

쿠어러와 하우스만(Kurer and Hausermann 2022)은 RTI처럼 객관적인 업무 자동화 위험 지표를 사용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의 연구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더 크게 느낄수록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s)에 대한 지지가 강해짐을 보여준다. 한편 정책의 범주를

1) 프레이와 오스본(Frey and Osborne 2017)은 기술의 실현 가능성(technological feasibility)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한 뒤, 미국의 직업 분류 체계인 SOC(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2010년 버전에 포함된 702개 직업이 향후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안츠 등(Arntz et al. 2016)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2008년 버전의 두 자릿수 수준(2-digit level)의 직업들을 대상으로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지표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IV. 자료 및 분석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장하여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나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Im 2021; Sacchi et al. 2020).

반면 일련의 연구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개인들의 사회적 보호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장(Zhang 2022)은 실험 연구를 통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업무 자동화가 미국인들의 일자리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갈레고 등(Gallego et al. 2022)은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일련의 업무 자동화 관련 지표 및 주관적인 위험 인식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다양한 정책 차원에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교육과 같은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이나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그리고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Busemeyer and Sahm 2022; Dermont and Weisstanner 2020; Kurer and Hausermann 2022; Weisstanner 2023).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도출되는 복합적인 결과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은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유럽이나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위험(risk)이 인식되고 그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결정되는 것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Douglas and Wildavsky 1983). 따라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정치 및 정책 선호에 반영할 것인지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서구 국가들이 가지는 제도적 맥락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의 가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사례이다. 기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서구 국가들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은 매우 다르다. 소위 복지 레짐(welfare regime)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분류한 복지 레짐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²⁾. 기존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대중의 복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해 온 것을 고려해 볼 때(Edlund 1999; Jakobsen 2011; Larsen 2008; Svallfors 1997), 한국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 시도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한국인들의 기본 소득에 대한 지지와 연결하여 규명하고자 한 김수완 등(2018)의 연구가 유일하다.

서구 국가와 다른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우선 복지국가의 크기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사회 정책 관련 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14.8%로 OECD 평균(21.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OECD 2019). 기존 연구들은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대중의 복지 지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규명해왔

2) 에스핑-앤더슨은 자신의 연구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한국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레짐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맥락은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정무권 2007).

는데(Campbell 2012; Pierson 1996; Skocpol 1992),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국인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실업 위험에 대해서도 한국 복지국가가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리라 기대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복지 국가의 역사 차원에서도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서구 국가들은 과거의 산업 혁명 시기부터 여러 차례 급격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에 복지국가가 적응해왔던 경험이 있다(Boix 2019). 이러한 경험은 이들 서구 국가의 시민들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방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는 비교적 짧고, 과거의 산업혁명에 복지국가가 대응하여 적응한 경험도 적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설 1: 한국인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집단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남들보다 더 크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정책 선호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미래 실업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온 개인이 가진 기술이나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의 위험(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경제적 위험을 겪을 가능성과 비교하여 이미 경험한 경제적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Blekesaune 2007; Hacker et al. 2013; Margalit 2013). 특히 업무 자동화는 비교적 최근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반한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 지표 대신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거나(e.g., Gallego et al. 2022; Kurer and Hausermann 2022) 혹은 정보 제공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들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고(e.g., Jeffrey 2021; Magistro et al. 2024; Zhang 2022) 그러한 인식이 정치 및 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도 있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이 직접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적 보호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실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업 경험이 부재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의 종류의 영향이다. 소스(Soss 1999)는 대중의 복지 경험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및 보다 광범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믿음은 개별 정책별로 구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과 정책 선호 사이의 관계 역시 개별 정책별로 상이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단일 연구 내에서도 정책의 종류와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정책 선호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왔다(Busemeyer and Sahn 2022; Busemeyer and Tober 2023; Gallego et al. 2022; Kurer and Hausermann 2022). 특히 기존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제도들은 과거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모든 제도가 업무 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실업 위험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합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복지국가와 사회 정책 역시 그에 대응하여 필연적으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e.g., Esping-Andersen 1996). 하지만 여기에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개인들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제도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제도로 구분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인 경우에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업무 자동화를 비롯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실업보다는 장기적이고 잦은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단발적인 실업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목표의 정책(예: 실업 수당, 보조금 지급 등) 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들(예: 연금, 교육 등)을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설 3: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단기적인 목표의 사회적 보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V.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및 변수 설명

본 연구는 업무 자동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실업 위험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6년(N = 1,051) 및 2018년(N = 1,031) 조사 자료이다. KGSS는 2018년 자료까지 응답자들의 직업 코드를 국제표준직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2008년 버전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직업별로 측정되는 업무 자동화 실업 위험 지표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의 자료에는 직업 코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제외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6년 및 201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는 안츠 등(Arntz et al. 2016)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한 직업별 업무 자동화 가능성 지수이다. 이 지수는 직업별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0 ~ 1의 범위에서 측정하며, 값이 클수록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가 사용하는 KGSS 자료와의 적합성이 높다. 이 지표는 다른 업무 자동화 관련 지표들과 달리 국가별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보다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표가 만들어진 시기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KGSS 자료가 수집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안츠 등(Arntz et al. 2016)의 지표가 1970년대의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RTI(Autor et al. 2003)에 비하여 최근의 기술 변화 양상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Busemeyer and Sahn 2022).

한편으로 이 지표는 ISCO 2008년 버전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사용한 여타 업무 자동화 지표들³⁾과 달리 KGSS 조사 자료와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변환(crosswalk)이 필요 없고, 결측(missingness)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Busemeyer and Sahn 2022; Im et al. 2019)의 방식을 따라 ISCO 2008년 버전의 두 자릿수 직업 분류

3) 가령 RTI(Autor et al. 2003)의 경우 ISCO 1988년 버전을 사용하였고, 프레이와 오스본(Frey and Osborne 2017)의 지표는 미국의 직업 분류 체계인 SOC(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2010년 버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KGSS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ISCO 2008년 버전으로의 변환(crosswalk)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이한 분류 체계 사이에서 직업 분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KGSS 조사 자료의 1/3 ~ 1/2에 해당하는 많은 결측(missingness)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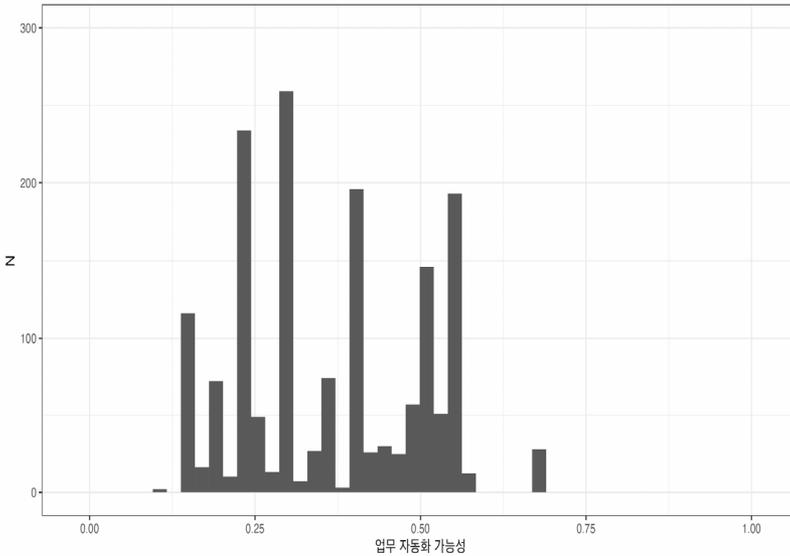
코드별(ISCO-08 2-digit level)로 평균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도출한 뒤, 이를 KGSS와 연결하였다. KGSS의 직업 코드는 응답자의 현재 혹은 (현재 경제활동이 없을 시) 가장 최근의 직업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노동 경험이 부재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직업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업 코드가 없는 436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총 1,636명의 응답자의 조사 자료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표 1>은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직업별 평균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보고하고, <그림 1>은 본 연구가 사용하는 KGSS 자료 내에서 업무 자동화 가능성 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표 1> 한국의 직업별 업무 자동화 가능성

ISCO 코드	직업	업무 자동화 가능성
01	관리직	0.096
02	전문직	0.208
11	상급 공무원, 입법부 의원	0.197
12	총무·영업 관리자	0.219
13	생산 및 전문 서비스 관리자	0.199
14	接客업·소매업·기타 서비스업 관리자	0.278
21	과학·공학 전문직	0.231
22	보건 전문직	0.244
23	교육 전문직	0.143
24	경영 관리 전문직	0.258
25	정보 통신 기술 전문직	0.179
26	법무·사회·문화 전문직	0.182
31	과학·공학 준 전문직	0.365
32	보건 준 전문직	0.426
33	사업·총무 준 전문직	0.305
34	법무·사회·문화 준 전문직	0.345
35	정보 통신 기술자	0.310

41	일반 사무원, 키보드 입력 사무원	0.410
42	고객 서비스 사무원	0.426
43	회계·재고 관리 사무원	0.401
44	기타 사무 보조원	0.293
51	대인 서비스 종사자	0.503
52	판매원	0.545
53	신변 보호 종사자	0.301
54	보안 서비스 종사자	0.308
61	시장 농업 생산 종사자	0.231
62	시장 농업·임업·수렵 생산 종사자	0.392
71	건설 관련 직업 종사자 (전기 기술자 제외)	0.409
72	금속·기계 관련 직업 종사자	0.438
73	수공품·인쇄 관련 직업 종사자	0.511
74	전기·전자기기 관련 직업 종사자	0.394
75	식품 가공·목재 가공·의류·기타 수공품 제작 관련 직업 종사자	0.471
81	정차 장비·기계 운전공	0.495
82	조립공	0.528
83	운전사, 중장비 운전자	0.535
91	청소원, 도우미	0.357
93	광업·건설업·제조업·운수업 작업자	0.559
94	식사 준비 보조자	0.578
95	거리 등의 판매원, 서비스 종사자	0.358
96	쓰레기 작업자 및 기타 단순 노동자	0.677

〈그림 1〉 KGSS 내 업무 자동화 가능성 분포



본 연구의 종속변수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업무 자동화가 실제로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들(Acemoglu and Restrepo 2020; Goyal and Anceja 2020)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이미 실체화되고 있음을 보인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 측정할 것은 응답자들의 경제적 만족도이다. 응답자들은 “귀택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만족 (1)” ~ “매우 불만족 (5)”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

4) KGSS는 매 조사마다 조사 대상 및 문항이 변경된다. 본 연구는 2개년도(2016년 및 2018년)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아래 분석에서는 부정적인(공정적인) 답변이 보다 작은(큰) 값을 가지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한다. 두 번째로 응답자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을 사용한다.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자신이 인식하는 계층을 표시하였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보다 일관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두 변수를 0 ~ 1의 범위로 변환(rescaling)하여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업무 자동화가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짐은 물론, 종속변수의 변화를 퍼센트포인트(%p)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노인연금, 교육, 실업수당—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이 정책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진다. 노인연금은 노동 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회적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소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며, 그 수혜 대상은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서 재교육(retraining)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역시 장기적인 성격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⁵⁾. 마지막으로 실업수당은 실업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 위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수혜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실업 위험이 해소된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적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보호는 이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사용하는 자료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정책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개인들의 정책 선호에 정책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5) 다만 KGSS의 경우 교육의 포괄적인 범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교육”에 대한 정책 선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응답자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각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출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였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부지출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가 ‘훨씬 더 늘려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원래의 조사에서는 “훨씬 더 늘려야 (1)” ~ “훨씬 더 줄여야 (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지만,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아래 분석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한다.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의 경험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정책 선호에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 — 와 종속변수 —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 —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실업 경험의 조절 효과(moderation effect)가 있는지 추가 분석이 시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현재 고용 상태를 바탕으로 “실업⁶⁾ (1)”과 “기타 (0)”의 더미 변수(dummy variable)를 생성한 뒤, 이를 조절 변수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과 더불어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통제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된다. 우선 자기 이익(self-interest)의 영향(박선경 2017; 박선경·이내영 2018; Meltzer and Richard 1981)을 통제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가구 소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간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0 ~ 1의 범위로 변환(rescaling)⁷⁾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정치 성향 및 정파성의 영향

6) 응답자의 직업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높을수록 현재 실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응답자의 현재 고용 상태에는 다른 여러 요인들(예: 건강, 교육, 가정 환경 변화, 노동 경쟁력 저하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현재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며, 향후 실업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이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7) 균등화 연간 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계수(coefficient)가 지나치게 작아져 다른 계수들보다 많은 소수점 자릿수를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보고 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환(rescaling)하여 사용한다.

(Korpi 2006)을 통제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정치 이념 — 매우 진보적 (1) ~ 매우 보수적 (5) — 과 거주 지역 — 영남, 호남, 기타(기준 수준) — 을 분석에 포함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나이,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이 분석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연도 — 2016년(기준 수준), 2018년 — 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 변수가 포함된다. 부록의 <표 A1>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요약 통계를 보고한다.

2. 분석 방법

우선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응답자들의 경제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한 선형 회귀분석 모형이 사용된다.

$$\text{경제상황 인식} = \alpha + \beta \text{업무 자동화 가능성} + \gamma \text{통제변수} + \varepsilon \quad (1)$$

다음으로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응답자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책 선호 변수들은 모두 5점의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이 사용된다.

$$\text{정책 선호} = \alpha + \beta \text{업무 자동화 가능성} + \gamma \text{통제변수} + \varepsilon \quad (2)$$

마지막으로 실업 상태를 조절 변수로 사용한 추가 분석이 시도된다.

$$\begin{aligned} \text{정책 선호} = & \alpha + \beta_1 \text{업무 자동화 가능성} + \beta_2 \text{실업} + \\ & \beta_3 \text{업무 자동화 가능성} \times \text{실업} + \gamma \text{통제변수} + \varepsilon \quad (3) \end{aligned}$$

V. 분석 결과

<표 2>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두 모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 인식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0 ~ 1의 범위로 변환(rescaling) 되었기 때문에 %p로 해석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의 직업에 따른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최소 수준(0)에서 최대 수준(1)으로 증가할 경우, 응답자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14.2%p(모형 1), 주관적 계층인식은 9.7%p(모형 2)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업무 자동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경제 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만족도	계층인식
	(1)	(2)
업무 자동화 가능성	-0.142** (0.055)	-0.097** (0.035)
실업	-0.137*** (0.037)	-0.039+ (0.024)
소득	0.598* (0.248)	0.660*** (0.160)
정치이념	-0.010 (0.008)	0.003 (0.005)
지역: 영남	-0.021 (0.016)	-0.011 (0.010)
지역: 호남	-0.022	-0.001

	(0.023)	(0.014)
나이	0.000	0.000
	(0.001)	(0.000)
성별: 여성	0.028 ⁺	0.016 ⁺
	(0.014)	(0.009)
교육수준	0.014 [*]	0.032 ^{***}
	(0.006)	(0.004)
혼인상태: 기혼	0.037 [*]	0.052 ^{***}
	(0.015)	(0.010)
연도: 2018년	0.007	0.026 ^{**}
	(0.014)	(0.009)
상수	0.528 ^{***}	0.291 ^{***}
	(0.058)	(0.038)
N	1,446	1,449
R ²	0.045	0.137
Adjusted R ²	0.037	0.13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최소제곱법 회귀분석(OLS regression) 결과임. 괄호 안: Standard errors.

그렇다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무 자동화에 대응하여 복지국가의 지출 증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가? <표 3>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업무 자동화 가능성은 사회적 보호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모형 1, 모형 3) 혹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즉, 앞서 가설 1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한국에서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인 기존 연구들의 발견

(Busemeyer and Sahm 2022; Im 2021; Kurer and Hausermann 2022; Sacchi et al. 2020; Thewissen and Rueda 2019)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전통적인 정치경제 이론 차원에서도 기존 연구들(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은 개인들이 노동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으로서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표 3>의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 3>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노인연금 (1)	교육 (2)	실업수당 (3)
업무 자동화 가능성	-0.254 (0.379)	-0.780* (0.376)	-0.021 (0.377)
실업	0.109 (0.250)	0.301 (0.252)	0.318 (0.245)
소득	-0.335 (1.535)	2.025 (1.952)	0.261 (1.571)
정치이념	-0.047 (0.053)	-0.023 (0.053)	-0.124* (0.053)
지역: 영남	0.190+ (0.111)	-0.002 (0.110)	0.069 (0.111)
지역: 호남	0.251 (0.156)	0.161 (0.156)	0.541*** (0.157)
나이	0.002 (0.004)	0.001 (0.004)	-0.004 (0.004)
성별: 여성	-0.251* (0.100)	-0.252* (0.099)	-0.205* (0.099)
교육수준	-0.106** (0.041)	0.011 (0.041)	-0.126** (0.041)
혼인상태: 기혼	-0.040	0.188+ (0.041)	-0.059

	(0.104)	(0.105)	(0.105)
연도: 2018년	-0.436 ^{***}	-0.025	-0.512 ^{***}
	(0.100)	(0.099)	(0.100)
N	1,444	1,441	1,441
AIC	3,640.329	3,655.307	3,762.355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결과임.

괄호 안: Standard errors.

업무 자동화는 이미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설 2에서 예측했듯이 이미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 자동화에 따른 실업 위험을 보다 크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책 선호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표 4>는 업무 자동화 가능성과 실업 상태의 교차 효과(interaction effect) — 업무 자동화 가능성 × 실업 — 가 포함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그림 2>는 <표 4>의 결과에 기반한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ies)을 보여준다.

<표 4>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노인연금(모형 1)과 교육(모형 2) 관련 정부 지출 증대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2>의 예측 확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최소 수준(0)에서 최대 수준(1)으로 상승할 경우, 실업 상태인 응답자가 노인연금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응답할 예측 확률은 각각 57%, 59.8% 상승하였다. 이는 영향의 크기 자체도 클뿐더러, 정부 지출을 훨씬 더 많이 늘릴 경우 세금 인상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실업 상태가 아닌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업무 자동화 가능성의 증가가 두 정책

지지에 있어 큰 상승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반면, 실업 상태의 조절 효과를 고려하여도 업무 자동화 가능성은 실업수당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표 4> 모형 3). <그림 2>를 보아도 다른 두 정책과 달리 업무 자동화 가능성의 변화가 고용 상태별로 구분된 응답자들의 실업수당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즉, 가설 3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실업 상태를 추가로 고려하여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들(노인연금, 교육)에 한정되며, 단기적인 목표의 정책(실업수당)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실업 상태의 조절 효과

	노인연금 (1)	교육 (2)	실업수당 (3)
업무 자동화 가능성	-0.412 (0.385)	-0.937* (0.382)	-0.048 (0.384)
실업	-1.810* (0.881)	-1.615+ (0.864)	0.009 (0.845)
업무 자동화 가능성 × 실업	4.443* (1.957)	4.444* (1.924)	0.721 (1.890)
소득	-0.391 (1.539)	1.946 (1.937)	0.249 (1.573)
정치이념	-0.048 (0.053)	-0.024 (0.053)	-0.124* (0.053)
지역: 영남	0.203+ (0.111)	0.009 (0.110)	0.071 (0.111)
지역: 호남	0.261+ (0.156)	0.167 (0.156)	0.542*** (0.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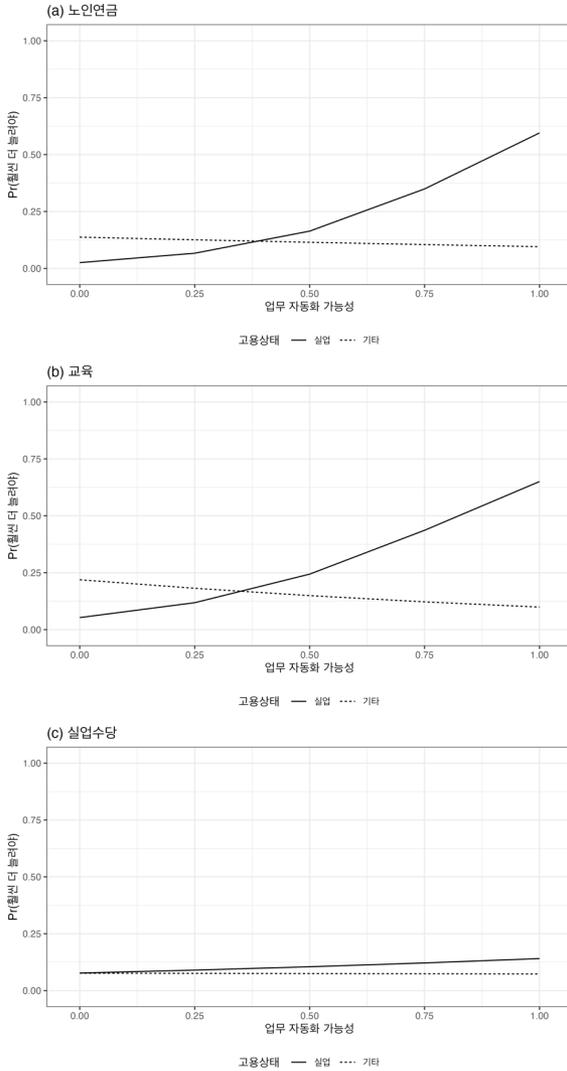
나이	0.002 (0.004)	0.002 (0.004)	-0.004 (0.004)
성별: 여성	-0.252* (0.100)	-0.253* (0.099)	-0.205* (0.099)
교육수준	-0.106** (0.041)	0.011 (0.041)	-0.126** (0.041)
혼인상태: 기혼	-0.034 (0.104)	0.194+ (0.105)	-0.059 (0.105)
연도: 2018년	-0.429*** (0.100)	-0.019 (0.099)	-0.510*** (0.100)
N	1,444	1,441	1,441
AIC	3,637.169	3,652.035	3,764.21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결과임.

괄호 안: Standard errors.

<그림 2> 고용 상태별 업무 자동화 실업 위험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주: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변수들은 평균(연속형 변수) 혹은 최빈값(범주형 변수)에 고정한 뒤 산출함. 전체 예측확률은 부록의 <표 A2>에서 확인할 수 있음.

VI. 결론 및 토론

본 연구의 결과는 업무 자동화가 가져오는 노동 시장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새로운 실업 위험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한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복잡적이다.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은 사회적 보호 관련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들에 한하여 유의미하게 정책 지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실업 상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에도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실업수당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세 개의 정책 가운데 실업수당이 실업 위험에 가장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쿠어러와 하우스만(Kurer and Hausermann 2022)의 연구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한국과 유럽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40일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수령 가능 기간은 훨씬 길어서 벨기에의 경우 최대 48개월, 프랑스의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OECD 2021).

8)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된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과 서구 국가 사이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연금의 경우, 한국의 연금 제도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비스마르크 식으로 계층화되어 있어 직업별 혜택의 규모도 다르다. 다만 비교적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으로 그 수혜 대상이 보편적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성격의 사회적 보호 정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실업수당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으로 분류되는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목표의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단기적인 목표의 실업수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유럽에서는 실업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실업수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는 같은 성격의 정책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며, 서구 국가를 벗어나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이 연구는 정치경제 이론 차원에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학자들은 시민들이 위험(risk)에 대응하는 일종의 보험(insurance)의 성격으로 복지국가 및 사회 정책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해왔지만(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 이 연구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일부 집단과 정책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과 대중의 복지 태도 사이의 연결고리가 전통적인 정치경제 이론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제도적 맥락, 경제적 상황, 정책 특성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과는 현실 정치 차원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현재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기술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국가 및 사회 정책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 확장에 있어서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기보다는 기술 변화의 흐름과 그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수완·안상훈·김영미. 2018.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4권 4호, 1-31.
- 박선경. 2017.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현대정치연구』 10권 1호, 5-29.
- 박선경·이내영. 2018.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11권 3호, 5-32.
- 정무권. 2007.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14권 1호, 256-307.
- Acemoglu, Daron, David Autor, Jonathon Hazell, and Pascual Restrepo.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bs: Evidence from Online Vacanc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S1): S293-340.
- Acemoglu, Daron, and Pascual Restrepo. 2020. “Robots and Jobs: Evidence from US Labor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6): 2188-2244.
- Arntz, Melanie, Terry Gregory, and Ulrich Zierahn.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189.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Publishing.
- Autor, David H., and David Dorn. 2013.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1553-97.
- Autor, David H., Frank Levy, and Richard J. Murnane.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279-1333.
- Blekesaune, Morten.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Boix, Carles. 2019. *Democratic Capitalism at the Crossroads: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semeyer, Marius R., and Alexander H. J. Sahm. 2022. “Social Investment, Redistribution or Basic Income?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utomation Risk and Welfare State Attitude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51(4): 751–70.
- Busemeyer, Marius R., and Tobias Tober. 2023. “Dealing with Technological Change: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Institutional Contex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6(7): 968–99.
- Campbell, Andrea Louise. 2012. “Policy Makes Mass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5(1): 333–51.
- Cusack, Thomas, Torben Iversen, and Philipp Rehm. 2006. “Risks at Work: The Demand and Supply Sides of Government Redistribut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3): 365–89.
- Dauth, Wolfgang, Sebastian Findeisen, Jens Suedekum, and Nicole Woessner. 2021. “The Adjustment of Labor Markets to Robo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9(6): 3104–53.
- Dermont, Clau, and David Weisstanner. 2020.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Basic Income as a Response to Technological Change?” *Political Research Exchange* 2(1): 1757387.
- Douglas, Mary, and Aaron Wildavsky.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Univ of California Press.
- Edlund, Jonas.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70.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Sage.
- Ford, Martin. 2015. *Rise of the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Basic Books.
-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January):254-80.
- Gallego, Aina, Alexander Kuo, Dulce Manzano, and José Fernández-Albertos. 2022. “Technological Risk and Policy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5(1): 60-92.
- Gallego, Aina, and Thomas Kurer. 2022. “Automation,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Implications for Politic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5:22.
- Goos, Maarten, Alan Manning, and Anna Salomons. 2009. “Job Polarization in Europ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58-63.
- .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 Goyal, Arjun, and Ranjan Aneja.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come Inequality: Do Technological Changes and Worker’s Position Matter?” *Journal of Public Affairs* 20(4): e2326.
- Hacker, Jacob S., Philipp Rehm, and Mark Schlesinger. 2013. “The Insecure American: Economic Experiences, Financial Worries, and Policy Attitudes.” *Perspectives on Politics* 11(1): 23-49.
- Im, Zhen Jie. 2021. “Automation Risk and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How Does the Threat of Unemployment Affect Demand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y Suppor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7(1): 76-91.

- Im, Zhen Jie, Nonna Mayer, Bruno Palier, and Jan Rovny. 2019. "The 'Losers of Automation': A Reservoir of Votes for the Radical Right?" *Research & Politics* 6(1): 2053168018822395.
- Iversen, Torben, and Davi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93.
- Jakobsen, Tor Georg. 2011.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Expenditure: Do Regimes Shape Public Opi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3): 323-40.
- Jeffrey, Karen. 2021.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How Rhetoric Shapes the Response in Policy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92(December):417-33.
- Korpi, Walter. 2006. "Power Resources and Employer-Centered Approaches in Explanations of Welfare Stat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Protagonists, Consenters, and Antagonists." *World Politics* 58(2): 167-206.
- Kurer, Thomas, and Bruno Palier. 2019. "Shrinking and Shouting: The Political Revolt of the Declining Middle in Times of Employment Polarization." *Research & Politics* 6(1): 2053168019831164.
- Kurer, Thomas, and Silja Hausermann. 2022. "Automation Risk,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Digit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139-56.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en, Christian Albrekt. 2008.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145-68.
- Magistro, Beatrice, Peter Loewen, Bart Bonikowski, Sophie Borwein, and Blake Lee-Whiting. 2024. "Attitudes toward Automation and the Demand for Policies Addressing Job Loss: The Effects of Information about Trade-Off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February, 1-16. <https://doi.org/10.1017/psrm.2024.1>.
- Manyika, James, Susan Lund, Michael Chui, Jacques Bughin, Lora Woetzel, Parul

- Batra, Ryan Ko, and Saurabh Sanghvi. 2017. "What the Future of Work Will Mean for Jobs, Skills, and Wages: Jobs Lost, Jobs Gained."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jobs-lost-jobs-gained-what-the-future-of-work-will-mean-for-jobs-skills-and-wages>.
- Margalit, Yotam. 2013. "Explaining Social Policy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01): 80-103.
- Marr, Bernard. 2023. "How Generative AI Will Change All Of Our Jobs In 2024." *Forbes*, December 27, 2023, sec. Enterprise Tech.
-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27.
- Pierson, Paul.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143-79.
- Rehm, Philip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 (7): 855-81.
- Sacchi, Stefano, Dario Guarascio, and Silvia Vannutelli. 2020. "Risk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Support for Redistributive Policies." In *The European Social Model under Pressure*, 277-95. Springer.
- Skocpol, Theda.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oss, Joe. 1999. "Lessons of Welfare: Policy Design, Political Learning, and Political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63-80.
- Svallfors, Stefan.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Thewissen, Stefan, and David Rueda. 2019. "Automation and the Welfare State: Technological Change as a Determinant of Redistribution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2(2): 171-208.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7. "Frontier Issues: The Impact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on Labour Markets and Income Distribution.”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publication/frontier-issues-artificial-intelligence-and-other-technologies-will-define-the-future-of-jobs-and-incomes/>.

Weisstanner, David. 2023. “Technological Change and Labour Market Policy Preferences.” In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in Advanced Democracies*, 132–47. Edward Elgar Publishing.

Zhang, Baobao. 2022. “No Rage Against the Machines: Threat of Automation Does Not Change Policy Preferences.” In *Proceedings of the 2022 AAAI/ACM Conference on AI, Ethics, and Society*, 856–66. AIES '22. New York, NY, USA: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business%20functions/mckinsey%20digital/our%20insights/the%20economic%20potential%20of%20generative%20ai%20the%20next%20productivity%20frontier/the-economic-potential-of-generative-ai-the-next-productivity-frontier.pdf> (검색일: 2024.08.17.)

OECD. 201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2019.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social-expenditure-database-socx.html> (검색일: 2024.08.17.)

———. 2021. “Benefits in unemployment, share of previous income.” 2021.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benefits-in-unemployment-share-of-previous-income.html> (검색일: 2024.08.17.)

투고일: 2024.06.22.	심사일: 2024.07.22.	게재확정일: 2024.07.23.
------------------	------------------	--------------------

부록

〈표 A1〉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요약 통계

종류	변수	범주/값	2016년 ^a		2018년 ^b	
종속변수	노인연금	훨씬 더 줄여야	15	1.40%	22	2.10%
		다소 더 줄여야	76	7.20%	85	8.20%
		지금만큼 그대로	377	35.90%	453	43.90%
		다소 더 늘려야	416	39.60%	345	33.50%
		훨씬 더 늘려야	158	15.00%	119	11.50%
		선택할 수 없음	9	0.90%	7	0.70%
		교육	훨씬 더 줄여야	11	1.00%	9
	다소 더 줄여야		65	6.20%	61	5.90%
	지금만큼 그대로		371	35.30%	387	37.50%
	다소 더 늘려야		406	38.60%	360	34.90%
	훨씬 더 늘려야		185	17.60%	201	19.50%
	선택할 수 없음		13	1.20%	13	1.30%
	실업수당		훨씬 더 줄여야	39	3.70%	50
		다소 더 줄여야	93	8.80%	139	13.50%
지금만큼 그대로		449	42.70%	482	46.80%	
다소 더 늘려야		357	34.00%	285	27.60%	

		늘려야 훨씬 더 늘려야	101	9.60%	62	6.00%
		선택할 수 없음	12	1.10%	13	1.30%
독립변수	업무 자동화 가능성	최소, 최대	0,096	0,677	0,096	0,677
		평균, 표준편차	0,358	0,140	0,368	0,134
조절변수	고용상태	기타	1009	96.00%	980	95.10%
		실업	42	4.00%	51	4.90%
통제변수	지역	기타	615	58.50%	588	57.00%
		영남	298	28.40%	308	29.90%
		호남	138	13.10%	135	13.10%
	성별	남성	475	45.20%	468	45.40%
		여성	576	54.80%	563	54.60%
	혼인상태	기타	475	45.20%	468	45.40%
		기혼	576	54.80%	563	54.60%
	소득 (단위: 만원)	최소, 최대	0	396000	0	138564.1
		평균, 표준편차	3841.4	13460.1	3500.1	5611
	정치이념	최소, 최대	1	5	1	5
		평균, 표준편차	3.0	0.9	2.8	1.0
	나이	최소, 최대	18	99	18	97
		평균, 표준편차	49.6	18.6	51.0	18.9
	교육수준	최소, 최대	0	7	0	7
		평균, 표준편차	3.5	1.7	3.5	1.7
합계			1051	100%	1031	100%

^{a, b}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N과 %를 의미함.

〈표 A2〉 고용 상태별 업무 자동화 실업 위험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예측 확률

정책	업무 자동화 가능성	고용 상태	훨씬 더 줄여야	다소 더 줄여야	지금만큼 그대로	다소 더 늘려야	훨씬 더 늘려야
노인연금	0.00	실업	0.075	0.279	0.491	0.129	0.025
	0.25	실업	0.029	0.138	0.500	0.267	0.067
	0.50	실업	0.011	0.057	0.354	0.414	0.164
	0.75	실업	0.004	0.022	0.184	0.440	0.349
	1.00	실업	0.001	0.008	0.079	0.316	0.595
	0.00	기타	0.013	0.069	0.390	0.390	0.137
	0.25	기타	0.015	0.076	0.408	0.376	0.126
	0.50	기타	0.016	0.083	0.425	0.361	0.115
	0.75	기타	0.018	0.091	0.441	0.345	0.105
	1.00	기타	0.020	0.100	0.456	0.329	0.095
교육	0.00	실업	0.033	0.199	0.523	0.192	0.053
	0.25	실업	0.014	0.098	0.450	0.320	0.118
	0.50	실업	0.006	0.044	0.298	0.408	0.244
	0.75	실업	0.002	0.019	0.160	0.382	0.437
	1.00	실업	0.001	0.008	0.076	0.265	0.651
	0.00	기타	0.007	0.050	0.323	0.401	0.219
	0.25	기타	0.009	0.062	0.366	0.382	0.182
	0.50	기타	0.011	0.077	0.407	0.356	0.149
	0.75	기타	0.014	0.095	0.445	0.325	0.122
	1.00	기타	0.017	0.116	0.477	0.291	0.099
실업수당	0.00	실업	0.037	0.117	0.452	0.317	0.077
	0.25	실업	0.032	0.102	0.431	0.345	0.090
	0.50	실업	0.027	0.088	0.408	0.372	0.105

0.75	실업	0.023	0.076	0.382	0.397	0.122
1.00	실업	0.019	0.066	0.354	0.420	0.141
0.00	기타	0.037	0.118	0.453	0.316	0.076
0.25	기타	0.038	0.119	0.454	0.314	0.076
0.50	기타	0.038	0.120	0.455	0.312	0.075
0.75	기타	0.039	0.121	0.456	0.310	0.074
1.00	기타	0.039	0.122	0.458	0.308	0.073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and Support for Social Protection: The Case of South Korea

Kim, Taesim | Sogang University

Task automation, one of the main features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is expected to cause a substantial reduction in 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tried to identify whether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fuels citizens' support for social protection. I criticize that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 on Western countries and suggest the necessity to examine the effect of task automation on public attitudes toward social protectio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non-Western countries. Accordingly, I focus on South Korea in this study, us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6 and 2018 data.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has already negatively impacted Koreans' economic circumstances. However, the unemployment risk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social protection.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only among the currently unemploye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risk induced by task automation leads to stronger support for long-term policies. Yet no significant effect is detected regarding short-term policies.

Key Words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sk Automation, Technological Change, Social Protection, Welfare Attitudes

정치이념과 친환경 태도: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이서영 | 대전대학교**

박영득 | 충남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인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로 인한 환경재난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확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시민들의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이 다수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로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단일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정의된 정치이념과 경제에 대한 태도는 친환경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고,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정치이념, 친환경 태도, 기후변화, 정치이념의 다차원성, 대북인식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주저자, 이서영(seralee135@gmail.com)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강사

*** 교신저자, 박영득(youngdeuk@g.cnu.ac.kr)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I. 서론

전 세계에서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폭우, 폭설,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발표한 「2023년 전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5°C 상승하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스위스 빙하는 2021-2022년 2년 동안 10%의 질량이 손실되었다.¹⁾ 캐나다, 하와이,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과 그로인한 대규모의 대기오염이 발생했고, 지중해 등지와 스리랑카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²⁾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재난을 일으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국제 NGO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후 난민”이 3,18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로 인해 발생한 난민의 수보다 많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김기봉 2023).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회복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빈곤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박병도 2013, 62)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자명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았고(김정환·이윤식 2024), 한국은행은 국내 기온이 1°C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0.4-0.5%p 높아지고 전체 소비자물가가 동반 상승한

1)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24.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Geneva: WMO.

2) 이선주. 2024. “기후재난의 시대: 대응과 회복을 위한 그린피스 활동.” 그린피스 홈페이지.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698/blog-ce-act-now-for-climate-disaster/> (2024. 06. 14).

다는 분석을 발표했다(신호경 2024).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대안모색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3)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고,³⁾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이익집단들의 합의와 조정을 이루어내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은 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외교부 2023, 6).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과 정당일체감 또는 정치이념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에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친환경정책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Dabidovic et al. 2019; Dupont and Bateman 201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et al. 2016; Neumayer 2004). 환경문제의 정치화 경향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의 정치화가 구체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들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데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에 주목

3) IPCC. 2023.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Chapter 11: Weather and Climate Extreme Events in a Changing Climate.” Geneva: IPCC. 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cooperation/ipcc.php>(검색일: 2024/6/23).

하여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어떠한 부분이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 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 난민을 양산하고 지구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정치학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정치학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친환경 태도의 결정요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행동”에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적 행동과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집합적 행동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등이 개인적 환경행동이고, 환경운동단체 가입 및 기부금 납입, 환경보호운동 참여, 환경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는 녹색당에 대한 투표, 환경 관련 세금 납부 등은 집합적 환경행동이다. 집합적 환경행동은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가와 기업이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친환경 태도(environmental concern)”란, 개인이 환경문제를 인지하는 정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정도 혹은 그 문제해결에 개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Dunlap and Jones 2002, 485). 친환경행동과 친환경 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연구는 친환경 태도가 외적인 친환경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 태도가 친환경행동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보기도 한다.⁴⁾

4) 친환경 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왔다. 첫째, 특정 국가 국민들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태도 연구의 주도권을 가진 사회학에서는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해왔고, 행정학에서는 환경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금을 지불할 의사(willing to pay: WT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손익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국가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친환경 태도를 갖게 되는 심리적 요인과 신념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계에서 친환경 태도의 사회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은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시기별, 국가별로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설명력이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편적 이론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시간적·공간적 모수(parameter)를 고려하여 사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한 국가 안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높은 가계가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더 크고, 국민총생산(GNP)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의 국민들의 환경세금 납부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극단적 날씨를 경험하거나, 자

의 친환경 태도의 정도에 관한 연구, 둘째, 친환경적 태도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연구, 셋째, 서로 다른 국가 국민들이 가지는 친환경 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연구, 넷째,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연재해, 국제기후정상회의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했을 때 환경 친화적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해, 평가하는 능력이 클수록 정책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다(문승민 2022, 204).

심리적 측면에서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기후변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믿음, 둘째, 과학적 합의에 대한 인식, 셋째, 기후변화의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 등이다. 여러 심리학적 요인들 중, 기후변화에 관한 염려(worry)가 친환경적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Bouman et al. 2020, 7; Lee et al. 2024, 11). 이 연구결과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교육을 통해 획득한 환경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면, 기후변화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위협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반에 관하여,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전쟁을 겪지 않고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탈물질주의 세대’가 환경, 인권 등의 탈이념적 가치와 삶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한다 (Inglehart 1977, 1997).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보다 환경친화적일 가능성이 크다.⁵⁾ 반면,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환경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계층이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빈곤층과 노동계급은 오염된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박병도 2013, 62). 즉, 사회구조적으로 빈곤층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고, 빈곤층, 노동계층, 유색인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오히려 환경친화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Dunlap and York 2008,

5) 젊은 세대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원칙상 환경친화적이지만, 생애주기의 특성상,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새로운 가족 형성과 미래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vanova and Tranter 2008, 172).

551). 한편, 친환경 태도가 탈물질주의적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2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전국가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서도 환경친화적 태도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고(Mostafa 2013, 396), 친환경 태도를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Brechin and Kempton 1994, 260).

한편,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환경의 질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보수적인 사람은 경제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둔다(Pierce and Lovrich 1980, 280; Wen et al. 2016, 244). 그리고 진보주의자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개혁을 추구하지만 보수주의자는 전통적·위계적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 유권자들이 보수적 유권자들보다 친환경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환경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Dupont and Bateman 201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et al. 2016).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기업에 대한 환경세금 부과, 무역에 관한 환경오염 승인절차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 적극적이다(Dabidovic et al. 2019; Neumayer 2004). 그리고 정치이념에 따라 대중이 양 진영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규범적 판단기준을 갖게 되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ie and Choma 2018, 248). 이에 더하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극단적 날씨, 자연재해, 국제기후정상회의와 같은 이벤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Borick and Rabe 2010, 797). 또한 친환경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진보주의자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억제하고 친환경 태도의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기후변화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

는 것이다(Böhmelt and Zhang 2024; Kenny 2020).

이에 더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이 친환경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이때 정치적 맥락이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성향, 정당의 역할,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정부의 질적 수준 등이다. 미국인의 친환경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 국민들의 환경세금 지불의사가 감소하는데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연구가 있다(Johnson and Schwadel 2019, 931). 또한 정부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환경친화적 태도를 보였다(Davidovic et al. 2019, 691). 같은 맥락에서 김재완과 그 동료들(2019)은 한국에서 내국인집단이 비내국인집단보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이유 중 하나를 내국인집단이 비내국인집단보다 한국정부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Kim et al. 2019, 110).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특정 정당의 환경정책을 분석하거나, 녹색운동의 역사와 제도화 과정을 연구하거나, 녹색당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있지만(민병기 2017; 장혜영 2014; 정하운·신두철 2012), 유권자의 친환경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정수현 2015). 기존연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변인을 추가하여 한국 국민의 친환경 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 가설

환경문제는 인류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이며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가 큰 위협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비정치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결성 초기에 오세훈, 이학재 등 보수계 정치인들도 활동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환경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에는 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은 편이다(Dupon and Bateman 2012; Falkenberg et al. 2022; Marquart-Pyatt 2008; McCright and Dunlap 2011; McCright et al. 2016).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정치이념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정치이념을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 축약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념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정치이념의 다차원성은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어떤 차원이 친환경 태도와 친환경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친환경 태도가 낮고 친환경행동을 할 의향이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낮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어떠한 내용 때문인가? 경제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적인 사람이 환경정책에 반대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정치이념을 진보-보수로 구분되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양한 이슈차원이 공존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이념의 어떠한 차원이 친환경정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하 WTP)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정치이념은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지를 인도한다. 정치이념은 인간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내적인 체계성을 갖춘 진술들의 결합체이다(Hinich and Munger 1994). 사람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향을 그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어떤 수단을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할 것인지, 어떤 수단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신념을 갖게 된다. 환경을 위해 발전을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

들에 무엇이라 답할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념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정치이념은 보수-진보라고 표현하는 단일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는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소수파의 발언권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협소하게 인정할 것인지 등이 논쟁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할 것인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이민 확대, 동성혼 합법화 등 사회적 다양성 확대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 대립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즉 보수적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이슈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일차원으로 요약된 보수-진보의 이념구분에서 보수적인 유권자 가운데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적 영역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Zaller 1992). 요컨대 추상적인 차원의 보수적 이념을 구체적인 이슈로 분할한다면 단일차원으로 축약된 정치 이념상으로는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념적 대립은 대개 기업의 자유확대와 정부의 규제 확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인간의 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다(Crowley 2000).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동의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산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업에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도입을 강제하거나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데 제

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에 찬성하기를 꺼릴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의 인하를 지지하고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에 비해 환경친화적 태도가 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1: 경제적 차원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응답자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응답자에 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약할 것이다.

이념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보통 경제, 사회문화, 정치가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이슈영역이라고 본다(Albright 2010; Klar 2014).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이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같이(Hooghe and Marks 2017; Kriesi et al. 2006) 각 국가별로 특수한 정치적 균열을 자아내는 이슈영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정치의 이념적 균열구도에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냉전질서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반공주의는 한국의 정치구조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주의가 구성되는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홍태영 2019; 2020). 분단이 만들어낸 냉전적 구조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협소하게 만들었다(이정길 2013; 최장집 2004). 이러한 정치적 구조 속에서 진보적 문제의식과 대안이 한국 사회에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한국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 선거에서의 투표선택 등 정치적 인식 및 행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경미 외 2012; 류재성 2019; 조성대 2008; 최효노 2018). 특히 조성대(2008)는 북한에 관련된 태도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주요한 정치적 경쟁과 갈등구조를 조형하는 갈등 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북한에 관한 태도는 한국정치의 갈등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갈등 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반공주의는 보수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홍태영 2020) 반공주의와 연결된 강한 보수정파적 태도는 각종 이슈를 진영리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Bolsen et al. 2014). 환경의제가 진보성향 정당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의제로 인식될 경우,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환경의제를 순수히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도구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의 정치화 과정에서 환경운동은 진보적 의제와 결합했다. 2000년 총선에서 주요 환경단체들은 진보성향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자리, 복지, 생태, 평화를 중심에 둔 운동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단체는 2010년 지방선거를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4대강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로 규정하고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탈핵, 평화, 인권 등 환경이라는 고유 의제 외에도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웠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성된 녹색정치포럼도 소수자인권 보호 등의 진보적 의제와 함께 환경을 정치의제화 하였다(정하윤·신두철 2012).

최근 22대 총선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은 79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및 소수자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웠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들어 더 뚜렷하게 정치화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정당들은 탈원전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정파간 논쟁이 붙었다(오창우·송형석, 2020).

환경이라는 쟁점이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의 환경정책, 환경단체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과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에 관련된 정책이 주로 진보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나 정당에 의해서 제기되어 환경이 진보의 의제로 인식될 경우, 진보 진영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환경의제를 자신이 반감을 가지는 진보 진영의 의제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약할 것이다.

Ⅲ. 데이터 분석

1)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불할 의향, 즉 환경친화적 행동 의향에 정치이념의 여러 차원 중 어떠한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에 관한 폭넓은 핵심 문항 세트를 가지고 있는 조사이며 2021년 조사에는 본 연구의 핵심 관심변인인 환경친화적 행동 의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는 데이터셋이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을 질문했다. 이 문항들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는 경제와 북한 이슈에 대한 태도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이분형(binary)으로 측정되었으며 경제는 국가의 기업 경제활동 간섭에 찬성/반대 하는지를, 북한에 관련해서는 북한은 협력대상인지 위협대상인지의 인식 여부로 측정됐다. 이 변수들은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응답을 1로, 진보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응답을 0으로 지정하였다.

환경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심변인 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Ivanova and Tranter 2008; Neumayer 2004)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Bouman et al. 2020, 7; Lee et al. 2024, 11)이 포함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세계의 기후는 변화하지 않았다(기후변화 사실 부정)’, ‘세계의 기후는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세계의 기후는 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세계의 기후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하였다’로 측정된 변수이다. 이를 기후변화 사실 및 기후변화 원인에서 인간의 활동을 부정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이분형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가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순위척도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분석방법으로는 순위로

지스틱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종속변수에 대하여 통제변수들만이 포함된 기본 모형(baseline model)과 본 연구가 제시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주모형(main model)을 각각 핵심 독립변수인 이슈태도의 영향력과 기본 모형과 주모형의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이슈태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을 때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데이터 분석

아래 <표 1>은 본 연구의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및 세금 지불 의향의 분포를 살펴보면 약 두 변수 모두에서 약 33% 가량이 중립적인 응답을 선택했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응답은 약 45%,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응답은 약 38% 가량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응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45.68%,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54.32%로 나타났고 경제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5.7%, 기업활동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54.3%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수(%)
비용 지불 의향	매우 의향이 있다	47(3.91)
	약간 의향이 있다	499(41.48)
	있지도, 없지도 않다	404(33.58)
	별로 의향이 없다	213(17.71)
	전혀 의향이 없다	40(3.33)
세금 지불 의향	매우 의향이 있다	26(2.17)

	약간 의향이 있다	431(35.95)
	있지도, 없지도 않다	396(33.03)
	별로 의향이 없다	271(22.60)
	전혀 의향이 없다	75(6.26)
북한에 대한 태도	위협대상	523(45.68)
	협력대상	622(54.32)
경제에 대한 태도	기업활동 개입 찬성	515(45.70)
	기업활동 개입 반대	612(54.30)

본 연구의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두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각 2가지의 모형을 분석했다. 아래 <표 2>에 제시된 모델1과 모델3은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이슈태도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들만을 포함한 기본 모형이고, 모델2와 모델4가 핵심 설명변수가 포함된 본 모형들이다. 기본 모형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정치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더 많이 걱정할수록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의향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세금납부 의향에 대한 모델에서 이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결과를 통해보면 최소한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3과 모델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 중 정치이념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한 가운데,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환경친화적 태도의 결정요인

		비용 지불 의향		세금 지불 의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006 (0.005)	0.005 (0.005)	0.008 (0.005)	0.008 (0.005)
성별(여성)		-0.062 (0.118)	-0.058 (0.122)	-0.066 (0.116)	-0.050 (0.120)
소득		0.037** (0.013)	0.035** (0.013)	0.038** (0.012)	0.036** (0.013)
교육수준		0.263*** (0.052)	0.269*** (0.054)	0.238*** (0.051)	0.233*** (0.053)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0.792*** (0.079)	0.782*** (0.082)	0.643*** (0.076)	0.637*** (0.079)
기후변화에 의한 한국 영향 인식		-0.031 (0.027)	-0.030 (0.028)	0.005 (0.027)	0.010 (0.028)
기후변화 긍정		-0.203 (0.158)	-0.254 (0.164)	-0.070 (0.155)	-0.120 (0.160)
정치이념(보수)		-0.126* (0.063)	-0.105 (0.066)	-0.095 (0.062)	-0.068 (0.065)
이슈 태도	경제 (기업활동자유)		0.075 (0.120)		-0.204 (0.119)
	북한 (위협대상)		-0.367** (0.122)		-0.294* (0.120)
관측수		1,037	1012	1,033	1,009

* $p < 0.05$, ** $p < 0.01$, *** $p < 0.001$

표기된 값은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은 계수의 표준오차임. 절삭점(cut point)는 생략하였음.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비용 및 세금 지불 의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의 값에 따른 예측확률을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중요한 관심사에서 벗어난 중립적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 해당하는 예측확률만을 살펴본다. 아래 <표 3>은 북한에 대

한 태도의 값에 따라 두 종속변수의 각 수준에 해당할 확률을 보여준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 부정적인 비용 및 세금 지불의향(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의향이 없다)은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예측확률을 보이고, 긍정적인 지불의향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지불의향을 보인다. 이는 계수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별로 의향이 없다’와 ‘약간 의향이 있다’는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5%p 가량으로 실질적인 효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3〉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른 종속변수의 예측확률

	비용 지불 의향				세금 지불 의향			
	전혀	별로	약간	매우	전혀	별로	약간	매우
북한은 위협대상	3.7%	19.6%	39.9%	3.3%	5.9%	24.3%	35.1%	1.9%
북한은 지원대상	2.6%	15.3%	46.5%	4.7%	4.5%	20.4%	40.9%	2.6%

분석결과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비용 지불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진보와 보수의 축으로 측정된 정치이념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이슈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 투입되면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로 투입된 북한에 대한 태도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모형에서 나타났던 정치이념의 영향력은 이슈태도 변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외견상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정치이념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보/보수이념 자체나 경제영역에서의 진보적, 또는 보수적 태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비용 및 세금 지불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박경미와 그의 동료들(2012)도 북한에 대한 태도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통해 이념을 인식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는 환경문제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 분석 또한 유사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의 다양한 결정요인 가운데 정치이념에 주목하였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친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도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적 정치이념의 어떠한 내용이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낮추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치이념을 경제적 차원과,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이슈차원에 대한 입장이 친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이슈차원이 동시에 고려될 경우 정치이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환경문제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국정치의 진영대립을 규정하는 갈등축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조성대 2008)는 것을 고려해보면, 부정적 친환경 태도는 보수주의적 경제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진영대립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정치이념이 중요하다고 보는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순히 보수적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험분석의 결과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있거나, 환경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보다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이들에 대한

반감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자면, 환경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만큼이나, 환경운동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환경문제의 정치화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상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 수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건강과 환경을 핵심모듈로 하는 조사로서 본 연구에서 중요한 환경에 관한 다양한 태도들을 측정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치적 인식이나 정치행태에 관한 문항이 불충분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와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각각 하나의 측정문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다수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타당성을 높이는 어려웠다. 향후 환경에 관한 태도와 정치 관련 문항을 포괄하는 독자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류재성. 2019. “정치이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유권자는 왜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정보연구』 22권 2호, 91-120.
- 문승민. 20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정책 리더러 시와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31권 4호, 179-213.
- 민병기. 2017. “사회운동 기반의 정당 등장과 정치적 기회구조: 민주노동당과 녹색당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51집 1호, 207-231.
-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27-150.
- 박병도. 2013.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환경법연구』 35권 2호, 61-94.
- 오창우, 송형석. 2020. “‘환경’이슈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정권별 ‘원전’의 정책적 활용에 따른 의미연결망의 차이.” 『한국사회과학연구』 39권 2호, 83-125.
- 이정길. 2013. “남북 분단이 한국의 체제 변동기에 미친 영향: 1961년, 1980년, 1987년의 담론특성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321-339.
- 장혜영. 2014. “1972년-2012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환경정책 정강의 비교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575-603.
- 정수현. 2015.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당일체감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의정연구』 21권 2호, 201-231.
- 정하윤·신두철. 2012.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녹색운동과 녹색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4호, 101-128.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69-198.
- 최장집. 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 최효노. 2018. “한국 유권자의 이슈태도: 경제 및 복지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미분화와 다차원성.” 『한국정당학회보』 17권 4호, 121-150.
- 홍태영. 2019.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문화와 정치』 6권 2호, 101-138.

홍태영. 2020.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보수세력 및 보수주의의 구성: 보수혁명으로서의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54집 1호, 111-135.

Albright, Jeremy J. 201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arty Competition.” *Party Politics* 16(6): 699-719.

Böhmelt, Tobias and Muzhou Zhang. 2024. “Suppor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 Good and Bad Economic Circumstances.” *Environmental Politics* 33(2): 302-320.

Bolsen, Toby, James J. Druckman, Fay Lomax Cook. 2014. “The Influence of Partisan Motivated Reasoning on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36: 235-262.

Borick, Christopher and Barry Rabe. 2010. “A Reason to Believe: Examin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 Views on Global Warming.” *Social Science Quarterly* 91(3): 777-800.

Bouman, Thijs, Mark Verschoor, Casper Albers, Gisela Böhm, Stephen Fisher, Wouter Poortinga, Lorraine Whitmarsh and Linda Steg. 2020. “When Worry about Climate Change Leads to Climate Action: How Values, Worry and Personal Responsibility Relate to Various Climate Act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62: 1-11.

Brechin, Steven and Willett Kempton. 1994. “Global Environmentalism: A Challenge to the Postmaterialism Thesi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245-269.

Crowley, Thomas J. 2000. “Causes of Climate Change Over the Past 1000 Years.” *Science* 289: 270-277.

Currie, Shannon and Becky Choma. 2018. “Sociopolitical Ideology and the Morality of Green Behaviour.” *Environmental Politics* 27(2): 247-266.

Davidovic, Dragana, Niklas Haring and Sverker Jagers. 2019. “The Contingent Effects of Environmental Concern and Ideology: Institutional Context and People’s Willingness to Pay Environmental Taxes.” *Environmental Politics* 29(4): 674-696.

- Dunlap, Riley and Robert Jones. 2002.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edited by Riley Dunlap and William Michelson, 482-524.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Dunlap, Riley and Richard York 2008. "The Globalization of Environmental Concern and The Limits of The Postmaterialist Values Explanation: Evidence from Four Multinational Survey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9(3): 529-563.
- Dupont, Diane and Ian Bateman. 2012. "Political Affiliation and Willingness to Pay: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Benefits and Means of Provision." *Ecological Economics* 75: 43-51.
- Falkenberg, Max, Alessandro Galeazzi, Maddalena Torricelli, Nicollo Di Marco, Francesca Larosa, Madalina Sas, Amin Mekacher, Warren Pearce, Fabiana Zollo, Walter Quattrociocchi, and Andrea Baronchelli. 2022. "Growing Polarization around Climate Change on Social Media." *Nature Climate Change*, 12. 1114-1121.
- Hinich, Melvin J. and Michael C. Munger.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ooghe, Lisbet and Gary Marks. 2018. "Cleavage Theory Meets Europe's Crisis: Lipset, Rokkan, and the Transnational Cleavag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5(1): 109-135.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vanova, Galina and Bruce Tranter. 2008. "Pay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2): 169-188.

- Johnson, Erik and Philip Schwadel. 2019. "Political Polarization and Long-term Change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 Spending." *Social Forces* 98(2): 915-941.
- Kenny, John. 2020. "Economic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ioritis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Environmental Politics* 29(6): 937-958.
- Kim, Jaewan, Taeyong Jung, Taedong Lee and Dong Kun Lee. 2019. "Analysis on Socio-cultural Aspect of Willingness to Pay for Air Quality (PM10, PM2.5) Improvement in Seoul." 『환경영향평가』 28권 2호, 101-112.
- Klar, Samara. 2014. "A Multidimensional Study of Ideological Preferences and Priorities among the American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78(Special Issue): 344-359.
- Kriesi, Hanspeter, Edgar Grande, Romain Lachat, Martin Dolezal Simon Bornschie, and Thimotheos Frey. 2006.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Political Spaces: Six European Countrie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21-956.
- Lee, Sanguk, Matthew Goldberg, Seth Rosenthal, Edward Maibach, John Kotcher and Anthony Leiserowit. 2024. "Climate Change Belief Systems across Political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LOS ONE* 19(3): 1-16.
- Marquart-Pyatt, Sandra. 2008. "Are there Similar Sources of Environmental Concern? Comparing Industrialized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5): 1312-1335.
- McCright, Aaron M, Riley E. Dunlap. 2011. "The Politic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s Views of Global Warming, 2001-2010."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 155-194.
- McCright, Aaron M, Riley Dunlap and Sandra Marquart-Pyatt. 2016. "Political Ideology and Views about Climate Change i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Politics* 25(2): 338-358.

- Mostafa, Mohamed. 2013. "Wealth, Post-materialism and Consumers' Pro-environmental Intention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25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21: 385-399.
- Neumayer, Eric. 2004. "The Environment, Left-w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Ecologic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51: 167-175.
- Pierce, John and Nicholas Lovrich. 1980. "Belief Systems Concerning the Environment: The General Public, Attentive Publics, and State Legislators." *Political Behavior* 2(3): 259-286.
- Wen, Jun, Yu Hao, Gen-Fu Feng and Chun-Ping Chang. 2016. "Does Government Ideology Influe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Evidence Based on a New Dataset." *Economic Systems* 40: 232-246.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사 및 보고서

- 김기봉. 2023. "기후 위기 가속화...재난으로 빼앗긴 삶 '기후 난민.'" 『YTN 사이언스』(11월 7일).
- 김정환·이윤식. 2024. "韓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의 3배...농산물값 변동성 '최고.'" 『매일경제』(6월 23일).
- 신호경. 2024. "한은 "폭염 등에 1℃ 오르면 농산물 물가상승률 0.4~0.5%p↑"." 『연합뉴스』(6월 18일).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24. 「2023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Geneve: WMO.
- 이선주. 2024. "기후재난의 시대: 대응과 회복을 위한 그린피스 활동."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698/blog-ce-act-now-for-climate-disaster/>(검색일: 2024.06.14).
- 외교부. 202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4832023(검색

일: 2024.06.14)

IPCC. 2023.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Chapter 11: Weather and Climate Extreme Events in a Changing Climate.” Geneva: IPCC.

투고일: 2024.06.25.	심사일: 2024.07.22.	게재확정일: 2024.07.22.
------------------	------------------	--------------------

Political Ideology and Green Attitudes: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Lee, Seoyoung | Daejeon University

Park, Youngdeuk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determining the green attitudes of Koreans,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eatwaves, floods, and droughts due to climate change are occurring worldwide, leading to environmental disasters and increasing socio-economic damage,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and implement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citizens' green attitud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by specifying it in terms of attitudes towards the economy and Nor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division of Korea. We find that attitudes towards the economy and political ideology defined along a single ideological spectrum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reen attitudes. Instead, our finding reveals that people who perceive North Korea as a threat are less willing to pay for environmental issues than those who perceive it as a partner for cooperation.

Key Words | Political Ideology, Green Attitudes, Climate Chang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Ideology, Perceptions of North Korea

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 인식의 변화, 2010-2024*

고민희 | 이화여자대학교**

이혜영 | 이화여자대학교***

| 국문요약 |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에 대한 여론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년도 실증 분석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인식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할당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대중의 선호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분열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능력주의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의 성향과 여성할당제 선호는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부상한 이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능력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와 지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능력주의와의 유의미한 교차효과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성별과 세대 요소가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기제를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측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여성할당제, 능력주의, 청년할당제, 페미니즘, 공정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8052495).

**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제1저자

***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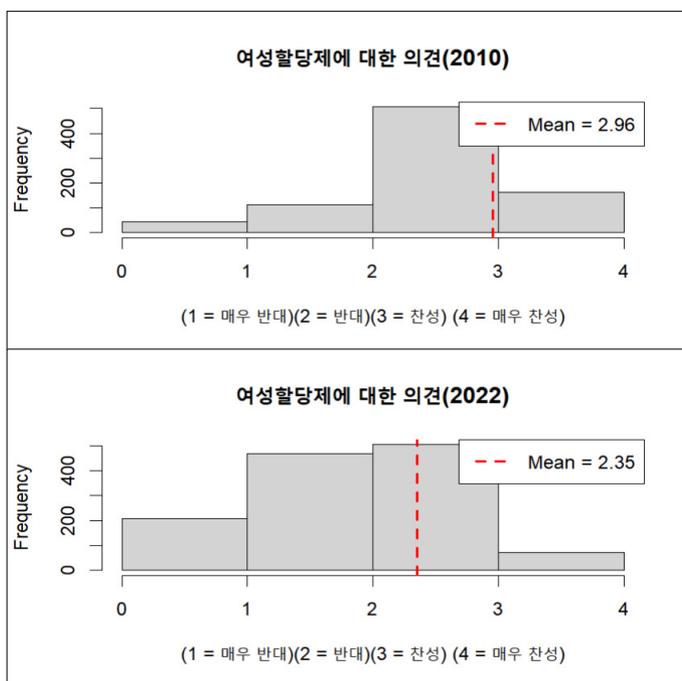
I. 서론

올해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의 의무 추천 비율을 30%에서 50%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여성할당제의 의무화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1인 2표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정다빈·이재묵 2020). 제헌국회 수립 이후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던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제17대 의회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20%인 60명의 여성이원이 당선되며 역대 최대 당선율을 달성하였다. 할당제로 인해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직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 다선 의원 및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등의 확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민정 2014).¹⁾ 실제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의 여성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인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을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 행위자로 기능해 온 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의원의 증가가 여성 정책의 집행 및 선명성(salience)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은경 2010; 신기영 2019; Batto 2018; Clayton 2021; Huang 2016; Shim 2021; Weeks 2023). 그러나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에 대한 여론은 할당제 도입 이후 점차 악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1>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에서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2022년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성 정도를 시각화한 것으로, 여성할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의 여성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인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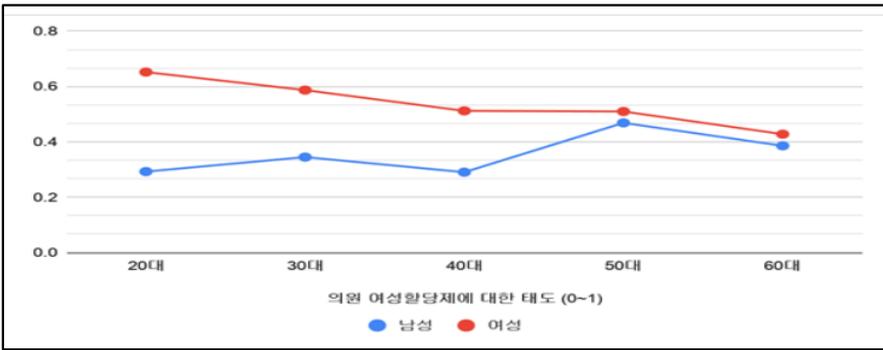
당제에 대한 의식이 지난 10여 년간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할당제 찬반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0년에는 ‘찬성’과 ‘매우 찬성’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였던 2022년에는 ‘매우 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매우 반대’와 ‘반대’의 응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평균적 의견은 2010년 ‘찬성’에 가까웠던 반면(mean=2.96) 2022년에는 ‘반대’에 가까워지면서(mean=2.35), 할당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전환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 (1: 매우 반대, 4: 매우 찬성)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와 동시에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연구(이진옥 외 2020)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찬반에 대한 젠더 격차는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2>). 20-30대 여성들에게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주를 이룬 반면, 20-40대 남성은 여성할당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 격차는 20대 남녀 사이에 가장 크고 세대가 올라갈수록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 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 (0: 부정적, 1: 긍정적)

(출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숙과 의회정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할당제의 찬반여부에 대해 급격한 성(性)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간의 사회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 취업, 소득분배 등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능력주의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여성할당제를 포함한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란 또한 더욱 첨예하게 전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시장(market)에서 뿐 아니라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도 실행된 바 있으며,²⁾ 이에 여성할당제와 같은 우대정책은 역차별이라는 인식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할당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20대 남성들의 보수화, 일명 ‘이대남(20대 남성)’현상의 출현 이후 젠더갈등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김내훈 2021; 이현준·박지훈 2021; 권수현·윤채영 2022; 노기우·이현우 2022; 한유정·김민지 2022), 이를 할당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연구는 적을뿐더러 젠더갈등과 능력주의가 주목받기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또한 단년도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권수현·윤채영 2022; 강신재·정민경 2020; 정다빈·이재목 2020), 할당제의 의식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할당제 인식의 변동 요인에 대한 단년도 실증 분석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정치적 맥락을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여성할당제 논의의 방향과 흐름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예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국민의 힘에서는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는 필답고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 힘 당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사항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이 치르는 공직적격성평가와 같은 채용 시험과 비슷한 성격의 평가이다. 필답고사 형식의 자격평가는 지식 위주의 능력주의적 사고에 기반하며, 이러한 형태의 자격시험이 정치인의 자질 선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윤왕희 2022).

II. 이론적 논의

1.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행 연구

여성할당제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의회 내에 진출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의회 내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에 여성들의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이 증가할 수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De Paola et al. 2010; Franceschet et al. 2012; Krook 2010; Tripp and Kang 2007). 이러한 기술적 대표성의 증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성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때 유권자 중 여성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정당들은 여성후보자에 대해 덜 편향적으로 반응하며 여성의 정계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시적으로는 성차별적인 정치 문화가 줄어들고, 정치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라진다는 여러 연구도 존재한다(Beaman et al. 2009; Gilardi 2015; Lawless and Fox 2010; O'Brien and Rickne 2016; Wolbrecht and Campbell 2007).

한국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할당제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정다빈·이재묵(2020)은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한국에서의 제도적인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공직 선출 자료 분석을 통한 여성할당제의 효과성 증명 및 유권자 인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권수현(2019)의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진입에 있어 성별화된 장벽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구조와 제도적인 환경이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할당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경희(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할당제의 국제적인 동향과 쟁점에 주목하는데, 각 국가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 채택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세력들, 한

국의 여성할당제 시행 결과에 관하여 논의한다.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기술적인 대표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여성의원이 남성보다 더 많이 여성 관련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법안을 제출해 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서복경(2010)은 제17·18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률안의 특징과 정책 선호도를 분석했다. 엄태석(2010)은 고양시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원홍 외 (2007)은 정책현안에 대해서 여성의원은 양극화 해소(45.8%), 여성/노동문제(8.3%), 교육 문제(8.3%) 등에 우선순위를 보여, 경제성장 문제(28.6%), 외교/안보/통상문제(24.1%)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남성의원과 차이를 나타냄을 밝혀냈다. 또한, 여성의원의 확대는 정치적 태도, 의정활동 역할,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로 인해 여성의원이 여성 의제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2. 여성할당제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여론은 정책의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할당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시행은 대중의 지지에 달려있다(Lipset 1983). 또한 여론은 정책이 채택된 후에도 중요한데, 정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의 반대는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후보들에 대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Clayton 2015). 즉, 할당제를 통해 진출한 정치인들이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토큰(token) 여성이나 여왕벌(queen bee)로 인식될 경우(Corsun and Costen 2001; Kanter 1977; Zimmer 1988), 여성정치인들은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여성대표성과 거리를 두고 더욱 주류처럼 행동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에서 여성 할당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다(Batista Pereira and Porto 2020; Meier 2012).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정치 무대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은 성평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연구에 더하여(Krook 2015; Verge and de la Fuente 2014; Yoder 1991), 성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이 여성할당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각각 라틴 아메리카(Barnes and Córdova 2016), 아일랜드(Keenan and McElroy 2017), 호주(Beauregard 2018)에서 연구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김도경 2008; 신기영·황아란 2017; 이소영 2013; 정다빈·이재목 2020; 강신재·정민경 2020). 신기영·황아란(2017)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의 여성 대표성의 수준이 아직 낮으며 더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원들의 대부분이 바람직한 여성의원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도 밝혀졌다. 또한 여성 할당제와 함께 청년 할당제에 대한 인식 조사도 같이 진행하였는데, ‘20~30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성 균형에 찬성하는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의 성 균형 의회에 대한 태도가 성별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대표성의 질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권수현·윤채영(2022)의 연구에서는 의원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적 믿음이 강할수록 의원여성할당제, 법적여성할당제, 성별균형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2020년에만 실시된 설문조사로 전체적인 한국 사회 내에서의 흐름을 보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할당제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신재·정민경(2020)은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을 비롯한 각종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할당제 찬반 여부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할당제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교육 및 소득 수준과 여성할당제 찬성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세대가 아닌 실제 연령(19-80세)으로 변수화하여 연령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다빈·이재목(2020)은 여성공천할당제에 대한 의식에 성차가 존재하나, 과반수의 남성이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볼 때 유권자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할당제에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도 여성할당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할당제에 대한 여론은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2020년 현재 과반수의 유권자가 할당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인다는 결과를 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함이 적절할 것이다.

여성할당제와 여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성별 및 세대 가설: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 찬반 여부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가설 1.2)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 혹은 나이 든 남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할 것이다.

가설 1.3) 성별과 세대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미해질 것이다.

3. 능력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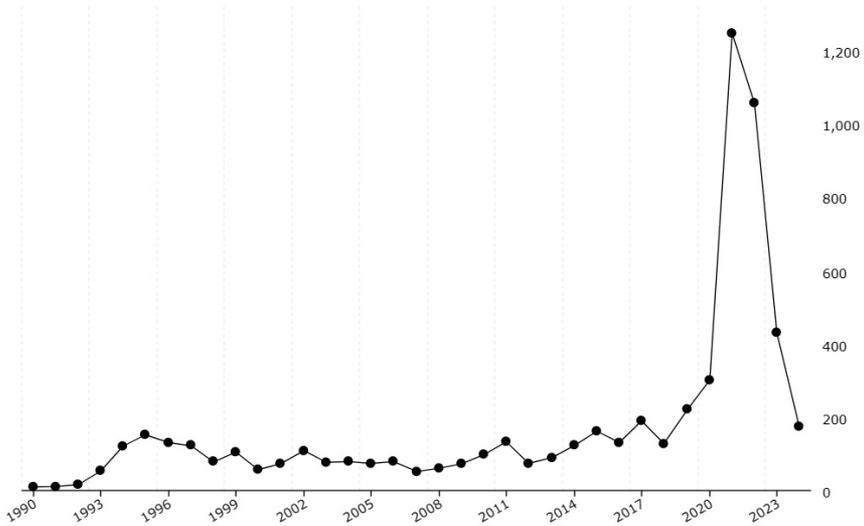
젊은 세대 간의 젠더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20대 집단 내의 젠더갈등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으나, 이를 여성할당제라는 구체적 정책과 연결 짓는 연구는 많지 않다. 20대 남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가 타 연령 집단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과 성별 간 20대의 정치이념 차이가 다른 세대의 성별 차이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박선경 2020)는 현재 한국 사회의 20대 남자 현상이 허상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김종철·정숙정 2015; 마경희 외 2017; 박선경 2020; 안상수 외 2014; 정은숙 2015; 최종숙 202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으로 인해 여성할당제의 문제는 일견 성차별적 요소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젠더갈등이 실은 강력한 성평등의식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할당제는 오히려 성별 그 자체보다는 성별을 기표로 한 “할당”의 문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능력주의의 부상이 여성할당제의 찬반에 끼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는 지능과 노력이 결합하여 능력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능력에 따라 지위의 배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능력주의라고 이름 붙였다(Young 1958).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Talib and Fitzgerald 2015). 즉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노기우·이현우 2022). 능력주의에서의 공정은 형평과 절차적 정의의 합으로 요약 가능하다(곽영신·류용재 2021). 형평은 ‘개인의 기여

도에 따른 몫의 분배'을 의미하며, 절차적 정의는 '분배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구은정 2022; 박효민 2019; Bolton et al. 2005).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 양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대 남성이 '역차별 담론'과 '공정성 담론'을 내세우며 젠더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한유정·김민지 2022).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양극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정, 협소한 취업시장 등의 현상은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게 되는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았다(노기우·이현우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남성들은 여성에게 주어진 할당제, 가산점 등에 대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박무늬 외 2019).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로 20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능력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우인범·장승진 2023).

그렇다면 한국에서 능력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기사의 빈도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그림 3>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의 능력주의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Bell 2013),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능력주의 담론이 부상하게 된 계기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엘리트 자녀 특혜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노기우·이현우 2022).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언급이 증가한 것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이대남’ 현상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과 연관이 있다(여성민 2022; 천관율·정한울 2019).



〈그림 3〉 1990 - 2024 ‘능력주의’ 기사 빈도수

출처 :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능력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주의할 점은 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와 양(+)의 상관관계를, 결과의 평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경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결과의 차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가설에서 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와 정의 관계를, 결과의 평등은 부의 관계를 설정한다.

가설 2) 능력주의의 가설: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다.

가설 2.1) 기회의 공정에 대해 지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가설 2.2) 결과의 공정에 대해 지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가설 2.3) 젊은 남성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는 2018년 이후부터 강화되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데이터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할당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총 4개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³⁾’,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⁵⁾’,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⁶⁾’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인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 연령별로 1,000명을 층화추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3.10\%p$ 이다. 두 번째 데이터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0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83\%p$ 이다. 세 번째

3)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10년 6월 3일 ~ 6월 4일 조사 실시

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한국선거학회 연구 주관, 2018년 6월 14일 ~ 7월 4일 조사 실시

5)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20년 4월 22일 ~ 4월 27일 조사 실시

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연구 주관, 2022년 6월 16일 ~ 6월 20일 조사 실시

데이터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0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83\%p$ 이다. 네 번째 데이터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성, 연령을 고려하여 1,250명을 비례할당 표본추출 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77\%p$ 이다.

2010년 데이터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반 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설문조사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18년, 2020년, 2022년의 설문조사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정의 문제가 불거진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여성할당제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정치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이 더욱 선명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과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은 손희정(2015)이 지적한대로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였으며, 이에 따른 백래시(반발) 또한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이현준·박지훈 2021). 이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남녀 갈등의 본격적인 심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세 시기에 대한 분석이 더욱 의미가 있다.

각 연도별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여성할당제 찬반에 대한 순위 변수(ordered variable)임을 고려했을 때, 변수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보다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⁷⁾ 또한 각 자료가 수집된

7)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또한 시행하였으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독립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독립 변수들의 측정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여성할당제의 찬반여부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성 정도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질문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을 일정 비율 공천하는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제시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찬성한다, 4) 매우 찬성한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할당제 찬반여부가 “여성” 혹은 “할당제”에 대한 반응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슷한 소수자 우대정책인 청년할당제에 대한 인식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는 “일정비율의 청년(39세 이하)들을 후보로 공천하는 ‘청년공천할당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제시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와 같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질문이 포함된 2020년과 2022년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연도 별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변수의 평균은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 모두에 대해 감소하고 있어 할당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여성할당제 선호	2010	824	2.96 (0.74)	1 ~ 4
	2018	1,200	2.73 (0.74)	
	2020	931	2.45 (0.94)	
	2022	1,250	2.35 (0.82)	

청년할당제 선호	2020	1,200	2.59 (0.87)
	2022	1,250	2.53 (0.77)

2) 독립변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앞서 언급했듯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다(노기우·이현우 2022). 기존 연구에서는 능력주의를 다양하게 측정하였는데, 형평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정의(오서은 2024), 개인간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지의 여부(박권일 2021), 운 혹은 노력의 중요성(우명숙·남은영 2021)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조작화(operationalize)한 바 있다. 또한 구분상(2023)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능력주의의 지표로 제시하고, 우명숙·남은영(2021)과 동일하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를 크게 1) 기회에 대한 평등과 2) 결과에 대한 공정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능력주의 담론에서 기회에 대한 평등은 “높은 소득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우명숙·남은영 2021, 219)이며, 이에 대한 측정 문항을 교육과 취업에 관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평등교육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찬성 정도이다. 각종 시험 및 학력이 능력주의적 평가의 기반이 되는 가운데, 손준종(2004)은 교육 논리로서의 능력주의는 경쟁적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바 있다(141-142). 두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취업에 관한 문항은 2020년 6월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인국공 사태)”가 촉발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건과 관련하여, 높은 공채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사원 및 취

업준비생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김상철 2020). 인공공 사태는 특히 청년층에서 공정과 형평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이춘재 2021). 따라서 두 번째 문항에서의 찬성 의견, 즉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항은 크게 형평성과 재분배의 문제로 인식되며, 이는 소득 불평등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 (박권일 2021; 우명숙·남은영 2021.; 219). 이 또한 두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첫 문항은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 문항은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이다. 이 두 문항 모두 능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조세, 복지)에 대한 찬성 여부를 측정하므로, 측정값이 높을수록 능력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항이 능력주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 연구에서도 능력주의의 측정 문항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은 점,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능력주의의 요소를 고르게 묻고 있는 점, 그리고 세 시기에 걸쳐 공통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년차 분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능력주의의 측정 요소로 채택하였다.

〈표 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측정 질문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기회에 대한 평등	경쟁력 강화 교육	2018	1,190	5.63(2.02)	0 ~ 10
		2020	1,200	5.44(2.62)	
		2022	1,203	5.11(2.76)	
	비정규직 문제 해결	2018	1,187	5.40(2.22)	
		2020	1,200	3.69(2.47)	
		2022	1,204	4.48(2.78)	

결과에 대한 공정	고소득자 세금 부과	2018	1,198	7.07(1.89)
		2020	1,200	6.89(2.58)
		2022	1,190	7.26(2.43)
	복지에 대한 찬성	2018	1,195	5.33(2.19)
		2020	1,200	4.82(2.39)
		2022	1,211	4.85(2.37)

각각의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네 가지 문항 모두 2018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적으로 반대(= 0)에서 전적으로 찬성(= 10)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찬성할수록(즉 숫자가 클수록), 결과의 평등과 관련한 문항에 반대할수록(즉 숫자가 작을수록)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3) 통제변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할당제와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빼고 설명하기 힘들다. 입시 경쟁이 주를 이루는 청소년기와 군대와 취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대를 거치며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 없는 사투 끝에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내재화되기 때문이다(우인범·장승진 2023). 생애주기에 맞추어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내재화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통제변수로 각각 성별, 세대, 결혼여부, 정치이념, 학력, 가구소득을 측정하였다. 그 중 성별 및 세대 변수는 가설 1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가설 2.3에서의 “젊은 남성”은 특히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기 쉬운 집단으로 상정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종합 모델에서는 연령 효과와 세대 (cohort)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조사 시점에서의 응답자의 나이 및 세대 (20-60대)를 각각 “연령”과 “세대”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는 <부록 2> 참조).

IV. 분석 결과

1. 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성별, 세대와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가설1), 먼저 연도별 인구학적 요소와 각각의 종속변수 간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여성할당제 선호와 각 연도별 인구학적 요소와의 통계 분석 결과이다.

<표 3> 인구학적 변수와 여성할당제 선호

변수	2010	2018	2020	2022
성별	-0.54*** (0.15)	-0.84*** (0.12)	-1.04*** (0.13)	-0.97*** (0.11)
세대	0.04 (0.07)	-0.08 (0.06)	0.25*** (0.05)	0.16*** (0.05)
학력	0.05 (0.08)	0.08 (0.07)	0.00 (0.05)	-0.06 (0.04)
정치이념	-0.49*** (0.08)	-0.06 (0.03)	-0.14*** (0.03)	-0.21*** (0.03)
가구소득	-0.10* (0.04)	-0.05 (0.04)	-0.01 (0.03)	-0.01 (0.02)
결혼여부	-0.04 (0.07)	-0.00 (0.06)	-0.02 (0.06)	-0.02 (0.05)
cut 1	-4.91 (0.53)	-3.50 (0.45)	-1.85 (0.47)	-3.34 (0.46)
cut 2	-3.42 (0.50)	-1.89 (0.44)	-0.59 (0.46)	-1.34 (0.45)
cut 3	-0.40 (0.49)	1.37 (0.44)	1.91 (0.47)	1.45 (0.45)

Log likelihood	-806.16	-1221.55	-1119.37	-1323.84
N	797	1188	931	1175

*** p < 0.001; ** p < 0.01; * p < 0.05.

각각의 통제변수 중 성별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할당제 선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차에 대한 가설을 지지한다(가설 1.1 및 1.3). 먼저 성별과 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모든 측정 시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별의 계수(coefficient)값 및 통계적 유의도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성별의 승산비(odds ratio)는 약 $0.58(e^{-0.54})$ 으로,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찬성 범주에 속할 확률이 약 42%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같은 확률이 56.8%, 2020년에는 64.6%, 2022년에는 62.1%로 감소하였다. 즉,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대는 2020년부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세대가 높을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젊은 세대, 즉 청년층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현상이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세대에 대한 가설(1.2)과 시기에 대한 가설(1.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통계 결과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할당제를 공정한 취업 시장에서의 방해 요소로 보는 젊은 층의 인식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부상한 2020년 설문조사부터 나타났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성향과 세대와의 상관관계도 유추할 수 있다.

2. 능력주의와 공정의식

1) 기회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선호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은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을 뜻

하며, 여성에게 할당을 통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공정한 경쟁의 장을 해친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볼수록 기회에 대한 평등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종속 변수인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4>), 2018년도에는 독립변수 두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두 가지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설 2.1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하여 찬성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회에 대한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함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항이 여성할당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보다는 취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한 방식인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기 전인 2018년에는 두 가지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2020년부터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논쟁이 가시화된 시점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 기회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선호 여부

변수	2018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1 (0.03)		-0.09*** (0.02)		-0.05* (0.02)	
비정규직을		0.01		-0.17***		-0.13***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3)		(0.03)		(0.02)
성별	-0.84*** (0.12)	-0.82*** (0.12)	-1.00*** (0.13)	-1.11*** (0.13)	-0.94*** (0.12)	-0.96*** (0.12)
세대	-0.08 (0.06)	-0.07 (0.06)	0.25*** (0.05)	0.23*** (0.05)	0.18*** (0.05)	0.20*** (0.05)
월 가구소득	-0.04 (0.04)	-0.04 (0.04)	-0.01 (0.03)	-0.00 (0.03)	-0.02 (0.02)	-0.01 (0.02)
결혼여부	-0.01 (0.06)	0.00 (0.06)	-0.03 (0.06)	-0.05 (0.06)	-0.03 (0.05)	-0.04 (0.05)
학력	0.09 (0.07)	0.10 (0.07)	0.01 (0.05)	0.02 (0.05)	-0.05 (0.04)	-0.06 (0.04)
정치이념	-0.06* (0.03)	-0.07* (0.03)	-0.12*** (0.03)	-0.09** (0.03)	-0.20*** (0.03)	-0.16*** (0.03)
cut1	-3.43*** (0.48)	-3.37*** (0.47)	-2.21*** (0.47)	-2.32*** (0.47)	-3.45*** (0.47)	-3.59*** (0.47)
cut2	-1.81*** (0.47)	-1.76*** (0.46)	-0.94* (0.47)	-1.02* (0.46)	-1.45** (0.46)	-1.55*** (0.46)
cut3	1.45*** (0.47)	1.52*** (0.46)	1.58*** (0.47)	1.54*** (0.47)	1.33** (0.46)	1.25** (0.46)
AIC	2444.44	2435.71	2249.02	2219.50	2594.35	2576.37
BIC	2495.71	2486.41	2297.38	2267.86	2644.76	2626.80
Log Likelihood	-1212.22	-1207.85	-1114.54	-1099.75	-1287.17	-1278.18
N	1,179	1,176	931	931	1,143	1,145

뿐만 아니라 성별과 세대 변수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8, 2020, 2022 년 모두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높았으며, 2020년부터는 세대와 할당제의 관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세대 변수가 증가할수록,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할당제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거꾸로 젊

은 세대일수록 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2) 결과의 공정성과 여성할당제 선호

능력주의의 다른 단면인 결과의 평등과 여성할당제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5>),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할당제의 찬반과 지속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2018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소득 분배 및 고소득층 세금 부과와 두 독립변수 모두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더하여 성별 및 세대 변수도 여성할당제의 선호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회의 평등과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결과의 공정성과 여성할당제 선호

변수	2018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경제성장 보다 복지가 중요	0.18*** (0.03)		0.18*** (0.03)		0.17***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02 (0.03)		0.13*** (0.03)		0.09*** (0.02)
성별	-0.82*** (0.12)	-0.83*** (0.12)	-1.11*** (0.13)	-1.07*** (0.13)	-1.06*** (0.12)	-1.04*** (0.12)
세대	-0.07 (0.06)	-0.07 (0.06)	0.23*** (0.05)	0.20*** (0.05)	0.15** (0.05)	0.14** (0.05)
학력	0.09 (0.07)	0.08 (0.07)	0.01 (0.05)	0.00 (0.05)	-0.05 (0.04)	-0.06 (0.04)
정치이념	-0.04 (0.03)	-0.06 (0.03)	-0.09** (0.03)	-0.10*** (0.03)	-0.18*** (0.03)	-0.18*** (0.03)

가구소득	-0.03 (0.04)	-0.04 (0.04)	0.00 (0.03)	0.01 (0.03)	-0.01 (0.02)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0 (0.06)	-0.05 (0.06)	-0.03 (0.06)	-0.05 (0.05)	-0.03 (0.05)
cut1	-2.36*** 0.48	-3.28*** (0.50)	-0.85 (0.49)	-0.90 (0.51)	-2.40*** (0.49)	-2.66*** (0.51)
cut2	-0.71 (0.48)	-1.66*** (0.49)	0.46 (0.49)	0.38 (0.51)	-0.33 (0.48)	-0.65 (0.51)
cut3	2.62*** (0.48)	1.60** (0.49)	3.04*** (0.50)	2.93*** (0.52)	2.50*** (0.49)	2.13*** (0.52)
AIC	2415.80	2457.88	2215.49	2233.88	2570.84	2561.08
BIC	2466.57	2508.66	2264.85	2282.25	2621.34	2611.38
Log Likelihood	-1197.90	-1218.94	-1098.25	-1106.94	-1275.42	-1270.54
N	1,184	1,186	931	931	1,153	1,130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에 대한 문항을 모두 고려한 모델은 <표 6>과 같다.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측정했던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공정 두 가지 변수 모두가 여성할당제의 찬성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회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채용과 관련한 문항이, 결과의 공정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에 관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지와 관련한 결과의 공정성은 2018, 2020, 2022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 특히 복지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의 부상과 관계없이 여성할당제와 상관관계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발현 시기와 여성할당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가설 2.4)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6〉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 선호: 종합모델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3 (0.03)	-0.07** (0.02)	0.01 (0.02)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1 (0.03)	-0.10*** (0.03)	-0.12*** (0.02)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중요	0.17*** (0.03)	0.13*** (0.03)	0.16***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02 (0.03)	0.06* (0.03)	0.03 (0.03)
성별	-0.80*** (0.12)	-1.16*** (0.13)	-1.09*** (0.12)
세대	-0.02 (0.02)	0.05** (0.02)	0.04* (0.02)
연령	0.09 (0.18)	-0.24 (0.18)	-0.22 (0.17)
월 가구소득	-0.04 (0.04)	0.02 (0.03)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3 (0.06)	-0.05 (0.05)
학력	0.10 (0.07)	0.03 (0.05)	-0.04 (0.05)
정치이념	-0.04 (0.04)	-0.04 (0.03)	-0.11*** (0.03)
cut1	-2.66*** (0.65)	-0.21 (0.65)	-1.70** (0.62)
cut2	-1.02 (0.64)	1.14 (0.65)	0.41 (0.62)
cut3	2.33*** (0.65)	3.79*** (0.66)	3.24*** (0.63)

AIC	2398.49	2183.80	2438.86
BIC	2469.42	2251.51	2508.87
Log Likelihood	-1185.24	-1077.90	-1205.43
N	1,172	931	1,098

3. 여성인가, 할당인가? 청년할당제와의 비교 및 성별교차분석

1) 능력주의와 청년할당제 선호

다음으로는 능력주의와 청년할당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만약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할당제 전반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 것이라면,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강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기회에 대한 평등에 대하여 찬성할수록, 결과의 평등에 반대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통계 분석 결과(<표 7>), 2020년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기회에 대한 평등을 중요시할수록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 모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성·청년과 같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2020년과 2022년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기회의 공정 문항에 찬성할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회에 대한 평등과 청년할당제 선호

변수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 강화 교육이 더 중요	-0.06** (0.02)		-0.02 (0.02)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14*** (0.02)		-0.08*** (0.02)
성별	-0.26* (0.11)	-0.33** (0.11)	-0.51*** (0.12)	-0.51*** (-0.11)
세대	0.06 (0.50)	0.04 (0.05)	0.05 (0.05)	0.06 (0.05)
월 가구소득	-0.02 (0.02)	-0.01 (0.02)	-0.01 (0.02)	-0.00 (0.02)
결혼여부	0.04 (0.05)	0.03 (0.05)	0.08 (0.05)	0.07 (0.05)
학력	-0.01 (0.04)	-0.01 (0.04)	-0.06 (0.04)	-0.07 (0.04)
정치이념	-0.11*** (0.03)	-0.09*** (0.03)	-0.14*** (0.03)	-0.11*** (0.03)
cut1	-2.73*** (0.41)	-2.91*** (0.41)	-3.52*** (0.47)	-3.59*** (0.47)
cut2	-1.37*** (0.40)	-1.52*** (0.40)	-1.48** (0.46)	-1.54*** (0.46)
cut3	1.21** (0.40)	1.10** (0.40)	1.43** (0.46)	1.38** (0.47)
AIC	2889.10	2861.39	2551.31	2547.76
BIC	2940.00	2912.29	2601.73	2598.19
Log Likelihood	-1434.55	-1420.69	-1265.66	-1263.88
N	1,200	1,200	1,143	1,145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표 8>에서 보듯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2년 모두 독립변수로 설정했던 부의 재분배는 청년할당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지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른 차등적 결과가 아닌 국가의 개입에 의한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수록 청년할당

제에 대한 지지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세대 변수는 청년할당제 찬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청년할당제 선호

변수	2020		202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경제성장 보다 복지가 중요	0.17*** (0.03)		0.09*** (0.03)	
고소득자 세금 부과		0.13*** (0.02)		0.09*** (0.02)
성별	-0.33** (0.11)	-0.30** (0.11)	-0.53*** (0.11)	-0.55*** (0.12)
세대	0.06 (0.05)	0.02 (0.05)	0.02 (0.05)	0.01 (0.05)
학력	-0.00 (0.04)	-0.02 (0.04)	-0.06 (0.04)	-0.06 (0.04)
정치이념	-0.08** (0.03)	-0.08** (0.03)	-0.12*** (0.03)	-0.12*** (0.03)
가구소득	-0.01 (0.02)	-0.01 (0.02)	-0.00 (0.02)	0.00 (0.02)
결혼여부	0.03 (0.05)	0.04 (0.05)	0.06 (0.05)	0.07 (0.05)
cut1	-1.71*** (0.35)	-1.63*** (0.37)	-3.02*** (0.44)	-2.72*** (0.49)
cut2	-0.30 (0.35)	-0.24 (0.37)	-0.95* (0.43)	-0.67 (0.48)
cut3	2.33*** (0.36)	2.38*** (0.38)	1.96*** (0.44)	2.24*** (0.49)
AIC	2847.71	2860.21	2560.83	2516.76
BIC	2893.52	2906.02	2611.33	2567.06

Log Likelihood	-1414.86	-1421.10	-1270.41	-1248.38
N	1,200	1,200	1,153	1,130

2) 능력주의는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능력주의와 성별의 교호작용 분석

앞서의 분석에서 능력주의는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 뿐 아니라 ‘청년’이라는 정치적 소수를 우대하는 정책에도 반대하는 경향을 띤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주의적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즉,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며, 이것이 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각 능력주의 변수와 교차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9>, <표 10>).

<표 9> 기회의 평등과 성별 교차분석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	0.04 (0.04)	-0.10** (0.04)	-0.01 (0.03)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0.04 (0.04)	-0.18*** (0.04)	-0.16*** (0.03)
평등교육 < 경쟁력 강화 교육*성별	-0.08 (0.06)	0.04 (0.05)	0.00 (0.05)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성별	0.10 (0.06)	0.03 (0.05)	0.05 (0.05)
성별	-0.94* (0.41)	-1.56*** (0.33)	-1.24*** (0.28)
연령	-0.02 (0.02)	0.05* (0.02)	0.04** (0.02)
세대	0.11 (0.18)	-0.19 (0.18)	-0.22 (0.17)

월 가구소득	-0.05 (0.04)	0.01 (0.03)	0.00 (0.02)
결혼여부	-0.01 (0.06)	-0.02 (0.06)	-0.03 (0.05)
학력	0.09 (0.08)	0.03 (0.05)	-0.05 (0.04)
정치이념	-0.06* (0.03)	-0.08** (0.03)	-0.16*** (0.03)
cut1	-3.84*** (0.62)	-1.87** (0.59)	-2.94*** (0.57)
cut2	-2.23*** (0.61)	-0.55 (0.59)	-0.89 (0.57)
cut3	1.05 (0.61)	2.05*** (0.59)	1.92*** (0.57)
AIC	2432.16	2209.84	2546.94
BIC	2503.09	2277.55	2617.38
Log Likelihood	-1202.08	-1090.92	-1259.47
N	1,172	931	1,132

〈표 10〉 결과의 공정과 성별 교차분석

변수	2018	2020	2022
경제성장<복지보다 복지가 중요	0.23*** (0.04)	0.20*** (0.04)	0.15*** (0.04)
고소득자 세금부과	0.04 (0.04)	0.10** (0.04)	0.03 (0.04)
경제성장<복지*성별	-0.09 (0.05)	-0.07 (0.06)	0.01 (0.05)
고소득자 세금부과*성별	-0.01 (0.06)	0.00 (0.05)	0.04 (0.05)

성별	-0.23 (0.53)	-0.85* (0.39)	-.140*** (0.39)
연령	-0.01 (0.02)	0.05** (0.02)	0.03 (0.02)
세대	0.05 (0.18)	-0.24 (0.18)	-0.14 (0.16)
월 가구소득	-0.03 (0.04)	0.02 (0.03)	-0.01 (0.02)
결혼여부	0.00 (0.06)	-0.02 (0.06)	-0.03 (0.05)
학력	0.10 (0.07)	0.02 (0.05)	-0.04 (0.04)
정치이념	-0.03 (0.03)	-0.07* (0.03)	-0.16*** (0.03)
cut1	-2.03** (0.68)	0.80 (0.65)	-1.68* (0.66)
cut2	-0.39 (0.68)	2.13 (0.66)	0.40 (0.66)
cut3	2.97*** (0.69)	4.76*** (0.67)	3.20*** (0.67)
AIC	2416.58	2202.07	2514.16
BIC	2487.64	2269.78	2584.48
Log Likelihood	-1194.29	-1087.03	-1243.08
N	1,183	931	1,122

교차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할당제에 대한 성별 격차가 능력주의에 의해 추동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 및 연령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능력주의 측정 변수와 성별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⁸⁾

그렇다면, 20대 남녀 사이의 교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0대 내에서의

성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연도에서 20대를 추출하여 동일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표 12>).

<표 11> 기회의 평등과 성별 교차분석: 20대

변수	2018	2020	2022
평등교육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 중요	0.09 (0.11)	-0.51*** (0.15)	-0.02 (0.08)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	-0.25* (0.11)	-0.53*** (0.15)	-0.08 (0.10)
평등교육 < 경쟁력 강화 교육*성별	0.19 (0.16)	0.40* (0.18)	-0.14 (0.12)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관리*성별	0.29* (0.15)	0.47** (0.17)	0.06 (0.13)
성별	-4.00*** (1.08)	-7.18*** (1.40)	-1.19 (0.75)
월 가구소득	-0.05 (0.10)	-0.19* (0.08)	0.06 (0.05)
결혼여부	-0.19 (0.21)	-0.15 (0.24)	0.18 (0.20)
학력	0.19 (0.19)	0.22 (0.20)	-0.02 (0.15)
정치이념	-0.13 (0.10)	-0.15 (0.10)	-0.26** (0.08)

8) 성별은 능력주의보다는 인구사회적 변수와 교차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 분석에서 2020년에는 세대, 교육수준, 결혼여부가 성별과의 교차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세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남성의 경우 세대가 증가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t1	-5.08*** (1.49)	-8.54*** (2.15)	-2.78 (1.48)
cut2	-3.85** (1.47)	-6.87** (2.12)	-0.88 (1.47)
cut3	0.07 (1.43)	-4.21* (2.06)	1.33 (1.46)
AIC	372.16	275.79	403.16
BIC	411.06	310.57	440.86
Log Likelihood	-174.08	-125.90	-189.58
N	189	134	171

분석 결과, 20대 내에서 능력주의와 성별의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2018년과 2020년에는 오히려 가설(2.3)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주의 중에서도 기회의 평등에 찬성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8년과 2020년에는 남성의 경우(성별=1) 교차항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난다. 즉, 20대 여성에 비해 20대의 남성 사이에서는 능력주의와 할당제 반대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면, 능력주의 문향을 포함하더라도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할당제에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결과의 공정과 성별 교차분석: 20대

변수	2018	2020	2022
경제성장<복지보다 복지가 중요	0.22 (0.12)	0.08 (0.14)	0.22* (0.09)
고소득자 세금부과	0.07 (0.13)	0.15 (0.10)	-0.02 (0.09)
경제성장<복지*성별	-0.07 (0.16)	0.22 (0.17)	-0.12 (0.13)

고소득자 세금부과*성별	-0.09 (0.16)	-0.07 (0.14)	0.08 (0.12)
성별	-0.45 (1.46)	-3.78** (1.16)	-1.74* (0.85)
월 가구소득	-0.07 (0.10)	-0.20* (0.08)	0.05 (0.05)
결혼여부	-0.17 (0.21)	-0.30 (0.24)	0.16 (0.20)
학력	0.07 (0.19)	0.29 (0.21)	-0.03 (0.16)
정치이념	-0.08 (0.10)	-0.26** (0.09)	-0.25** (0.08)
cut1	-2.74 (1.61)	-2.99 (1.89)	-1.69 (1.67)
cut2	-1.55 (1.60)	-1.29 (1.88)	0.23 (1.66)
cut3	2.26 (1.62)	1.04 (1.91)	2.54 (1.69)
AIC	379.16	285.91	411.90
BIC	418.06	320.68	450.08
Log Likelihood	-177.58	-130.95	-193.95
N	189	134	178

20대 남녀의 통계 모델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각 연도별 응답자의 규모를 볼 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적을뿐더러 성별로 구분할 경우 그 수는 더욱 적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20대 남녀 간의 뚜렷한 성별 격차 이외에 능력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할당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대중의 선호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분열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다. 특히 여성할당제의 성격차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세대별로도 할당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의 균열은 전보다 심화되었다. 둘째,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능력주의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의 성향과 여성할당제 선호는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부상한 이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회의 평등을 지지할수록, 부의 재분배에 대하여 반대할수록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하며, 이는 곧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셋째, 여성할당제 반대의 중요한 기제로 정치적 권력의 강제적 재분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능력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 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세대는 여성할당제와 지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능력주의와의 교차효과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성별과 세대 요소가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기제를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측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에 끼친 역할을 고려할 때, 여성할당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 중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상징적·실질적 중요성을 지닌다(Clayton 2021). 여성할당제의 목적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없는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마와 당선 과정에 기존의 성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있다(권수현·윤채영 2022). 베즐리 외(Besley et al. 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할당제는 능력주의와 대립하기보다 오히려 능력주의를 강화하며, 남성 정치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대중은 능력주의와 여성할당제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능력주의가 표면화된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인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차등이 정치적 경쟁인 선거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할당제는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제도라는 인식은 여성 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2020년대 이후 여성할당제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은 그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던 2010년과 비교하여 정치·경제·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두 기간 사이의 공백에는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변동이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젠더이슈가 선명해졌고 정치화되었으며, 역차별과 공정성 논란이 청년세대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능력주의와 결합한 할당제 담론은 정치인들의 레토릭에 힘입은 바 크다. 2022년 청년 남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구조적으로 겪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설파하는 정치인에 열광하였으며(송정호 2021), 22대 총선에서는 공개적으로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최용락 2024). 능력주의의 만연이 가져올 우려에도 불구하고(김미영 2009; Sandel 2020),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미 할당제와 능력주의를 대척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33.8%)을 크게 밑도는 현실에도 불구하고,⁹⁾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여성할당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할당제에 대한 선호를 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능력주의의 부상과 페미니즘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엄혜진 2021),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얼마만큼 젠더화되어 할당제와 같은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9)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d5c5d31-en>.

논의가 필요하다. 흔히 능력주의 경향은 역차별을 경험하는 청년 남성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노기우·이현우 2022),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 경향이 성별을 매개로 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기제로 작용함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능력주의의 개념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점에서(정태석 2021), 본 연구의 측정문항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능력주의의 성별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능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주장하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할당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진보적인 정치개혁을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와 성별 간의 관계를 더욱 엄밀히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여성 및 청년할당제에 대한 성별·세대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할당제 및 청년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며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성별과 세대의 교차효과는 청년할당제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여성할당제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던데, 성중립적(gender-neutral)인 능력주의보다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 혹은 여성의 경제적 위협과 같이 명시적인 형태의 젠더 백래쉬가 여성할당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권수현 2018; 신경아 2023; Kim and Kweon 2022, Kim and Park 2024).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의 젠더·계급·세대적 함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여, 능력주의와 할당제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신재·정민경. 2020. “여성의 권리 확대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미투 운동과 여성 공천할당제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5권 1호, 39-69.
- 곽영신·류용재. 2021.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다차원성: 청년 공정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5-45.
- 구본상. 2023.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한국정치연구』 32권 2호, 1-30.
- 구은정. 2022. 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형평 대 평등. 『경제와사회』, 108-135.
- 권수현. 2018. “백래쉬에 대한 반격: 남성할당제와 남녀동수.” 『젠더법학』 10권 1호, 37-65.
- 권수현. 2019.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페미니즘 연구』 19권 1호, 91-128.
- 권수현·윤채영. 2022. “의원여성할당제 선호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여성학』 38권 1호, 73-109.
- 김내훈. 2021. “‘이대남’의 포퓰리즘과 그 이면.” 『문화과학』 108호, 146-164.
- 김도경. 2008. “성차 그리고 여성 내에서 정치적 세련됨의 차이.” 『21세기정치학회보』 18집 2호, 93-116.
- 김미영. 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사회』 84호, 256-277.
- 김민정. 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14권 2호, 203-241
- 김상철, 2020, “‘인국공 사태’가 불러온 ‘가치 갈등.’” 『시사저널』 (7월 12일).
- 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한국정당학회보』 6권 1호, 27-54.
- 김은경. 2010.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방향.” 『여성경제연구』 7권 1호, 1-24.
- 김종철·정숙정. 2015.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노기우·이현우. 2022.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능력주의와 운 평 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집 5호, 57-86.
- 마경희·문희영·조영주.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남성 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경희. 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페미니즘 연구』 7권 1호, 273-300.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호, 1-39.
- 박무늬·민혜영·장태훈. 2019. “청년 세대 (20~30 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권 1호, 85-111.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 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권 2호, 5-36.
- 박효민. 2019. “능력주의 (meritocracy) 를 넘어서: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1-211.
- 서복경. 2010. “17-18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투입측면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논총』8집, 33-60.
- 손준중. 2004.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권 2호, 135-153.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 과학』 83호, 14-47.
- 송정호, 2021. “‘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젠더 백래시’” 『서울경제』 (8월 5일).
- 신경아. 2023.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서울: 동녘.
- 신기영. 2019. “여성할당제를 넘어 성균형 의회로-할당제의 운용과 20 대 국회의원 들의 인식.” 『이화젠더법학』 11권 3호, 207-243.
- 신기영·황아란. 2017.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한국 과 국제정치』 33권 4호, 27-57.
- 안상수·김인순·윤민재·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 군복무 이행,

-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태석. 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
양시의회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13권 1호.,
71-94
- 엄혜진. 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
획.” 『경제와사회』 132호, 47-79.
- 여성민. 2022. 『‘이대남 현상의’정치적’연구:한나 아렌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
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서은. 2024. “능력주의와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 분배 정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8권 2호, 225-253.
- 우명숙·남은영. 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권 1호, 201-244.
- 우인범·장승진. 2023. “능력주의와 청년 유권자의 보수화?” 『평화연구』 31권 2호,
5-44.
- 윤왕희. 2022.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 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 『현대정치연구』 15권 2호, 5-36.
-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
보』 47집 5호, 255-276.
- 이진옥·권수현·서복경·장명신.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 이춘재. 2021.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한겨레』 (10월
13일).
- 이현준·박지훈. 2021. “‘헤지’가 구성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와 남성 역차별: 공정성
에 대한 남성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열망은 어떻게 여성혐오로 이어지는
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권 1호, 5-40.
- 정다빈·이재묵. 2020. “한국 정치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정
치정보연구』 23권 3호, 241-273.
- 정은숙. 2015.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16권 7호, 4679-4688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12-46.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서울: 시사IN 북.

최용락. 2024. ““여성할당제, 비동의간음죄 반대”...또 ‘안티페미’ 꺼낸 개혁신당” 『프리티안』 (3월 27일)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 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호, 189-224.

한유정·김민지.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권 2호, 101-161.

Barnes, T. D., Córdova, A. 2016. “Making space for women: Explaining citizen support for legislative gender quotas in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s* 78(3): 670-686.

Batista Pereira, F., Porto, N. F. 2020. “Gender attitudes and public opinion towards electoral gender quotas in Brazil.” *Political Psychology* 41(5): 887-899.

Batto, N. F. 2018. “Gender Quotas and Upward Mobility in Elections in Taiwan.”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9(4): 451-466.

Beaman, L., Chattopadhyay, R., Duflo, E., Pande, R., Topalova, P. 2009. “Powerful women: does exposure reduce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4): 1497-1540.

Beauregard, K. 2018. “Partisanship and the gender gap: support for gender quotas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3): 290-319.

Bell, D. 2013. “Introduction.” in Bell, D. A., Li, C.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Meri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sley, T., Folke, O., Persson, T., Rickne, J. 2017.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 the mediocre man: 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American Economic Review* 107(8): 2204-2242.
- Bolton, G. E., Brandts, J., Ockenfels, A. 2005. “Fair procedures: Evidence from games involving lotteries.” *The Economic Journal* 115(506): 1054-1076.
- Clayton, A. 2015. “Women’s political engagement under quota-mandated female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a randomized policy experi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8(3): 333-369.
- Clayton, A. 2021. “How do electoral gender quotas affect poli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4: 235-252.
- Corsun, D. L., Costen, W. M. 2001. “Is the glass ceiling unbreakable? Habitus, fields, and the stalling of women and minorities in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10(1): 16-25.
- De Paola, M., Scoppa, V., Lombardo, R. 2010. “Can gender quotas break down negative stereotypes? Evidence from changes in electoral r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5-6): 344-353.
- Franceschet, Susan, Mona Lena Krook, and Jennifer M. Piscopo. 2012. “‘Conceptualizing the Impact of Gender Quotas’, in Susan Franceschet, Mona Lena Krook, and Jennifer M. Piscopo (eds.), *The Impact of Gender Quotas*.” *New York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3-26
- Gilardi, Fabrizio. 2015. “‘The Temporary Importance of Role Models fo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4): 957-970.
- Huang, C. L. 2016. “Reserved for whom? The electoral impact of gender quotas in Taiwan.” *Pacific Affairs* 89(2): 325-343.
- Kanter, R. M.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65-990.
- Keenan, L., McElroy, G. 2017. “Who supports gender quotas in Ireland?.” *Irish*

Political Studies 32(3): 382-403.

- Kim, H., Park, Y. 2024. "Economic Frustration and Resistance to Gender Equality among Young Korean Men." *Asian Survey* Online First. <https://doi.org/10.1525/as.2024.2124374>.
- Kim, J. H., Kweon, Y. 2022. "Why do young men oppose gender quotas? Group threat and backlash to legislative gender quota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7(4): 991-1021.
- Krook, Mona Lena. 2010.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rook, M. L. 2015. "Empowerment versus backlash: gender quotas and critical mass theory."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3(1): 184-188.
- Lawless, Jennifer L., Richard L. Fox. 2010. *It Still Takes a Candidate: Why Women Don't Run for Off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set, S. M. 198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The Democracy Sourcebook.
- Meier, P. 2012. "From laggard to leader: Explaining the Belgian gender quotas and parity clause." *West European Politics* 35(2): 362-379.
- O'Brien, Diana Z., Johanna Rickne. 2016. "Gender Quotas and Women's Political Leader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1): 112-126.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 Shim, J. 2021. "Gender and Politics in Northeast Asia: Legislative Patterns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2(2): 138-155.
- Talib, N., Fitzgerald, R. 2015. "Inequality as meritocracy: the use of the metaphor of diversity and the value of inequality within Singapore's meritocratic education system." *Critical Discourse Studies* 12(4): 445-462.
- Tripp, Ali Mari, Alice Kang. 2007. "The Global Impact of Quotas: On the Fast Track to Increased Female Legislative Represent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3): 338-361.

- Verge, T., De la Fuente, M. 2014. "Playing with different cards: Party politics, gender quotas and women's empowerm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5(1): 67-79.
- Weeks, A. C., Masala, F. 2023. "Still 'the Domain of Men?' Gender Quotas and Women's Inclusion in Local Politics in Ital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8(3): 503-534.
- Wolbrecht, Christina, David E. Campbell. 2007. "Leading by Example: Female Members of Parliament as Political Role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4): 921-939.
- Yoder, J. 1991. "Rethinking tokenism: Looking beyond numbers." *Gender & Society* 5(2): 178-192.
- Young, M.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an Essay on Education and Inequality*. London: Thames & Hudson.
- Zimmer, L. 1988. "Tokenism and women in the workplace: The limits of gender-neutral theory." *Social Problems* 35(1): 64-77.

투고일: 2024.06.23. 심사일: 2024.08.03. 게재확정일: 2024.08.05.

〈부록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와 측정	
종속 변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2018-2022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을 일정 비율 공천하는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1=매우 반대, 4=매우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더 찬성함을 나타냄
	청년할당제 에 대한 찬성	2020-2022	“일정비율의 청년(39세 이하)들을 후보로 공천하는 ‘청년공천할당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1=매우 반대, 4=매우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할당제에 대하여 더 찬성함을 나타냄
독립 변수	기회의 평등	2018-202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에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평등교육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에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결과의 평등 (소득재분배)	2018-2022	“고소득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을 나타냄.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0=전적으로 반대, 10=전적으로 찬성),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을 나타냄
사회 · 인 구학 적 변수	성별(더미)		1=남성, 0=여성
	세대		응답자의 연령이 속한 세대 변수, 1(20대, 20-29), 2(30대, 30-39), 3(40대, 40-49), 4(50대, 50-59), 5(60세 이상)
	결혼여부		1(결혼), 2(사별), 3(이혼, 별거) 4(미혼)에 대하여 한 개의 응답 선택.

	정치이념	2010년 (1(진보) - 5(보수))로 측정. 2018-2022 (0(진보) - 10(보수))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이념이 보수인 것을 나타냄.
	학력	2010, 2018 (1(중졸 이하) - 4(4년대학 재학 이상)) 2020 (1(유치원) - 9(박사 과정)) 2022 (1(전혀 교육 받지 못함) - 10(박사 과정 수료))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짐을 나타냄.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에 대한 물음 2018 (1(100만원 미만) - 9(800만원 이상)) 2020,2022 (1(100만원 미만) - 11(1,000만원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아짐을 나타냄.

〈부록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연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성별	2010	1,000	0.49(0.50)	0 ~ 1
	2018	1,200	0.50(0.50)	
	2020	1,200	0.50(0.50)	
	2022	1,250	0.49(0.50)	
나이	2010	1,000	43.56(15.44)	19 ~ 89
	2018	1,200	46.75(14.26)	20 ~ 86
	2020	1,200	46.62(14.50)	18 ~ 82
	2022	1,250	47.41(14.55)	19 ~ 85
세대	2010	1,000	2.91(1.40)	1 ~ 5
	2018	1,200	3.17(1.40)	
	2020	1,200	3.24(1.44)	
	2022	1,250	3.31(1.46)	
학력	2010	988	2.71(1.08)	1 ~ 4
	2018	1,200	2.77(0.95)	1 ~ 4
	2020	1,200	6.34(1.32)	3 ~ 9
	2022	1,250	7.38(1.35)	1 ~ 10
정치이념	2010	990	2.89(0.93)	1 ~ 5

	2018	1,188	4.78(1.94)	0 ~ 10
	2020	1,200	4.64(2.20)	
	2022	1,175	5.05(2.07)	
월 가구소득	2010	966	3.79(1.89)	1 ~ 8
	2018	1,200	4.77(1.59)	1 ~ 9
	2020	1,200	4.99(2.44)	1 ~ 11
	2022	1,250	5.30(2.54)	1 ~ 11
결혼 여부	2010	992	1.87(1.30)	1 ~ 4
	2018	1,200	1.69(1.23)	
	2020	1,200	2.07(1.38)	
	2022	1,250	2.07(1.38)	

Who Opposes Gender Quotas: Meritocratic Beliefs and Opposition to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2010-2024

Go, Min Hee | Ewha Womans University

Lee, Hye Young | Ewha Womans University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quota system,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has gradually deteriorated since their introduction,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 rise of meritocratic beliefs has been regarded as the main driver of such opposition, empirical support for this claim remains weak. Using multi-year survey data, this study unveils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ocracy and gender quotas in South Korea. We report four findings. First, despite the positive impact of quotas on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has become less supportive and more divided over time. Second, the change in views on quotas i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meritocracy, in that meritocratic orientation is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opposition to quotas. Third, those with stronger meritocratic beliefs do not only oppose gender quotas but also for quotas for the youth, another demographic with little political power. Finally, while gender and cohort effects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quotas, we found little evidence for their interaction effects with meritocracy. This suggests that the gender gap in opposition to quotas may be mediated by more explicit forms of anti-feminist backlash than meritocracy.

Key Words | Gender Quota, Meritocracy, Legislative Quota, Gender Backlash, Fairness

The Troubled Relationship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Derrida's Thoughts on the Platonic Question of Political Existence in the *Politics of Friendship**

Lee, SangWon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able basis of political existence revealed in Derrida's *Politics of Friendship*, focusing on his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dialogues. I argue that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shows a problematic ground of being with others inherent in the classical questioning of political friendship and democratic fraternity. Scholars have grappled with Derrida's complicated interpretation of political friendship, which deals with an ambiguous relationship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Their understanding of Derrida's thoughts on friendship mostly focuses on his deconstructive conception of *différance* rather than his serious approach to the classical question of being. But a close reading of the *Politics of Friendship* shows that Derrida's thinking of friendship and fraternity intends to reveal above all the ambiguous nature of human existence still revealed in ancient philosophical thoughts. Especially, his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dialogues tackles the problematic ground of democratic existence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a customary doctrine of the natural brotherhood. For Derrida, the classical thinking of being signifies not merely a metaphysical approach to sameness but the questionable coexistence of sameness and otherness. Therefore, I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grasp how Derrida's critical thinking of political friendship approaches the ambiguous implications of being contained in Plato's original thinking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Keywords | : Political Existence; Being; Other; Fraternity; Friendship; Democrac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A2A03085570).

I. Introdu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able basis of political existence revealed in Derrida's *Politics of Friendship*, focusing on his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dialogues (Derrida 2005a, Hereafter PF).¹⁾ I argue that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shows a limited ground of political existence inherent in the classical questioning of political friendship and democratic fraternity. In Derrida's view, the humanitarian implication of political friendship has been questionable from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 (PF, 265). The democratic citizens of the Revolutionary France were not presumed simply as free and equal individuals; they were primarily seen as brothers sharing political values and mutual affection for each other *within* a certain boundary of the nation state (Keitner 2007, 74–75; Safran 1991, 220).²⁾ Today, we confront a democratic crisis with far-right movements related to racism, chauvinism and other exclusive forms of social doctrines (Benhabib 2004; Laclau 2005; Mouffe 2005). Derrida sees that these political phenomena display a questionable mixture of democracy and brotherhood; the universal ideal of democratic brotherhood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conventional belief in natural citizenship connected to a certain land or territory (PF, 272; cf. Benhabib 2004, 215; Safran 1991, 84). Derrida's philosophical approach is important in that it makes us reflect upon a deeper existential basis of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risis that excludes refugees, immigrants and other types of foreigners from political

1) Derrida (2005a), which was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Politiques de l'amitié* (Paris: Galiléé, 1994).

2) Derrida points out that Victor Hugo praises for the magnificence of the French revolution in terms of the manly virtue of the brotherhood which does not include the "universal class hospitable to women or sisters" (PF, 265).

communities. For him, the nature of these phenomena is not simply originated from an illiberal trend of the contemporary politics; rather, the recurring problem of anti-immigrant movements implies a fundamental question of human existence that constantly needs the friendly mode of living with others within a certain boundary of political community (PF, 273).

Scholars have grappled with Derrida's complicated interpretation of political friendship, which deals with a questionable relationship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But their understanding of Derrida's thoughts on friendship mostly focus on his deconstructive conception of *différance* rather than his serious approach to the classical question of being (Dallmayr 1999; Goh 2011; Ludwig 2010; Reynolds 2010). Other studies in the Derrida's view of friendship simply attempt to analyze his critical pedagogy or the practical aspects of his philosophical criticism (Sokoloff 2005; Waghid 2008; Zembylas 2015). However, Derrida's questioning of the conventional belief in friendship and fraternity allows us to reconsider the ambiguous ground of human existence still revealed in ancient philosophical thoughts (Caputo 1999; Thomson 2005; cf. Derrida 1984, 23; Derrida 2005b, 47–48). Since Derrida's philosophical approach to the politics of friendship is based on his own view of the classical philosophy, it is helpful for us to examine his understanding of Plato's political thoughts. Especially, his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dialogues tackles the problematic nature of political existence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a customary doctrine of the natural brotherhood.³⁾ For Derrida, classical thinking

3) Throughout the whole paper, I will often use the terms like “problematic,” “questionable,” and “ambiguous” because a basic intention of the Platonic philosophy is not to provide apparent solutions to the political problems but to make readers think about permanent questions of them (Strauss 1978, 50–57). This is why Plato writes dialogues rather than treatises. I think that Derrida also knows Plato's philosophical intention to reveal these

of nature (*physis*) signifies not merely as a theoretical object of metaphysical approach but the questionable origin of being as “what appears in birth... nurturing and growing” (PF, viii; cf. Heidegger 2000, 15). The natural possibility of living with others requires human beings to seek a friendly community of peaceful coexistence based on mutual affection.⁴⁾

In this essay, I suggest that Derrida’s critical thinking of political friendship reveals an inevitable question of being contained in Plato’s original thinking of friendship, fraternity and democracy. Accordingly, the second section explicates the problematic ground of being with others in Derrida’s radical thoughts on the classical question of friendship. In the third section, I analyze Derrida’s critique of Carl Schmitt’s political thoughts on the friend/enemy distinction based on a partial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text. Then, the fourth and fifth sections show how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discloses Plato’s complicated approach to the political friendship in the *Menexenus* which contains classical problems of the natural brotherhood and democratic existence. In the sixth section, I will explicate how Derrida’s approach to political existence necessarily leads to the open question of friendship revealed in Plato’s *Lysis*. In conclusion, I maintain

political questions as an ambiguous ground of human existence. Here, the term “ambiguous” means not a negative sense of vagueness but a challenging character of the politico-philosophical problems and questions. These terms are also related to necessary tension inherent in the oppositional conceptions like the public/private, nobility/equality or enmity/homogeneity used in this paper; these seemingly contrasted concepts must be understood not simply as logical oppositions but starting points to think about the necessary connectedness of the opposing movements of political existence.

4) According to Derrida, the affectionate relationship of the domestic brotherhood has been usually connected to the traditional authority of father. Thus, democratic fraternity which seeks mutual affection of citizens as brothers often signifies the paradoxical condition of patriarchy (cf. PF, ix).

that Derrida's classical questioning of friendship reveals a permanent problem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based on a determinate boundary of being with others.

II. Derrida's Disquietude about the Humanitarian Brotherhood and the Classical Problem of Friendship

Human beings can learn the best-possible mode of living with others only in ceaseless striving for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The constant longing for friendship enables human beings to engage in various modes of being with others (PF, 15). For Derrida, the shared ground of friendship cannot be detached from a broader context of political community (PF, 296–297). The human desire to connect with others is not simply directed toward a universal community of all human beings; rather, the natural need of a friendly community often invokes fraternity based on a particular moral conception of political association. Caputo argues that for Derrida, the ongoing problem of political fraternization is connected to the contemporary conception of humanity based on a universal friendship of human beings (Caputo 1999, 188–189). Derrida's critical thinking confronts the fact that the humanitarian call to friendship and brotherhood of all humans often tends to be framed by a limited scheme of coexistence such as ethnicity or nationality (PF, 298–299, 304–305; cf. Derrida 2005b, 58; Keitner 2007, 84).

The ancient thinking of friendship already discloses this fundamental problem of political existence. According to Derrida, the questionable ground of the classical friendship (*philia*) reveals an enigmatic character of living with others, allowing us to reconsider the fundamental problem of friendship (PF, 299). For

him, Aristotle's paradoxical remarks on friendship, "Oh my friends, there is no friend," indicates that the ancient doctrine of friendship already puts itself into question from the beginning (PF, 301; Laertius 1959, bk. 5, sec. 21).⁵⁾ This contradictory saying of ancient philosophy intends to disclose both the being and non-being of friendship at the same time.⁶⁾ The classical thinking of friendship is still significant not for showing moral solutions to the contemporary problems of war and hostility but for seeking a careful approach to the inevitable basis of being in the *polis* (Aristotle 1934 [hereafter NE], 1169b 10 f.). Thus, Derrida argues that a mere reception of accustomed interpretations of the Greek friendship easily makes us reject the ongoing philosophical questions of political friendship (PF, 300).

In this light, Derrida points out questionable aspects of the humanitarian argument for the universal friendship and its critique of the racist doctrine. For example, Maurice Blanchot suggests that the political experience of Judaism reveals not simply historical events of a certain religious people but a moral foundation of universal friendship: a genuine historical lesson of the Nazi

5) The original Greek text is "ὦ [ὧ] φίλοι, οὐδέ τις φίλος (Ō [Ōi] philoi, oudeis philos)". This sentence is often translated as "he who has many friends can have no true friend". But Derrida points out that there is another way of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ambiguous textual history of the first two words "ὦ [ὧ] φίλοι": they can be read either as a vocative interjection (Ō [ō] philoi; Oh friends!) or a phrase with a relative pronoun (Ōi[ὧ] philoi: The one who has many friends) (PF, 189).

6) Derrida's approach to the Greek question of friendship ultimately leads to a deeper problem of Platonic questioning, from which Aristotle develops his own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friendship. Thus,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attempts to disclose a questionable basis of Aristotle's recurrent struggle with Plato's thinking, rather than simply criticizing metaphysical aspects of Platonism. From Plato's original mode of philosophizing, therefore, we can find a great resource of thinking about the ambiguous nature of friendship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persecution is that the Jews are our brother (PF, 304; Blanchot 1988).⁷) But what do the terms “we”, “brother” and “friendship” mean in this philanthropic mode of thinking? Derrida confesses his own disquietude with the literary assertions of the universal brotherhood for the Jewish people (PF, 305; Caputo 1999, 185; cf. Fathaigh 2024, 502). Derrida’s criticism is generated not merely from their failure to explicate the problematic combination of friendship and brotherhood. Rather, his uneasiness implies a broader dissatisfaction with the ambiguous ground of humanism; its naïve vision of fraternity often covers up the recurring problem of political existence (PF, 305; Caputo 1999, 186). The humanitarian belief in universal brotherhood cannot easily detach itself from a finite ground of political friendship, as seen in the Victor Hugo’s paradoxical praise of both the French exceptionalism and universal fraternity (PF, 264; cf. Fathaigh 2024, 500).⁸) In this sense, Derrida invites us to examine Carl Schmitt’s influential doctrine of political existence based on the friend/enemy distinction.

III. Schmitt’s Conception of Political Existence and the Forgotten Question of Friendship

For Derrida, ordinary criticism of Schmitt’s view about the political often fails

7) Derrida cites this sentence from Blanchot’s “A Letter to Salomon Malka,” *L’Arche*, n. 373 (May. 1988). For a good study of Derrida’s criticism of Blanchot, see Fathaigh (2024).

8) Derrida points out that Hugo proclaims France as an “*extraordinary nation*” which will show a universal ground of democratic civilization. For Hugo, the French Revolution aims at the genuine fraternity of all nations beyond the individual rights of freedom and equality; the French republic must be “a family” symbolizing a national community that seeks humanity as such (Hugo 1867; cf. Spicker 2006, 119).

to approach genuine problems of his existential thoughts, merely focusing on his radical view of the public enemy (PF, 152; Schmitt 2007, 28). A proper way of the critique must deal with a hidden meaning of friendship to be disclosed from Schmitt's deeper views of political existence (cf. Caputo 1999, 194). In Derrida's view, Schmitt's conception of the enemy cannot be detached from his methodological strategy to illuminate the necessary differentiation of beings; Schmitt as a legal scholar emphasizes the phenomenon of hostility because it provides a solid logical basis for his juristic framework of opposition and negation (PF, 152; cf. Schmitt 2007, 20–21). But Derrida's thinking further suggests that Schmitt's emphasis on the public enemy is grounded in his own determination of being in terms of the differing movements of beings (cf. PF, 153; Schmitt 2007, 27).

The genuine understanding of being cannot be captured by the juristic or logical determinations of beings in speech.⁹⁾ Schmitt's thinking of the political certainly recognizes a fundamental limit of the rational categorization of human existence (Schmitt 2007, 49; cf. Mouffe 2005, 11–17).¹⁰⁾ In his approach to the political, however, Schmitt does not examine other possibilities of being exterior to his own scheme of the friend/enemy distinction. Derrida maintains that

9) In this sense, Derrida refers to Heidegger's approach to the questionable implication of being as such because it tries to disclose a more primordial ground of speech or language (*Sprache*) in terms of a classical conception of the *logos* (PF, 244; cf. Heidegger 2000, 130–31). In Derrida's view, however, Schmitt's approach to the political existence does not question his own presumption of being while trying to overcome the metaphysical de-politicization of human existence in modern liberalism (PF, 247; cf. Schmitt 2007, 69–72).

10) Schmitt says that “[i]f there really are enemies in the ontological sense...[in other words,] as long as a people exists in the political sphere, this people must...determine by itself the distinction of friend and enemy.”

although Schmitt intends to reveal the existential ground of a primordial opposition (*polemos*) among beings, he does not investigate a more original question of being that sustains the oppositional relationship of beings (PF, 249). Thereby, Schmitt's thoughts on the political are unable to disclose a necessary question about the common ground of friendship concealed in the conflictual movements of being in the *polis*.

For Schmitt, political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implies public hostility rather than private enmity.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ignifies a shared experience of the friend-enemy grouping without any personal sentiments of hatred (Schmitt 2007, 28–29 [n. 9]; PF, 87). Therefore, he sees that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war between states must be separated from factious antagonism of human beings; political communities can be enemies to each other while there is a friendship within each political community. Schmitt seems to presume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always offers a persistent basis of friendship among its own citizens. In contrast to Schmitt's presumptive argument, however, Derrida tries to investigate a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one's own friend in a private life can be a public enemy, and the enemy in a public sense can be a personal friend (Thomson 2005, 155).

In the varying interactions of everyday life, the absolute categoriz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is not possible. Moreover, it is always difficult for citizens to set a clear borderline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in the actual maintenance of a political regime. When the existing boundary of the state is open to foreigners, the public scheme of the friend/enemy grouping is often shaken by unpredictable movements of people such a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cf. Benhabib, 2004, 124; Honig 2000, 78–79). Derrida asserts that Schmitt as a legal theorist of the European tradition cannot but struggle against

this disputable margin of the jurisprudential framework of political existence (PF, 88). For Schmitt,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ogical purity of his legal standpoint from the existential necessity of the friend/enemy confusion.¹¹⁾

In this light, Derrida examines Schmitt's understanding of the Socratic distinction between war (*polemos*) and faction (*stasis*) revealed in Plato's *Republic* (bk. 5, 470a f.). Here, Socrates mentions that the possibility of war (*polemos*) emerges between Greeks and barbarians; the citizens of the Greek states are friends by nature while the barbarians outside the Greek civilization are enemies of the Greek political regimes as a whole. Interpreting this context of the Socratic discourse, Schmitt argues that for Plato, the wars among the Greeks themselves must be defined as factious struggles (*Kämpfe*) based on the personal hatred (Schmitt 2007, 29 [n.9]). Schmitt's interpretation assumes that Plato's philosophical doctrine already shows the radical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hostility (*polemios*) and the personal hatred (*ekhthros*). In the relevant part of the dialogue, however, Socrates also mentions that both the public war against barbarians and the private conflict among the Greeks are generated from the natural disposition of hatred (*ekhthros*) among human beings (*Republic* [Plato 1991], 470b). Thus, Derrida points out that the dialogic context of the *Republic* (bk. 5), which Schmitt cites in a partial sense, do not simply present the deterministic framework of the hostility (*polemios*) / hatred (*ekhthros*) distinction (PF, 90; cf. Thomson 2005, 155). Without seeking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Platonic dialogue, Schmitt supposes Socrates' momentary discussion of the war and faction as a real view of Plato (Schmitt 2007, 29 [n. 9]).¹²⁾

11) "The enemy is solely the public enemy [nur der öffentliche Feind], because everything that has a relationship to such a collectivity of men, particularly to a whole nation, becomes public by virtue of such a relationship. The enemy is *hostis*, not *inimicus* in the broader sense; *polemios*, not *ekhthros*" (Schmitt 2007, 28 [n. 9]).

Derrida recognizes that although Schmitt's theoretical approach is juridical, his ontological mode of thinking at least attempts to disclose a significant ground of the legal conceptions (PF, 153). The political power of the state *is* to maintain legality as such; thinking of the political should reveal the original basis of the juridical. Thus, Schmitt maintains that simple criticisms against his own conception of the public enemy and hostility cannot understand the deeper existential basis of his juristic conception (Schmitt 2007, 21–22). For Derrida, however, Schmitt's ontological approach fails to deal with the ancient question of being in the *polis*. In contrast to Schmitt's view, Socrates' own discussion shows that factious enmity among the Greeks also constitutes an inevitable problem of the *political* existence: the discordance of human beings within and without a political community can always occur as an illness of the human body does (*Republic*, 471b–c). Moreover, ongoing discussions between Socrates and Glaucon in the dramatic context indicate that Schmitt's own distinction of the hostile (*polemios*) and hateful (*echthros*) covers up Plato's original questioning about the problematic nature (*phusis*) of political friendship (*Republic*, 470d). The constant emergence of war and faction is interconnected with a shared ground of friendship that makes a great vision of the Greek civilization possible.

12) For Caputo, Derrida's critique of Schmitt contains a twofold insight into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political. On one hand, Derrida sees the necessity of the political relying upon the "logic of fraternization" that seeks a homogeneous way of life; on the other hand, he tries to show the open possibility of "something beyond" the political (Caputo 1999, 194). In this light, Caputo argues that Derrida suggests his own vision of politics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violence of sameness (Caputo 1999, 195). However, Derrida's philosophical intention is not to present his own politics but to disclose the irremovable problem of political existence.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attempts to disclose a deeper conception of being inherent in Schmitt's approach to the political. A metaphysical perspective of being can be found in Schmitt's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approach to the friend/enemy distinction.

The Greek people as a whole (*Hellenikon genos*) might be recognized as the human beings sharing a familial kinship or brotherhood which naturally differentiates themselves from others (*Republic*, 470c). But these remarks of the Socratic discussion cannot be read as a final view of Plato's philosophical approach to political friendship. Behind the necessary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lurks the inevitable movement of human disposition expressing a feeling of dislike for someone or something; the ambiguous ground of being with others constantly shows itself through the recurring sentiments of hatred among the differing human beings whether it is toward the fellow citizens or foreigners (*Republic*, 470c). Plato's thinking of the political existence reveals that the natural problem of personal animosity constantly affects the public discourse on the otherness of the foreigners. Thus, Derrida maintains Schmitt fails to confront a political question of the racial or national dispositions because they are already obscured in his legalistic scheme of hostility and friendship (PF, 91).

The dialogue between Socrates and Glaucon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questioning is not to display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ublic hostility and private enmity but to strive for the best-possible mode of coexistence (*Republic*, 472a ff.). Lemoine (2020) argues that in the *Republic*, the friend-enemy distinction is basically questionable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nses. For Lemoine, the Socratic discourse shows that human beings are often unable to determine true friends and enemies in their everyday life of the *polis*; in a discordant political regime, violent factions always tend to harm innocent fellow citizens simply to dominate their own regime and others (*Republic*, 335e, 373b f.; Lemoine 2020, 104). Socrates says that the factious enmity is a widespread disease of the Greek people who might be natural friends (*phusei philous einai*) (*Republic*, 470d). But Socrates' discussion of the natural community and its

pathology further raises a significant question about a deeper ground of political friendship: Who *is* a true friend in the political sense? This Socratic questioning leads to Derrida's discussion of Plato's *Menexenus* which contains fundamental problems of political friendship.

IV. Plato's *Menexenus* and the Ambiguous Ground of Political Friendship

Plato's *Menexenus* is full of the commonplace patriotic eulogy for Athens as a leader of the Greek civilization. But this Platonic dialogue starts from Socrates' sarcastic remarks about great rhetorical skills of democratic orators. In the beginning of the dialogue, Socrates introduces the original speech of Aspasia (Pericles' foreign mistress) who might be a true author of Pericles' renowned funeral oration praising the Athenian democracy and the Greek civilization (*Menexenus* [Plato 1929], 236b). For Derrida, this dramatic character of "fiction-in-a-fiction" implies Plato's subtle design of the *Menexenus* as a dialogue of the Socratic irony (PF, 92 f.). For Lemoine, it is important to illuminate the dramatic context of the *Menexenus* portraying Socrates' recitation of the foreigner's speech that hails racial supremacy of Athenian citizens. Lemoine maintains that as Socrates mentions Aspasia as the true speech writer, the readers must think about a "gadfly-like effect" of the foreign mistress' speech and Socratic irony of the imitative political rhetoric (Lemoine 2020, 134).

These literary aspects require us to carefully reflect upon Socrates' philosophical intention to reproduce Aspasia's discourse and its rhetoric. Derrida maintains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of Aspasia's speech is its

hasty argument for homogeneity of the Greek people based on their common kinship (*suggeneia*) (PF, 92; *Menexenus*, 244a). For Aspasia, the natural affinity stemming from birth is a firm ground of the Greek friendship which forms and sustains their political communities. But Derrida suggests that the sarcastic mood of Socrates at the beginning of the dialogue allows us to question whether Aspasia's rhetoric for the genealogical tie of political friendship shows a truth of political existence or a phantasm of the Greek tradition (PF, 92). The dramatic context of the *Menexenus* already problematizes the political friendship based on ethnicity or nativism, which constitutes a customary belief in the natural superiority of the Athenian people (237a f.).

The Greek nation as a whole can achieve a great community of friendship only by overcoming a widespread factional strife (*stasis*) among themselves. Thus, Aspasia argues that the Greek factions are not originated from their natural hatred but from historical misfortune (*dustuchia*) (244b). In Aspasia's accustomed view, this factious struggle among the Greek people displays temporal illness of political existence harming their own virtue and friendship. Without questioning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political friendship, she simply asserts that the Greek people are friends because they belong to the same living stock; this ethnic root enables them to share a common way of life and forgive the historical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each other (244b). Thereby, Aspasia's discourse betrays an unquestioned faith in their "nobility of birth (*eugeneia*)", i.e. a conventional scheme of Greek racism (237b). This racial belief of Aspasia can be traced back to the Greek myth of autochthony that deifies a native community of people born in the same land (cf. Thomson 2005, 20). Here,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confronts a problematic confusion of natural brotherhood and political equality. The mythical doctrine of autochthony can be

easily mixed up with a democratic perspective of fellow citizens seeking equality of birth (*isogonia*); at the same time, the shared belief in equal birth leads to a political demand for the legal equality of the Athenian people (*isonomia*) (PF, 93; *Menexenus*, 239a).

Furthermore, Aspasia's funeral speech simply attempts to praise the Athenian polity based on a paradoxical combination of nature (*phusis*) and custom (*nomos*). Her rhetoric of political friendship displays a historical celebration of the forefathers who died for the Athenian brothers in the battle. For Derrida, Aspasia's speech (*logos*) fancifully describes the deceased ancestors as a living power that enables the descendants to keep their own way of life as a virtuous one (PF, 94). Aspasia asserts that the Athenian forefathers were not strangers from the outside but the 'offspring of the soil' (237c); political existence of the Athenians has been rooted in their own land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In this sense, their noble tradition has grown from a natural ground of the soil and blood, which can continually secure their own modes of coexistence based on good birth (*eugenia*) (236e; 237b). Thereby, Aspasia's fictional logic of the homogenous community betrays a political difficulty that must combine two conflicting values, i.e. aristocratic virtue of historical tradition and democratic equality of natural brotherhood: "the one principle of selection is this: the man that is deemed to be wise or good rules and governs. And the cause of this our polity lies in our equality of birth" (238e). But Aspasia's rhetoric covers up the politico-philosophical question of how to harmonize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aristocratic hierarchy and democratic egalitarianism in everyday life; it merely tries to display a firm belief in the natural superiority and fraternity of the Athenian people decorated with the fanciful history of their ancestors' virtue and nobility.

Appropriating the mythical belief in the Athenian predecessors, Aspasia's rhetoric attempts to transform history into a natural condition of their own freedom, equality and brotherhood. This fantastic doctrine of political friendship does not allow the fellow citizens to think about the limited ground of their own being concealed from the alleged racial superiority. Particularly, their democratic faith in the noble brotherhood makes them overlook the open possibility of welcoming others as new members of their own community. In this light, Derrida sees that Aspasia's discourse already falls in a forgetfulness of the genuine possibility of being with others; Socrates' satirical imitation of Aspasia's speech intends to reveal how the popular rhetoric of democratic fraternity prevents citizens from questioning the manipulative aspect of the conventional eulogy for their own citizenship (PF, 100). Aspasia merely declares that the noble nature of the Athenian people has existed from the beginning, allowing them to fight for freedom against the enemies within and without the Greek communities (239b).

But Aspasia's speech does not explicate a questionable origin of the factional conflicts among the Greeks and how to handle the civil war (*stasis*). While simply enumerat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Greeks' war against others, Aspasia's oration does not allow her audiences to reflect upon the recurrent possibility of the war among the Greek brethren and fellow citizens. Before delivering the Aspasia's speech, Socrates remarks about the fancy rhetoric of the funeral oration which simply aims at affecting the public minds to praise their political affairs instantly (235d). Kasimis (2016) argues that careful interpretation of the Platonic dialogue discloses a philosophical into political secrets concealed in the historical reality of a polity. Particularly, the Socratic discourse of Athenian autochthony indicates not simply the necessary impact of

a “biological fact” but a “fictional ideal” of how to control civic life in the Athenian situation (Kasimis 2016, 352). In this light, Derrida maintains that while carefully displaying the seeming eloquence of the Aspasia’s speech, Socrates denounces her rhetorical skill that merely intends to flatter the widespread expectations of the democratic multitude (PF, 102; *Menexenus*, 236b).¹³ Disclosing the classical problem of political friendship,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lets us reconsider Plato’s complicated approach to the questionable ground of being in the *polis*.

In light of the dramatic context of the *Menexenus*, it is hard to follow Schmitt’s view of the classical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enemy and the private one as a political doctrine of Plato. Rather, the Socratic discussions of war (*polemos*) and faction (*stasis*) subtly disclose an ambiguous ground of the political friendship, which contains a paradoxical combination of nature (*phusis*) and law (*nomos*) (cf. Strauss 1978, 117). For Derrida, profoundly inscribed in the ancient political belief is the collective sentiment of friendship as brotherhood, rather than ontological determination of the public enemy; the customary belief in the natural brotherhood is still contained in the contemporary doctrines of democracy, “where a tradition thus tends of itself to break with itself” (PF, 103; cf. Derrida 2005, 38). In this light, we need to reconsider the classical ground of modern democracies that proclaim universal ideals of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13) Here, Derrida confesses that his “deconstructionist” approach still belongs to a certain classical heritage of the Platonic irony (PF, 102).

V. The Classical Problem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Political Existence

In the *Menexenus*, Aspasia's political rhetoric depends on the questionable historical tradition, simply trying to establish the Athenian people as the best nation sharing natural equality of noble birth (238e). Her fanciful claim of the national superiority and kinship is deeply connected to the democratic striving for civic equality before the law; the actualization of noble democracy needs a mythical doctrine of political friendship as an ideological basis of being in the *polis* (Thomson 2005, 19).¹⁴ For Derrida, the modern concep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conceals this classical problem of natural fraternity while constantly arguing for universal ideal of human rights for all nations (PF, 99). The popular attachment to their own community involves personal sentiments of cherishing their own way of life and defending it against foreigners (Benhabib 2004, 46). Schmitt's view of the political misses a crucial dimension of the democratic reality: a democratic people and their leadership cannot easily distinguish public enmity from private hatred (cf. Honig 2001, 81, 91). Popular enthusiasm for democratic friendship makes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 private hatred against others from public hostility. In Derrida's view, no concept of the political including democracy 'has ever broken with the heritage of this

14) Thomson (2005) argues that Derrida's discussion of political friendship uncovers the questionable ambiguity inherent in the contemporary conception of friendship. The open possibility of universal friendship clashes with the "logic of fraternization" based on the necessity of preferring one's own friends to others and designating them as brothers (Thomson 2005, 16). According to Thomson,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intends not to emphasize the impossibility of friendship but to reveal the ongoing question of fraternization that is "always already at work within friendship" (Thomson 2005, 17).

troubling necessity' (PF, 100; cf. Derrida 2005, 39).

There are always passionate movements of the democratic appeal to fraternity of a native community (Derrida 2005, 61; cf. Benhabib 2004, 206). As long as the fellow citizens of democracy remain faithful to living memories of forefathers and mythical traditions of noble birth, their general claims for freedom and equality are limited to a determinate boundary of their own way of life. In the *Menexenus*, Aspasia's praise of the Athenian regime reveals a problematic ambiguity wavering between aristocratic passion for the rule of the best and democratic conviction of civic equality. According to her, although Athens is the same polity from the beginning, "one man calls it 'democracy,' another man...gives it some other name; but it is, in very truth, an 'aristocracy' backed by popular approbation" (238d). Aspasia's discourse suggests that the genuine power of democracy is generated from the virtuous rule of the wise men approved and elected by the multitude. Here, Derrida sees the problematic authority of democratic majority trying to control "the most part of civic affairs" while depending on the aristocratic selection of ruling offices (PF, 101; cf. Derrida 2005, 33–34). The democratic power of the multitude *is* already and always in tension with the aristocratic rule of the best men. Aspasia's discourse attempts to resolve this ongoing tension of the Athenian polity by arguing for the natural equality of birth applying to the whole citizens as brothers (239a f.).¹⁵⁾

For Derrida, Aspasia's hesitation to define the Athenian polity as democracy

15) Loraux (2000) argues that the myth of autochthony constitutes a core political ideology of the Athenian democracy. According to her, the myth provides the Athenian people with a democratic identity while educating them as natural guardians of the fatherland with strong patriotic feelings (Loraux 2000, 34). From this mythical ground of the Athenian regime, Derrida's thinking discloses a questionable aspect of democratic coexistence.

reveals an inevitable difficulty to uphold a noble regime with the political consent of the many (PF, 101).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 virtuous community must be based on the friendly relationship of fellow citizens, it is hard to achieve the mutual affection of the citizens as a whole. Thus, Derrida sees that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majority tends to make the aristocratic rule depend on a populist doctrine of equal birth (*isogeny*) combined with the egalitarian claim to legal equality (*isonomy*) (PF, 103). The equivocal mixture of aristo-democratic conceptions revealed in the *Menexenus* illuminates Plato's classical insight into the enduring problem of democracy. While contemporary democratic regimes attempt to set an ideal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 actual operation of democracy tends to retain the mythical doctrines of native community as a reliable basis of civic friendship (Benhabib 2004, 44, 216). The democratic way of life is still rooted in the fabricated beliefs in the noble nature of a democratic people superior to other nations, constantly invoking the question of the autochthony (cf. Loraux 2006, 194).

Derrida's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problem of democracy allows us to review a limited framework of the Schmitt's modern conception of the political. Without rigorously investigating the permanent question of political friendship, his conception of the political based on the public enemy can be easily entrapped to an exclusive doctrine of fraternity and hatred against others. The humanitarian ideal of democratic brotherhood often conceals a mutual affection toward one's own people as familial beings within a political community. In terms of the Schmitt's thinking of the political, however, these phenomena of the friendly sentiments do not form a pure meaning of the political existence. For Schmitt, the political way of being with others must be grounded in the constant possibility of war against the public enemy. But in everyday life, the

possibility of the friend/enemy grouping cannot separate itself from the popular dispositions which involve both individuals' affection for one's own people and their personal hatred of strangers. In contrast to Schmitt's view, this emotional and private temperament of the fraternity and enmity must be considered as an existential ground of the political.

The daily attitude and opinion of a people against the political enemy is often generated from customary moods of their own friendship rooted in a communal way of life (cf. Honig 2001, 79; Thomson 2005, 18–19).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indicates that only when tackling these broader questions of political friendship, we can search for new possibilities of democracy and the political (PF, 104).¹⁶ The philosophical approach to political existence must confront a questionable basis of the shared modes of everyday life. The actual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 political regime require popular admiration for its homogeneous way of life based on a familial membership rather than sovereign decision of the public enemy. But popular discourses of the political friendship are always and already exposed to the philosophical questioning about a true ground of human coexistence. For Derrida, therefore, his deconstructive approach to the dominant and exclusive faiths in the democratic community is not simply to demolish the national confidence of fraternity but to think about the recurrent *problem* of the political need of friendship (PF, 105). The critical attitude of philosophical questioning must challenge the historical ideals of democracy, trying to uncover open possibilities of democracy concealed from the alleged homogeneity of democratic regimes.

The genuin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seeks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16)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also reveals a recurring difficulty of the so-called "deconstructive" approach to an open possibility of "democracy to come" (PF, 104).

and limit of being with others, in which a certain group of human beings constantly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s. For Derrida, the inevitable aspect of *différance* (differing and deferring) of the political friendship signifies a primordial movement of otherness (heterogeneity) prior to the linguistic or legalistic framing of the communal identity (homogeneity) (Derrida 2005, 38, 48–49; cf. Thomson 2005, 24–25). In his view, the authentic possibility of democracy can be revealed only when human beings recognize the underlying force of *différance* producing the *other* possibilities of democracy, i.e. “democracy to come” (Derrida 2005b, 8, 38–39; cf. Caputo 1999, 186, 191). In this light, we can see how Plato’s political philosophy still keeps lively resources of critical thinking about the questionable ground of democratic friendship. As seen above, Socrates’ ironical description of the Aspasia’s contradictory speech allows us to see the limited boundary of democratic equality and fraternity (PF, 105). The paradoxical movement of democracy vibrating between the closedness and openness of political existence signifies an inevitable problem of being with others. For Derrida, the Platonic dialogue reveals how the necessary tension of democratic friendship generates a self-overcoming power of human thinking which can go beyond a public determination of the friend/enemy grouping (PF, 106). In this light, the ambiguous nature of political friendship leads to a deeper philosophical question of friendship as such, i.e., who the genuine friend is.

VI. Plato’s *Lysis* and the Open Question of Friendship

The meaning of friend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of 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 For Aristotle, friendship (*philia*) is a core ground of justice

that supports the best-possible regime (NE, 1155a 25). But what is friendship as such? Is it possible to define the truth of friendship? Derrida's critical thinking of this problem starts from Diogenes Laertius' report of Aristotle's enigmatic remarks on friendship: "Oh friends, there is no friend" (PF, vii; Laertius 1959, bk. 5, sec. 21). Dallmayr argues that Derrida's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friendship is based on his critical view of ancient philosophy as a limited mode of thinking that reduces the other to sameness (Dallmayr 1999, 119).¹⁷ But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intends to reveal a classical insight into the ambiguous situation of the human striving for friendship without knowing the truth of it (PF, ix; Derrida 2016, 24). Derrida maintains that Aristotle's enigmatic saying about friendship keeps a dialectical questioning of Plato's *Lysis* (PF, 6). This Platonic dialogue provides a permanent question about the nature of friendship, showing varying possibilities of approaching the being of friend. Derrida sees that the equivocal modes of Plato's philosophical questioning signify the necessary difficulty of knowing *who* the genuine friend *is* (PF, 6). In this light, the Platonic approach to friendship gives us a challenging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problematic ground of being with others.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intends to reveal from the Platonic philosophy an open question of friendship beyond the modern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ccording to Derrida, the beginning of the *Lysis* contains a dramatic scene in which Socrates asks a shy youth (Hippothales) the identity of his loved

17) Similar to Dallmayr's criticism, Ludwig (2010) argues Derrida's view of the *Lysis* illuminates only a partial dimension of the Platonic dialogue. According to him, Derrida's thinking approaches the ancient philosophy of friendship in terms of the limited framework of otherness, removing the deeper meaning of sameness from friendship as such (Ludwig 2010, 144).

one (*Lysis* [Plato 1925], 204b f.). But Hippothales does not want to reveal his own secret to Socrates. For Derrida, this dramatic context of the *Lysis* shows that the truth of friendship is hard to be publicized (PF, 85). It reminds us that for Schmitt, the real sense of the political is based on the public conception of the friend/enemy distinction. But the public and private characters of friendship and hostility cannot be articulated in a distinctive way; human beings cannot determine who the enemy is without identifying who the friend is (cf. PF, 153). For Plato, therefore, the ambiguous nature of friendship reveals itself not as an object of public decision but as a recurrent question about the being of one's own.

In the beginning of the *Lysis*, Socrates' careful discussion about the truth of friendship starts from Ctesippus' disclosure of the name of "Lysis" as the loved friend of Hippothales (204d). The genuine approach to friendship is made possible by a cautious attempt to recognize one's own friends and to speak with them, rather than by a proclamation of the friend/enemy grouping. Socrates mentions that human beings tend to have a "desire (*epithumia*)" for friendship when they need help from others (*Lysis*, 220 c). The natural emergence of the longing for friendship implies the limit and deficiency of human existence;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is originated not simply from the self-interests of human beings but from the naturally "deprived state (*endeos*)" of being in the world (221e). The restricted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constantly reproduce the mood or disposition of uneasiness in everyday life (cf. Heidegger 1962, 172–173, 228 f.). For Derrida, this primordial experience of shortage and anxiety makes human beings attracted to what is immediately suitable or familiar (*oikeios*) to them; human beings tend to seek a friendly basis of being with others within limits (PF, 154; cf. Sokoloff, 2005, 349–350). In this light, it is

notable that at the end of the dialogue, Socrates discusses the question of belongingness (*oikeiotēs*; suitability or familiarity) as a possible bond of friendship (*Lysis*, 222a f.). Derrida points out that the Socratic discourse of natural kinship or familiarity reveals the “home or hearth (*oikos*)” as a problematic basis of friendship (PF, 154; cf. Heidegger 1996, 105–109). The Platonic thinking of friendship ultimately confronts the finite ground of being with others, in which the human beings recurrently strive for the domesticity and close acquaintance with one’s own neighbors (cf. *Symposium* [Plato 1925], 205e).

Plato’s insight into the questionable relationship of friendship (*philia*) and familiarity (*oikeiotēs*) provokes Derrida’s own approach to the open possibility of friendship. Is there another basis of friendship to be disconnected from the natural affinity to one’s own? For Derrida, the radical questioning about the *other* mode of friendship without hearth can shake the traditional doctrine of friendship with domesticity and homogeneity (Ludwig 2010, 144). Ludwig maintains that although Derrida’s analyses of the *Lysis* display a certain ontological insight into the classical question of friendship, his limited perspective of otherness betrays “a tension with his desire for universal friendship” (Ludwig 2010, 145). But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seeks to uncover a questionable ground of the tension between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being inherent in the nature of friendship. For Derrida, the other way of questioning is not to suggest a simply new way of searching for the so-called postmodern friendship beyond the classical question of friendship (cf. Dallmayr 1999, 121; Ludwig 2010, 146). Rather, he suggests that the permanent problem of friendship is already implied in the dramatic context of the *Lysis* that does not determine the meaning of friendship as such.

Here, Derrida pays attention to Socrates' subtle distinction between the belonging (*oikeion*) and the like (*homoion*) (222c). What belongs to a certain group of human beings makes them feel a certain sense of familiarity; however, our sense of belongingness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the sameness or homogeneity of individual members (PF, 155). The belongingness cannot remove the difference or otherness of friendly individuals although they might be accustomed to a shared ground of political life. There *are* always certain beings whom we might call and name "friends" when we strive for a harmonious way of living with others. But we are not always sure of the truth of their being. At the end of the dialogue, Socrates declares an inevitable difficulty to grasp the essence of friendship: "Well, Lysis and Menexenus, we have made ourselves rather ridiculous today...[T]hough we conceive ourselves to be friends with each other...we have not as yet been able to discover what we mean by a friend" (*Lysis*, 223b). If we were not able to determine the true meaning of friendship, it would be also hard for us to believe in the true enemies of our own community.

VII. Conclusion

In these days, many political theorists argue for democratic innovations to overcome the contemporary crisis of democracy. They claim that the institutional reforms of civic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liberation are necessary to deal with the challenging problem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pulism (Kim and Seo 2021, 54–55). But successful democratic innovations require us to understand above all a deeper ground of the democratic crisis that has been

related to the far-right movements of populist democracy. Without tackling the nature of the right-wing extremism to exclude others from political community, it might be useless to make various efforts to reform democratic institutions with a more active mode of civic engagement. The far-right movement of populist parties can easily lead to a more severe polarization of democratic partisanship rather than to the increase of civic friendship within a political regime (cf. Jo 2024, 65–66).

Derrida's interpretive thinking of Plato reveals that the current democratic crisis, which tends to exclude others coming from different political communities, is not a momentary problem of contemporary global politics. Rather, the cause of this crisis is deeply inscribed in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which needs to maintain itself with a restricted sense of civic friendship in a particular political regime. Thus, Derrida's thoughts on the Platonic question of friendship allow us to approach the necessary boundary of democratic regime in a more careful and realistic sense: the democratic crisis of far-right movements cannot be simply removed by recurring enforcements of liberal policies or "democratic iterations" (cf. Benhabib 2004, 175; 178–180).

In this light, Derrida recognizes that Schmitt's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discloses a necessary limitation of political community based on the friend/enemy grouping. The possible existence of a public enemy might effectively lead citizens of a political regime to unite and protect themselves from the constant threat of war and hostility. However, Derrida also sees Schmitt's illiberal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existence contains significantl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olitical existence: a political community cannot maintain itself without constantly searching for the genuine possibility of harmonious coexistence based on friendship. The political regime exists not only

for securing a people's survival from the war and factional conflicts but for constituting their best-possible mode of living with others. But it is always difficult to unite different individuals into a people sharing a democratic way of life peacefully. The Socratic irony of the *Menexenus* shows that the traditional belief in democracy tends to seek a mythical basis of the equal, friendly and harmonious citizenship; this mythological view of democracy often includes the natural brotherhood sharing aristocratic virtue of forefathers with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For Derrida, this confused doctrine of democratic membership tends to form an exclusive basis of the political regime without questioning the true meaning of friendship (PF, 106).

Plato's classical approach to the truth of being confronts a fundamental problem of friendship in terms of being in the *polis*. The political life of human beings must be grounded in a necessary boundary of their own community; they must face challenging questions of who the genuine friends are within and without the political regime. But the political decision of the "we" always involves a recurrent question about the true basis of friendship to be shared by fellow citizens (cf. Dallmayr 1999, 120–121; 126; Sokoloff, 2005, 350–351). Derrida sees that the irremovabl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genuine ground of friendship implies the recurring movement of *différance*, i.e. the differing and deferring modes of being with others; the possibility of *différance* is prior to "all organized *socius*, all *politeia*, all determined 'government' before all 'law'" (PF, 231). The primordial emergence of *différance* signifies not an arbitrary groundlessness of beings but a deeper ground of being that enables the legal decision of friendship or hostility possible (Derrida 2004, 73).

The political distinction between friend and enemy is originated from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on based on otherness (Derrida 1984, 22). Therefore,

the existential basis of friendship cannot be simply created and maintained by the universal doctrines of democratic fraternity. In this sense, Derrida lets us see that the Socratic discussion of the Athenian regime and Greek friendship (*philia*) contains open possibilities of thinking about the recurrent problem of democracy. The satiric mood of the *Menexenus* reveals the critical limitation of the customary eulogy for political friendship based on the aristocratic origin of democratic fraternity and homogeneity. The *Lysis* further shows the fundamental difficulty of defining friendship as such. For Derrida, Plato's thinking of fraternity and friendship signifies not an old metaphysical view of political harmony but a persistent insight into the irremovable movement of otherness "*at the root of democracy*" (PF, 232). Indeed, the original thinking of Plato allows us to seriously confront the problematic ground of contemporary democracy that might reproduce the exclusive and chauvinistic conception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the name of civic brotherhood. Thereby, the classical approach to friendship still indicates a permanent question of political existence behind the populist movements that simply acclaim for a "democracy of our own" (Derrida 2005b, 87).

References

- Aristotle. 1934. *Nicomachean Ethics*. Trans. H. Rackh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nhabib, Seyla. 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chot, Maurice. 1987. "A Letter to Salomon Malka," *L'Arche* 373.
- Caputo, John. 1999. "Who is Derrida's Zarathustra? Of Fraternity, Friendship, and a Democracy to Come." *Research in Phenomenology* 29(1): 184-198.
- Dallmayr, Fred. 1999. "Derrida and Friendship."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2(4): 105-130.
- Derrida, Jacques. 1984.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acques. 2004. *Of Hospitality*. Trans. R. Bowlb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rrida, Jacques. 2005a. *The Politics of Friendship*. Trans. G. Collins. London: Verso.
- Derrida, Jacques. 2005b. *Rogues: Two Essays on Reason*. Trans. P.-A. Brault and M. Naa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rrida, Jacques. 2016. *Of Grammatology*. Trans. G.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athaigh, Cillian'O. 2024. "Democracy, Community and the Supplemental Plus Un: Derrida's Reading of Blanchot's *The Unavowable Communit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50(3): 491-506.
- Goh, Irving. 2011. "Rejecting Friendship: Toward a Radical Reading of Derrida's Politics of Friendship for Today." *Cultural Critique* 79(1): 94-124.
- Heidegger, Martin. 1962.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and E.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 Heidegger, Martin. 1996. *Hölderlin's Hymn "The Ister"*. Trans. W. McNeill and J.

- Davi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eidegger, Martin. 2000.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rans. G. Fried and R. Pol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nig, Bonnie. 2000. *Democracy and the Foreign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go, Victor. 1867. "Introduction au Paris." In *Guide de l'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 Paris: Librairie Internationale.
- Jo, Gye-Won. 2024. "The Democratic Value of Partisanship."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17(1): 63–89.
- Kasimis, Demetra. 2016. "Plato's Open Secret."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15(4): 339-357.
- Keitner, Chimène. 2007. *The Paradoxes of Nationalism: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Meaning for Contemporary Nation Build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im, Joohyung and Hyeonsu Seo. 2021. "A New Conceptualization and Typology of Democratic Innovations: Between the Recovery and the Reinvention of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14(3): 53–95.
- Laclau, Ernst.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Laertius, Diogenes. 1959.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Vol. 1. R. Hick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moine, Rebecca. 2020. *Plato's Caves: The Liberating Sting of Cultural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raux, Nicole. 2000. *Born of the Earth: Myth and Politics in Athens*. Trans. Selina Stewar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raux, Nicole. 2006. *The Invention of Athens: The Funeral Oration in the Classical City*. Trans. A. Sheridan. New York: Zone Books.
- Ludwig, Paul. 2010. "Without Foundations: Plato's *Lysis* and Postmodern Friend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134-150.

- Mouffe, Chantal. 2005. *On the Political*. Abingdon: Routledge.
- Plato. 1925. *Lysis. Symposium. Gorgias*, Trans. W. Lamb.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to. 1929. *Timaeus, Critias, Cleitophon, Menexenus, Epistles*, Trans. R. B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to. 1991. *Republic*. Trans. A. Bloom. New York: Basic Books
- Reynolds, Jack. 2010. "Derrida, Friendship and the Transcendental Priority of the 'Untimel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6(6): 663-676.
- Safran, Willam. 1991. "State, Nation,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France as a Test Cas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2(3): 219-238.
- Schmitt, Carl. 2007.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rans. G. Schwab.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koloff, William. 2005. "Between Justice and Legality: Derrida on Decis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8(2): 341-352.
- Spicker, Paul. 2006. *Liberty, Equality, Fraternity*. Bristol: The Policy Press.
- Strauss, Leo. 1978. *The City and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son, Alex. 2005. *Deconstruction and Democracy: Derrida's Politics of Friendship*. London: Continuum.
- Waghid, Yusef. 2008.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Friendship Revisited."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7(2): 197-206.
- Zembylas, Michalinos. 2015. "Derrida, Foucault and Critical Pedagogies of Friendship in Conflict-Troubled Societies." *Discourse* 36(1): 1-14.

투고일: 2024.06.17. 심사일: 2024.08.09. 게재확정일: 2024.08.09.

우정,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편한 관계: 데리다의 『우정의 정치학』에 나타난 플라톤적 존재론의 정치적 문제들

이상원 |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데리다의 『우정의 정치학』에 나타난 플라톤 대화록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정치적 존재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본고는 데리다의 해석적 사유가 정치적 우정과 민주적 우애에 내재한 인간 공존의 고전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 개념이 가지는 해체주의적 개념화에 초점을 두어, 그의 사유 방식에 내포한 존재에 관한 고전적 질문들과 정치적 접근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는 『우정의 정치학』에 대한 밀착 독해를 통해 데리다의 우정(friendship)과 우애(fraternity)에 관한 사유는 무엇보다 고대철학적 사유에 담긴 정치적 존재의 모호한 본성을 드러내고자 의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그의 플라톤 대화록 해석은 민주적 공존의 문제적 기반을 규명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연적 형제애를 증시하는 관습적 교리와 분리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벌린의 사상을 중심으로*

김민혁 | 경희대학교**

조대근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의 시기, 자유사회 안팎의 위협에 맞서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反)극단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의 온건하고 절제된 지평에 대한 검토가 오늘날 자유주의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심화되는 이념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논문은 다음의 분석을 전개한다: 먼저, 우리는 ‘냉전 자유주의’ 개념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기의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 냉전 자유주의, 전후시기(post-1945), 이사야 벌린, 반(反)극단주의, 정치적 온건주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466). 이 글의 초고는 2024. 5. 3.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공동주최한 <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경민 교수님, 그리고 투고본을 읽고 사려깊은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제1저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commongood@me.com

*** 제2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chodk0614@gmail.com

1. 서론

이념적 양극화의 심화와 타협적 정치문화의 실종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차대전과 전간기(the interwar period)에 표출된 극단주의적(extreme)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후 시기(post-1945)에 형성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규범적 권위 또한 — 공공연하게 비(非)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운동의 전 세계적 약진에서 확인되듯 — 상당한 침식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위기담론이 새롭게 대두해왔고, 이러한 담론을 주도한 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은 현대 자유주의에 내재한 근본적 한계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후 냉전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당대 자유주의자들의 편협하거나 왜곡된 지향을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Brenes and Steinmetz-Jenkins 2021; Deneen 2018; Moyn 2023; Rosenblatt 2023).¹⁾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전후 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로 귀속시키려는 (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의) 이같은 시도는 이 시기의 자유주의 전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사상사 연구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며 최근 거대한 논쟁이 형성되고 있다.²⁾ 이같은 반론의 대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가들이 범하고 있는 단순화의 오류와 탈맥락화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20세기 중반의 전후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넓고 복합적인 지평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당대의 이념적 극단주의, 전체주의와 냉전체제, 역사적 트

-
- 1) 이 글에서 ‘전후(시기) 자유주의’ 혹은 ‘냉전(시기) 자유주의’라는 표현으로 서술되는 자유주의 전통은 2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을 지칭한다.
 - 2) ‘자유주의의 위기’ 담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 및 자유주의 전통을 다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최근의 정치사상사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김민혁(2023)의 최근 논문을 참고.

라우마 등에 맞서서 온건한 형태의 자유주의 전통을 모색했던 이사야 벌린이나 레이몽 아롱, 라인홀드 니부어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사유와 실천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Craiuțu 2017; Cherniss 2021; Müller 2008; 2019; Stewart 2020).³⁾

전후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상반된 두 시각 사이의 논쟁은 현시점에서 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논쟁의 지형을 균형있게 이해하고 냉전과 자유주의 전통의 발전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은 냉전과 이념갈등의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문화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자유사회를 향한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냉전질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전후시기의 복합적인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 특히 사상사적 관점에서 — 국내 학계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⁴⁾ 이 논문은 이같은 연구사적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⁵⁾

한국의 자유주의 수용 및 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이 지적해왔듯(김

- 3) 이 글에서 지칭되는 ‘온건한’(moderate) 성향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명료하게 규정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극단주의’(extremism)로 지칭되는 당대의 과격한 이념적 열정을 경계하고 비판하며 일정한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등을 강조했던 유연한 형태의 규범적·윤리적 태도 및 감수성의 차원을 의미한다.
- 4) 예컨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이사야 벌린에 관한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형태의 사상사 연구는 최근에서야 가시화되고 있다(e.g., 박동천 2020; 유홍림 2019; 전보람 2023). 그리고 벌린과 동시대를 살았던 주요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레이몽 아롱, 아서 슐레진저 등에 관한 정치사상(사)적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라인홀드 니부어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도 전재성(2005)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에 오늘날 보수적 시장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 그러나 전후 자유주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미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였던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폭넓게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국내의 담론의 지형이 일정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 5)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수용 및 그 취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로는 최장집(2011, 69-72)을 참고할 것.

동춘 2021; 문지영 2011; 이나미 2021), 해방 이후에 전개된 전 세계적 냉전질서와 한반도의 전쟁 및 분단체제는 우리 현대사에서 자유주의가 ‘반공’이라는 이념적 굴레에 속박된 형태로 왜곡되어 이해되고 실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한국사회의 대대적인 사회적·경제적 구조재편과 이에 따른 갈등 및 혼란은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혹은 편향된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요컨대,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발전한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는 반공이념과 자유시장경제, 개인주의적 문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편향성과 교조성의 위험을 내포한 전통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하지만 전후시기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실제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은 이같은 단순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전통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어서) 교조주의와 유토피아주의적 사고가 널리 퍼져있던 전후 냉전시기의 분위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맞서 반극단주의와 타협, 열린 태도와 유연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을 중심으로 형성된 — 전후 자유주의의 온건하고 유연하며 다원주의적인 전통이다. 오늘날 ‘냉전 자유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잊혀지거나 오해되고 있는 이같은 지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 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냉전적 맥락과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 사이에는 ‘반공’이라는 단순화된 이념적 지향점으로는 설명불가능한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반극단주의를 지향한 전후 자유주의 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전투적 사고에 기반한 반공 이념투사들과는 달리, 벌린을 중심으로 한 온건한 형태의 전후 자유주의는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6) 마이클 왈저가 지적하듯,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용어로 묘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인다(Walzer 2023, 1).

비판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에 기초한 회의주의, 신중함, 온건함 등의 태도를 내세웠다. 이념적 좌·우의 극단주의를 모두 체험한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극단주의와 전체주의가 가치의 다원성을 무시한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의 ‘완벽한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열망이 야만적인 폭력과 잔혹함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Aron 2022; Berlin 1997; Popper 1986; Shklar 1998). 일원론적 세계관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실천들에 대한 반발로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세상에 는 옳고 그름으로 양분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가치들 사이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특히나 약자에 위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개인의 자유에 있어 일정한 불가침의 영역을 수호하고, 다원적 가치들 사이에 보상과 화해와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Berlin 2014, 414-423).

둘째, 극단주의에 맞선 전후 자유주의 전통은 이념에 매몰된 경직된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를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라는 절제된 이상을 추구했다. 이념에 대한 독단주의적 태도에서 형성되는 광신주의를 혐오한 전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념에 대한 맹신에 저항했다. 그리고 이들은 독단주의적 이념의 광신성과 폭력성에 반대하며, 추상적인 이념에 헌신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회적 문제들(e.g. 빈곤, 문맹률, 실업과 경제공황 등)을 민주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우선시하였다(Aron 2022; Berlin 2013b; Popper 1986). 이와 같은 당대의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의 태도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절대적 신조로 삼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념적 경직성과 대비를 이룬다.

셋째, 온건함을 지향한 전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기풍(ethos) 혹은 감수성(sensibility)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발전시켰다.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지양하며, 이들은 앞서 서술한 온건함과 신중함을 자유

주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덕성(virtue)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지향은 추상적이고 인공적인 개념들의 설계를 통해 이상적 세계(ideal state)의 모습을 제시하는 자유주의 내부의 또 다른 전통과 차별화된다. 완벽하게 설계된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운영에 따라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기풍에 대한 논의도 제도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자유사회에 대한 지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 세계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주의적 문화와 기풍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정치문화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좌·우 전체주의 체제뿐 아니라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했던 일군의 사상가들, 그중에서도 이샤야 벌린을 중심으로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형성되었던 반극단주의 성향의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사이의 극심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인해 열린사회의 가치가 서구사회의 안과 밖에서 실존적 위협을 받던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절제되며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하나로 벌린이 남긴 핵심적 기여는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큰 함의를 가진다.⁷⁾ 특히 우리는 벌린이 전후시기에 제시한 자유주의적 감수성과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실천적 문제의식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우리는 벌린과 유사한 문제의식 및 지향점이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와 아서 쉘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 레이몽 아롱

7) 전후시기에 벌린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주요 지식인으로는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 그리고 호주와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칼 포퍼, 그리고 동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일본의 마루야마 마사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는 필자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놓으며, 이 논문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주 무대였던 미국과 영국에서 온건한 자유주의 전통을 주도했던 벌린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Raymond Aron) 등과 같은 당대의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상당부분 공유되고 실천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논문에서 ‘온건한 성향’의 전통으로 지칭하는 전후 자유주의의 한 갈래가 유의미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냉전 자유주의’를 둘러싼 담론 및 최근의 논쟁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이 시기의 반극단주의적이고 온건한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별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당대의 자유주의 전통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지향했던 자유주의적 감수성과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 그리고 반(反)유토피아적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결론(IV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며, 별린의 중심으로 한 반극단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이 현재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구체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냉전 자유주의: 개념, 논쟁, 함의

20세기 중반의 전후 서구사회에서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을 둘러싼 오늘날의 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용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최근 십수 년간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전개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 개념이 어떤 유용성과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합의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개념의 현재적 함의를 긍정하는 논평가들과 비판적 논평가들이 이 전통을 대표한다고 여기는 지식인들의 목록 사이에는 (일부 공통점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당대의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사상가 프리

드리히 하이에크를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두고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서구의 전후시기(특히 1945년 이후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친 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용어가 고안되고 널리 퍼진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으며, 신좌파(the New Left)를 중심으로 냉전체제 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와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Moyn 2023, 1). 따라서 ‘냉전 자유주의’라는 표식은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한 자기정체성이 아니라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1960년대에 이념적 경쟁자들에 의해 부여된 인위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하겠다.

‘냉전 자유주의’의 개념 정의상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냉전 자유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표한 이들이 당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냉전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누가 이 개념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앞선 난점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이 개념은 여전히 일정한 유용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전 자유주의’ 담론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84년에 출간된 『서구 자유주의 융성과 쇠퇴』에서 영국의 정치사상사 연구자 앤서니 아블라스티(Anthony Arblaster)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1980년대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 자유주의는 전혀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며 자유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Arblaster 1987, 310).⁸⁾ 아블라스티는 1945년 이후 ‘부활한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로

8) 아블라스티는 “냉전 자유주의”을 비판하는 작업에 책의 한 챕터(제18장: 냉전 자유주의)

지칭하고 있으며 그것의 지배적 특징으로 ‘반(反)공산주의’를 거론한다. 그는 전후시기에 형성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증오와 공포에 지나치게 휩싸인 나머지 보수화되고 자유의 지평을 축소하였으며 매카시즘에 (대체로 침묵으로) 동조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본질적 가치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아블라스터는 반(反)유토피아주의, 사회경제적 혁명에 대한 반대, 소극적 자유와 엘리트 민주주의관 지향 등을 냉전 자유주의의 주요속성으로 설명한다(Arbalster 1987).

반공주의로 변질된 이념으로서 ‘냉전 자유주의’를 묘사하는 아블라스터의 관점을 보다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자유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드러난 <문화자유회의>(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금지원 폭로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1950년 설립된 문화자유회의는 35개국에 지부를 두고 『인카운터』(Encounter)를 비롯하여 유력 잡지를 20종 이상 발행하는 등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자유진영의 학술 및 문화활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 서유럽에 대한 문화적 지원 및 선전선동 활동의 필요성을 가졌던 CIA는 문화자유회의의 창립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다(Saunders 2016[1999]). 미국의 정보기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단체에 은밀히 후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아블라스터에 의해서도 ‘냉전 자유주의’의 타락과 동시에 지식과 권력의 결합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1999년에 출간된 프랜시스 스톤너 손더스의 논쟁적인 저서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에서도 계승되어 1950년대와 60년대 자유주의 지식인의 모순적인 혹은 위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후시기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내부에도 ‘냉전 자유주의’라는 단순화된 정식화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를 할애하고 있으며, 책의 서문 첫 문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최초의도는 냉전 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서술하는 것이었다(Arbalster 1987, ix)

1960년대 후반에 CIA와의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문화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이 관계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한 강경파 반공주의자(e.g., 시드니 훅(Sidney Hook),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등)도 있었지만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광기어린 반공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한 아서 슐레진저, 레이몽 아롱, 이사야 벌린 등의 지식인들도 있었다.⁹⁾ 따라서 ‘냉전 자유주의’를 전후 미국의 보수반공주의 및 제국주의적 문화 프로젝트의 산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와 심각한 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Isaac 2002).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오늘날의 상당한 관심이 다시 촉발된 데는 최근 십수 년간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를 비롯하여 조슈아 처니스(Joshua Cherniss), 아우렐리안 크라이우투(Aurelian Craiutu) 등의 정치사상사 연구자들에 의한 20세기 중반의 핵심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남긴 지적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명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냉전 자유주의’에 관한 기존의 도식적 설명이 가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복합적 측면과 개별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구체적인 관념들을 상세히 검토함을 통해 20세기 자유주의 전통의 다층성과 사상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전후시기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의 전통이 ‘축소’되고 ‘보수화’ 되었다는 일련의 지적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실제로 ‘냉전 자유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와 냉전을 겪으면서 이전 시대의 자유주의가 지녔던 핵심적인 미덕들(예컨대, 진보적 헌신, 공동체적 지향 등)을 상실한 일종의 “좀비 이데올로기 (zombie ideology)” (Brenes and Steinmetz-Jenkins 2021)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양차대전과 냉전의 결과로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적 윤리와 시민적 미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9) 손더스는 벌린과 아롱 또한 CIA 펀딩에 대해 1967년의 폭로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Saunders 2016, 654-658, 669-670),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벌린과 아롱은 직접 부인한 바 있으며 손더스의 주장 자체도 신뢰성이 낮은 증언이나 추측에 기반하고 있어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Cherniss 2013, 74-76; Stewart 2020, 110-111).

떨어졌고 개인의 권리 개념에만 집중하는 편협성을 띄게 되었다는 주장(Rosenblatt 2023, 374-378)에서부터 ‘냉전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한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전 시기의 자유주의가 발전시켜온 소중한 전통인 인간의 발전성과 주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유의 지평을(주로 소극적 자유의 영역으로) 축소시켰으며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발흥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주장(Moyn 2023)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20세기 초중반의 시기를 거치며 ‘회고적 창조’(retrospective invention)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주의와 냉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지성사 연구자들이 동의할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e.g., Bell 2014). 하지만 자유주의 전통이 냉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집단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거나 냉전 자유주의자들이 이전의 전통을 ‘배반’했다는 서사는 ‘냉전 자유주의자’라는 일군의 정체성과 목표를 공유한 지식인 그룹이 일관되고 조직된 형태로 특정한 이념적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일종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어쩌면 이 용어가 애초에 등장한 목적에 부합하게도)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 혹은 개념은 전적으로 무용하거나 유해하긴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 이 용어가 대체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전후 자유주의 전통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편향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손쉽게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을 개념적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단지 냉전시기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여겼던 이들(예컨대 이사야 벌린, 칼 포퍼에서 시작해서 시드니 후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냉전 자유주의’의 틀에 한데 묶어서 마치 이들이 하나의 관점

10) 모인의 주장에 대한 최근의 주요한 반박으로는 Craiutu(2024), Müller(2024) 등 참조.

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항상 부주의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개념의 부적절한 사용례의 존재가 그 개념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역시 과도한 결론일 것이다. 특히나 ‘냉전 자유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전통의 성격 및 그것이 남긴 사상적·정치적 유산의 현재적 의미와 관련해서 현재진행형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¹¹⁾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수반하는 여러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전체주의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후시기 서구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형태의 자유주의적 비전을 추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며,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당대 지식인들이 가졌던 이념적 다양성과 구체적 차원에서의 뉘앙스 차이를 인정하며 주의 깊게 사용되는 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²⁾

실제로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치사상사 분야의 연구들은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도식적 설명이나 이미지를 넘어서서 개별 사상가들이 씨름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들 속에 그들의 사유와 행위를 맥락화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이상의 복합적 층위와 미묘한 뉘앙스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밀러는 2008년 논문에서 냉전과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커다란 목표 아래에 전후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냉전 자유주의’라고 지칭할 만한 공통의 이념과 정치적 감수성(political sensibility)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11) ‘냉전 자유주의’의 현재적 함의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사례로는 *Dissent Magazine*에서 벌어진 Mattson(2021)과 Brenes and Steinmetz-Jenkins(2021) 사이의 논쟁을 참조.

12)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용어로 ‘냉전 자유주의’와 더불어서 ‘전후 자유주의’, ‘20세기 중반 자유주의’ 등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수반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냉전시기 자유주의’ 등의 변형된 표현도 맥락에 따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냉전 자유주의가 일차적으로는 반(反)마르크스주의 — 특히 그것의 결정론적 역사철학에 대한 반대 — 라는 공통된 이념전선으로 뭉친 ‘전투적’ 형태의 자유주의였다고 말한다. 나아가 냉전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라는 인류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반(反)자유주의적 이념의 등장과 그와 결부된 ‘잔인성’(cruelty)과 ‘극악무도함’(atrocitiy)의 지배가 ‘열린사회’라는 인간문명의 본질적 가치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밀리는 냉전 자유주의가 — 정치철학자 슈클라(Judith Shklar)가 제안한 개념인 — ‘공포의 자유주의’(liberalism of fear)의 특성을 띠었다고 보았다.

또한 ‘냉전 자유주의’의 반극단주의 성향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벌린이나 레이몽 아롱을 예로 들며 이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입장이 하이에크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보수화된 반공자유주의(혹은 자유지상주의)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다(Cherniss 2021; Craiutu 2017; Müller 2008; 2019; Stewart 2020). 다음 장에서 (벌린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대의 반(反)전체주의 전선에 동참했던 자유주의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자유개념과 시장경제, 복지국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중도적이거나 중도좌파적 입장에 공감을 표한 이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냉전시기 자유주의 진영 내부의 사상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냉전 자유주의’에 덧씌워진 편향된 이미지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냉전 자유주의의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 전통 자체가 다양한 관념과 실천을 포괄하는 ‘대가족’(extended family)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포괄주의적 시각과도 부합한다(Bell 2014; Kahan and Ewa 2017).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 전통의 경계가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논쟁적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자유주의 전통의 형성과 발전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일군의 사상가들을 성

급하게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는 개념적 도구가 아니라 ‘냉전’이라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현상에 직면해 유사한 문제의식과 생각을 상당부분 공유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적 유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역사적 맥락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자유주의’ 개념 사용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사유들 가운데 오늘날의 맥락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함의를 가진 내용들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들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예컨대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원칙에 기반한 ‘전투적 신념’(fighting faith)에서부터(Müller 2018) 정치적 무자비함(ruthlessness)이라는 극단주의에 맞서는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와 자유주의적 에토스(Cherniss 2021), 그리고 정치적 중용과 균형감각(Craiutu 2017) 등에 초점을 맞춘 전후시기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와 광신주의적(fanatical) 정치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조점은 다양하지만 최근의 냉전시기 사상사 연구는 그동안 망각 되거나 오해 되어왔던 20세기 중반 자유주의의 복합적이고 넓은 지평에 대한 맥락적이고 확장된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시기 지식인들의 위기대응과 방향모색이 현재의 시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냉전시기 자유주의 담론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당대 자유주의자들이 직면했던 도전과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으며, 이것이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III. 전후 자유주의의 도전과 방향모색: 이사야 벌린과 절제된 이상의 추구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을 보수화되고 협소화된 형태의

타락한 혹은 위선적인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당대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복잡성과 다원성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마치 이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일군의 강경파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과 같은 왜곡된 이미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내부에서도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정치적 실천이 존재하였고, 자유진영 일각의 ‘승리주의’(triumphalism)나 유토피아적 낙관주의를 경계하며 절제와 균형감각, 자기성찰과 비판의 중요성을 전후 자유주의의 핵심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견해 또한 형성된 바 있다.¹³⁾ 그런가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후 자유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가 발전시켜온) 유토피아적 신념을 상실하고 숙명론적 태도에 빠져서 방향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로부터의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¹⁴⁾ 나치즘과 파시즘의 트라우마 속에서 반(反)전체주의라는 강력한 목표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20세기 중반의 시기는 외면적으로는 명확한 컨센서스와 단일한 지향점이 당대 자유주의 전통 속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했던 실제적 모습은 일치된 일사불란함보다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경합하고 실천되는 복잡성과 포괄성을 보여준다.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의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관계는 반공주의와 매카시즘에 대한 입장을 두고 표출된 상당한 견해차에서도 특히 잘 드러난다. 이 대립의 주된 무대는 미국이었으며, 위스콘신주 출신의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는 격화되는 냉전 대립과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등으로 고조된 대중적 불안감에 편승하여 광신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공산주의자 색출 및 척결운동을 주도하였다.¹⁵⁾ 미국 국무부와 CIA를 비롯하여 정부와 학계, 언론계

13)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전후 자유주의자로 라인홀드 니부어(1892-1971)를 들 수 있다.

14)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저작 가운데 하나로는 주디스 슈클라(Judith Shklar)의 *After Utopia: The Decline of Political Faith* (1957)이 있다.

15) 매카시즘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britannica.com/event/McCarthyism>.

등에 공산주의자들이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는 매카시의 타겟(target)에는 언론인 제임스 웨슬러(James Wechsler)나 역사학자이자 대중지식인 아서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와 같은 당대의 저명한 미국 전후시기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되었다(Mattson 2004, 52-59, 69-70).

매카시즘의 이같은 광범위한 공산주의자 지목 및 사상검증활동은 비(非)공산주의 노선을 택했던 다수의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균열점, 즉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와 ‘우파 반공주의’라는 균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1950년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문화자유회의>(American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줄여서 ACCF) 내부에서도 표출되었다. ACCF 내에서도 강경파 반공주의자였던 언론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등은 매카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그룹 내부에서 공유했고, 이 단체의 주축 가운데 한 명이었던 철학자 시드니 훅(Sydney Hook)은 공산주의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에 반(反)공산주의라는 큰 노선에 동의하면서도 매카시 등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반공운동이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이라는 열린사회의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ACCF 내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관련하여 라인홀드 니버는 “광란에 가까운 반공주의는 증오의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그 자체와 매우 닮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매카시즘의 피해자이기도 한) 슐레진저나 웨슬러는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교육자들이 학생들과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반면 매카시즘의 광풍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축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해악은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슐레진저는 간첩행위 등의 구체적인 반(反)국가활동에 연루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침착함과 균형, 판단력 등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웨슬러는 과도한 사상검증의 해악을 우려하며 (위험한 행위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생각’(ideas) 그 자체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Mattson 2004, 66-74).

전후시기에 자유진영 안과 밖에서 형성되었던 극단주의적 이념 혹은 사회적 분위기는 벌린과 니부어, 슐레진저, 아롱 등과 같은 전후시기 주요 지식인들이 이같은 극단주의에 맞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전체주의’가 서구 문명에서 발생한 이유에 관한 것이었고, 전후시기의 주요 지식인들은 대중사회와 산업사회라는 현대의 새로운 상황이 초래한 사회적·심리적·이념적 차원의 문제들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아렌트(Hannah Arendt)는 나치즘과 같은 극단적 이념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으로 인해 ‘뿌리뽑힘’과 ‘잉여화’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대중들이 겪게 된 불안감(anxiety)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Arendt 1994[1951], 474-479).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벌린은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적인 열정의 이면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으며(Berlin 2014, 202-222), 슐레진저 또한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외롭고 불안한 개인들이 전체주의에 빠져들어가는 문제에 전후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chlesinger 1998, 1-10, 243-256).

이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역시 반(反)극단주의라는 넓은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지식인의 아편』에서 아롱은 마르크스주의를 일종의 ‘메시아주의’이자 ‘정치적 신화’로 규정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이 이념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독단주의와 광신주의, 정치적 폭력의 정당화 등으로 빠져들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Aron 2022, 123). 「20세기의 정치사상」을 비롯하여 여러 글에서 벌린은 마르크스주의를 일원론(monism)과 결정론(determinism)의 극단화된 형태로 제시하며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인간존엄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Berlin 2014). 그러나 (강경파 반공주의자들과 달리) 벌린이나 아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제와 관용, 이해의 태도를 견지했다(Müller 2019, 52).

이와 관련해 벌린은 “악마와 싸울 때는 악마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강경한 태도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치에서 지나친 열광과 절제되지 않은 태도는 독단적이고 교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raiutu 2017, 87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정책의 분야에 있어서도 독선적 태도와 교조주의는 커다란 경계의 대상이었다. ‘적극적 자유’라는 전체주의적 관념에 맞서 ‘소극적 자유’라는 가치를 배타적으로 — 그리고 심지어 교조적으로 — 옹호한 것으로 흔히 (잘못) 알려진 벌린의 경우에도 (뉴딜정책과 독일 나치즘과의 전쟁 등을 이끈)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유사회를 향한 헌신과 기여를 찬양하며 시민들의 적정수준의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직접적인 도덕적 책임”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Berlin 1997, 636),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의 무조건적 정당화로 해석되는 것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벌린은 아동들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거나 공장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는 일들을 언급하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들에게 집중된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비인간적인 결과를 광범위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Berlin 2013b, 19-20). ‘개인적 자유’라는 가치의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그였지만 오직 자유가 절대적이거나 우월한 가치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으며 ‘평등’, ‘정의’, ‘자비’, ‘자기결정권’ 등과 같이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어떠한 균형과 타협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주체의 몫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믿었다(Berlin 2018[1966], 272-273).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도 전후시기 벌린에게 가장 지독한 형태의 위협은 ‘인간 영혼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 스탈린 방식의 전체주의적 통치였다. 하지만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확산과 전문가에 의한 통치영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들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사회의 검열과 통제에 의해 억눌릴 위험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또한 그의

문제의식 속에 상존했다(Berlin 2014, 203-204). 1949년부터 미국 대학들에서 러시아 사상을 강의하였던 벌린은 매키시즘이 전개되는 상황을 내부로부터 직접 목격한 바 있으며, 자유진영 내부의 교조화와 독단화가 지적 활동과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Ignatieff 2012, 320-327).

좌우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전후시기 지식인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사회의 가치를 수호하는 과업이 단지 제도나 구조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변화나 개혁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에토스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함양하고 이를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적 요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균형감각, 자기비판, 겸손함, 온건한 태도(moderation), 자기통제, 반(反)유토피아주의 등과 같이 과도한 이념적 열정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정치적·윤리적 감수성이 이 시기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니부어, 슐레진저, 벌린, 아롱 등에 의해 — 물론 각 인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 이해되고 실천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¹⁶⁾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전향해 전후시기 미국의 핵심적 진보지식인 단체 <미국 민주행동연합>(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줄여서 ADA) 창설 등의 활동을 주도했던 니부어는 인간의 본질적 불완전성(imperfectibility)과 오류가능성(fallibility)을 강조하며 여기서 기인하는 악(evil)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및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니부어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도덕적 순수주의(moral purism)의 입장에서 반대했던 평화주의자(pacifist)들의 절대주의적 도덕관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현존하는 악(예컨대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도 양심적이고 겸손한 태도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는 독선적인

16)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깊게 공유하지 않았던 (하지만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인식했던) 당대의 지식인들로 칼 포퍼나 제이콥 탈본 등의 지식인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내적 다양성과 넓은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와도 부합한다.

(self-righteous) 자세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attson 2004, 17-19, 86-87).

소련식 전체주의 체제와 탐욕스러운 자본가 계급에 포획된 미국의 금권정치(plutocracy)라는 두 극단(extreme) 사이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 슐레진저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급진주의’(new radicalism) — 의 길을 모색하던 슐레진저에게 있어서도 절제되고 자기성찰적인 에토스를 강조한 니부어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다.¹⁷⁾ ‘냉전 자유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1949년 저작 『역동적 중심』(*The Vital Center*)에서 슐레진저는 인간적 완벽성에 대한 지향(human perfectibility)과 인간진보의 필연성을 전제해온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낙관주의적 신념을 비판하며 이러한 유토피아적 신념은 (전후시기에) 당면한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불완전성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겸허함(a sense of humility),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타협의 자세이다(Schlesinger 1998, 170, 174, 254). 이후에 추가된 서론에서 그는 니부어를 인용하며 “인간의 연약함(frailty)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보다 민주주의에 더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다”라며 교만이나 자기도취를 경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Schlesinger 1998, xiii).

20세기에 등장한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인간의 윤리적 삶과 도덕적 감수성에 미치는 커다란 위협에 대해 심도깊게 탐구하였으며 전후시기 미국과 유럽의 비공산주의적 자유주의 운동(NCL)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벌린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니부어의 신념에 깊게 공감했으며, ‘최종적 해답’과 ‘최종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이상을 극도로 경계했다(Cherniss 2013, 70-71).¹⁸⁾ 벌린이 ‘일원론’(monism) 혹은 ‘결정론’(determinism)이라는 개

17) 자유주의 역사가로서 전후시기에 가졌던 슐레진저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김일련(2023)의 최근 논문을 참고할 것.

18) 벌린의 NCL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슐레진저의 언급은 다음을 참고: Schlesinger(1998, 168).

념을 통해 비판했던 완벽주의적 이상의 위험성은 그의 전후시기 사유와 저작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망라하여 ‘승고하고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잔인한 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실행되고 정당화되던 20세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러시아 태생의 유태인으로 박해를 피해 유년기에 영국으로 이주해 정착했고 2차대전 중에 러시아에 남은 친가와 외가가 나치에 의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별린은 이른 시기부터 평생에 걸쳐 폭력, 잔인함, 부정의, 압제, 순응, 인간존엄, 품위(decency), 자유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다(Berlin 2013a, 3-4; Ignatieff 2012, 59-60, 213-214). 폭력과 도덕불감증(moral blindness) 등의 문제를 사상사(the history of ideas)의 관점에서 천착한 별린은 잔인함, 세뇌, 혁명 등 무고한 개인에게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하고 정당화하는 정치적 교의(doctrine)의 이면에는 오직 이러한 무제한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서만 ‘완벽한 삶’ 혹은 ‘완벽한 사회’가 도달가능하다는 ‘엄청난 지적 오류’(enormous intellectual fallacy)가 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Berlin 2013b, 26-28).¹⁹⁾

별린의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과 반(反)일원론적 입장은 별린 스스로가 회고하듯이 (그가 속해있던 20세기 초중반 영국 지성계에서 유행하던) 논리실증주의나 절대적 확실성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엄밀한 논리적 검증이나 철학적 확실성이라는 틀 속에 한정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근대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단순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관념 —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공리주의 등 — 이 인류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너무 많은 위험한 길로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을 인도해왔다. 따라서 (별린이 보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19) 이 주제와 관련해 별린은 여러 곳에서 ‘궁극의 오믈렛’을 위해 희생되는 ‘깨진 계란’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all the justifications of broken eggs for the sake of the ultimate omelette”(e.g., Berlin 2013b, 28). 여기에서 궁극의 오믈렛은 최종적이고 단일한 목표를, 깨진 계란은 이 과정에서 희생을 요구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선정하고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며 그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Berlin 2013b; 2018, 275-276).

교조적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이 ‘완벽한 사회’(perfect society)라는 위험한 이상을 지향했다면, 별린을 비롯한 전후시기 주요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이같은 과열된 열정을 경계하며 ‘적정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라는 대안적 형태의 절제된 이상을 추구했다. 궁극적인 하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즉, 일원론)과 인간 행위의 이면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믿음(즉, 결정론)으로 무장한 갖가지 형태의 완벽한 사회에 대한 지향과 대조적으로, 별린의 입장이 잘 보여주듯 적정수준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함을 의미했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따라서 역사의 전개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범위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상황의 도래를 막도록 노력하는 ‘불안정한 균형’을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다(Berlin 2013a, 18-19).²⁰⁾

검손과 절제력, 균형감각 등이 ‘적정수준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감수성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decent society’라는 별린의 관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며 이 용어가 원래의 문맥에서 어떤 다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형용사로서 ‘decent’ 혹은 명사형으로서 ‘decency’라는

20) 별린의 자유주의에서 “decency”가 가지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는 Cherniss(2021, 194)를 참고할 것.

용어는 그것이 위치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넓고 다층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먼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형용사 ‘decent’의 명사형인 ‘decency’는 현대영어에서 일반적으로 (1) 행동 또는 태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적절성, (2) 겸손(modesty)이나 섬세함(delicacy) 등과 관련한 사회적 관념에 대한 순응, (3) 개인의 지위에 부합하는 생활수준을 따르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진다.²¹⁾ 사전적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듯 이 용어는 개인의 태도나 성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관계적이고 맥락적으로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decency’라는 용어는 (처니스의 설명을 참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 절제된 행동 등과 같은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더불어 정치적 차원에서는 부정의나 고통, 인격모독이나 빈곤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지향을 동반했다(Cherniss 2021, 19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ecent society’라는 전후시기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향은 도덕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역 등 존엄한 삶과 긴밀히 연관된 영역들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인간품격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decent society’에 대응하는 우리말로는 가장 먼저 ‘품격있는 사회’ 혹은 ‘품위있는 사회’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만, 앞서 설명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압축적이면서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²²⁾ 왜냐하면 우리말의 ‘품격’이나 ‘품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즉, 고상한) 격식이나 위엄과 관련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기본적 적정선’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적·사회적) 상태’와는 다소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정수준

21)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decency>

22) 존 롤스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에서 ‘decent society’를 ‘적정수준의 사회’로 번역한 앞선 사용례로는 장동진(2001) 등 참조.

의 사회'라는 번역어 또한 무엇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사회'라는 극단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에 대응하는 관념이며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선형적이거나 과학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험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벌린의 표현에 따르면 '위태로운 균형'에 해당하는) 존재한다는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번역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은 앞서 살펴본 자유주의적 감수성 및 정치윤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절대적 확신을 경계하며 벌린은 어떤 선택과 행위이든 오류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확신에 기반한 행위는 무고한 이들의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다원적 가치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사회에는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극단적 고통'도 공적 수단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물론 때때로 가치의 충돌 상황에서 불가피한 타협과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확신에 기반한 궁극적 해법'이 아닌 '불안정한 균형'(an uneasy equilibrium)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과도한 열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적합한 자세이다. 이에 필요한 덕목으로 벌린은 '겸손함'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식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성 등을 제시한다(Berlin 2018[1966], 275-276).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절제된 감수성에 기반한 이같은 형태의 자유주의를 벌린은 "다소 정돈되지 않은 자유주의"(a rather untidy liberalism)라고 규정한다. 과도한 획일성과 일관성에 집착하는 교조화된 신념들이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며 벌린은 "인간성이라는 뒤틀린 목재(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로 똑바른 것이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 칸트의 언명을 자주 인용했다.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의 본성과 인간행위의 불안전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잘 정돈된 해법을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사회의 본성에 거스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다(Berlin 2013a, 19-20).²³⁾ 불안정한 균형과 타협,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지향, 그리고 현대사회의 점증하는 획일성과 사회공학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동장치’로서의 절제된 자유주의는 전후시기의 자유주의적 지적 전통이 ‘반공산주의’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복잡성과 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현재성과 함의

전체주의 체제의 부상과 함께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선택이 강요되던 시대, 벌린을 비롯한 일군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강조하며 회의주의, 다원주의, 온건함 등의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이상과 적정수준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의 사상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자,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경직되어 가는 서구의 전후시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진영 내부의 비판으로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념적 광신과 극단화, 전체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에 맞서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자 분투하였던 이들의 고민과 실천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화, 그리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현대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훈과 이론적 자원을 탐색할 수도 있다.

물론 전후 자유주의 전통 또한 당대의 특수한 상황 및 문제의식 하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이 전통이 강조하는 측면을 탈맥락화하여 오늘날의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역사적(ahistorical)인 태도이자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관념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종의 ‘현재주의’(presentism)의 오류를 범하게 될 위험도

23) 유사한 맥락에서 정치이론가 조슈아 처니스는 벌린의 자유주의를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의 한 전형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Cherniss 2021).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²⁴⁾ 하지만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오늘날 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 지식인들이 가졌던 극단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롯하여 정치적 광신주의와 독선주의 등의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은 사유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갈등의 심화와 정치규범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할 것들과 상당한 공유지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섬세하고 주의 깊게 재조명할 의의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로 다시 눈을 돌려서,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시기의 반(反)극단주의를 내세운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이 우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및 연구에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별린이 보여준 절제와 온건함 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한국적 토양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 가지 지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서구사회의 오랜 자유주의 전통에 비교할 때,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지배를 경험해온 우리사회에서 자유주의적 문화와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진 역사는 아직 짧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 및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자유주의 전통의 수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해 오고 있지만, 현대 자유주의 전통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을 배경으로 한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사적 연구는 상당부분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은 전후 자유주의 전통 및 이를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유주의를 ‘냉전 반공주의’나 ‘보수적 시장주의’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로 등치시키는 인식 및 담론으로도 이어지는 문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극단주의에 맞서면서 적정수준의 사회를 지향

24) 옥스포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주의’는 (주로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현재 혹은 현재적 태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 편견을 뜻한다.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presentism>

하고자 했던 전통의 재조명을 통해 당대 자유주의의 복합적이고 넓은 지평을 보여주고자 한 우리의 연구는 앞선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교정의 노력으로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이 논문에서 살펴본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국내의 담론장에서 진지한 연구 및 관심의 바깥에 머물렀던 ‘자유주의적 감수성’ 및 ‘자유주의적 기풍’의 형성이라는 20세기 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별린이나 솔레진저, 니부어 등의 예에서 잘 드러나듯, 이들은 전후시기의 규범적·이념적·정치적 폐허 위에서 ‘적정수준의 사회’를 재건하는 과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성찰적이고 유연한 태도,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강조한 적정수준의 사회의 이상에 필수적인 자유주의적 에토스는 (왈저의 분류를 따르자면)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교조화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전통(혹은 현재의 시점에서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되는 이념적 입장)과 별린으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이고 반(反)극단성을 추구하는 ‘리버럴한 감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이념적 형태의 자유주의 전통 사이의 중요한 분화가 이미 전후시기에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지식인 그룹 내부에서 뚜렷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후 자유주의에 관한 담론에서 종종 전자의 영향력은 과대해석이 되는 반면에 후자의 전통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20세기 자유주의 전통에 가해지는 상당수의 (앞서 살펴본) 비판들은 이 전통의 복합성과 다층성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반(反)유토피아주의적 이상을 추구했던 별린, 솔레진저, 니부어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 재조명은 극단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 절제되고 원칙 있는 윤리의식 및 균형감각, 그리고 시민성의 차원에 대한 깊은 고려와 강조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오늘날 한국의 확산

되는 이념적 극단주의 풍조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특정한 형태의 고정된 독트린이 아닌 유연하고 열린 정치적 사고와 실천의 태도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해 온 사상적 자원들에 대한 연구 및 담론을 활성화하며 현재 우리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평가 가운데 하나인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가 최근 지적하였듯,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이해하는 넓은 전통은 (사회주의 등과 같은 다른 이념들과는 달리) ‘이념’(-ism)이라는 특정한 고정된 틀 속에 가두어질 수 없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독단주의와 광신주의라는 지난 세기의 이념적 광풍에 대항해 온 역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점이다(Walzer 2023). 앞선 논의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전후 자유주의 전통도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예컨대 19세기의 낙관적 자유주의 전통의 몰락, 민주주의와 반(反)자유주의의 결합, 탐욕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문제들, 빈곤과 공황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들 등) 속에서, 그리고 ‘완벽한 사회’를 추구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형성된 유연성과 개방성, 관용과 적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대 사상가들의 문제의식 및 사유와 실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해 자유주의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인 실천적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춘. 2021. 『반공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서울: 필요한책.
- 김민혁. 2023. “자유주의 전통의 다양성과 논쟁성: 자유주의 위기담론 및 자유주의 연구방법론 고찰.” 『서강인문논총』 66집, 341-370.
- 김일년. 2023. “미친놈과 나쁜 놈의 발견: 리처드 홉스테터, 아서 솔레진저, 그리고 미국 자유주의 역사학의 형성.” 『인문과학』 89집, 5-44.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동천. 2020. “이사야 벌린: 다원적 자유주의의 실천.” 『현대정치학의 위기와 비전』, 237-264. 서울: 아카넷.
- 유홍림. 2019.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현실감각.’” 『정치사상연구』, 25집 2호, 39-67.
- 이나미. 202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장동진. 2001.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만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집 4호, 315-336.
- 전보람. 2023.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전재성. 2005.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 자기에의 인간본성과 국제정치에서의 실천지(實踐智).”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1-32.
-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66-107. 서울: 폴리테이아.
- Arblaster, Anthony. 1987.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Oxford: Basil Blackwell.
- Arendt, Hannah. 1994[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San Diego: Harcourt.
- Aron, Raymond 저. 변광배 역. 2022. *L'opium des intellectuels*. 『지식인의 아편』. 서

출: 세창출판사.

- Bell, Duncan. 2014. "What is Liberalism?." *Political Theory* 42(6): 682-715.
- Berlin, Isaiah. 1997. *The Proper Study of Mankind: An Anthology of Essays*. London: Chatto and Windus.
- Berlin, Isaiah. 2013a. "The pursuit of the idea." In Hardy, Henry(eds.).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2013b. "My intellectual path." In Hardy, Henry(eds.). *The Power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저. 박동천 역. 2014.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 Berlin, Isaiah. 2018[1966]. "The lessons of history." In Cherniss, Joshua L, and Steven B. Smith(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Isaiah Berlin*.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es, Michael and Daniel Steinmetz-Jenkins. 2021. "Legacies of Cold War Liberalism." *Dissent* 68(1)(Winter).
- Cherniss, Joshua L. 2013. *A Mind and Its Time: The Development of Isaiah Berlin's Political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rniss, Joshua L. 2021. *Liberalism in Dark Times: The Liberal Ethos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aiutu, Aurelian. 2017. *Faces of Moderation: The Art of Balance in an Age of Extrem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raiutu, Aurelian. 2024. "Liberalism, the happy exception". *History of European Ideas* 50(4): 679-685.
- Deneen, Patrick J. 2018. *Why Liberalism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gnatieff, Michael 저.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 역. 2012. *Isaiah Berlin: a Life*. 『이사야 벌린』.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Isaac, Jeffrey C. 2002. "Rethinking the Cultural Cold War." *Dissent*. <https://www>.

- dissentmagazine.org/article/rethinking-the-cultural-cold-war/ (검색일: 2024. 01. 15)
- Kahan, Alan S. and Ewa Atanassow. 2017. *Liberal Moments: Reading Liberal Texts*. New York, NY: Bloomsbury Publishing.
- Mattson, Kevin. 2004. *When America Was Great: The Fighting Faith of Postwar Liberalism*. New York: Routledge.
- Mattson, Kevin. 2021. "Virtues of Cold War Liberalism: A Response to Michael Brenes and Daniel Steinmetz-Jenkins." *Dissent* (March 29). https://www.dissentmagazine.org/online_articles/virtues-of-cold-war-liberalism/ (검색일: 2024: 01. 22).
- Moyn, Samuel. 2023. *Liberalism against Itself: Cold War Intellectual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08. "Fear and Freedom: On 'Cold War Liber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1): 45-64.
- Müller, Jan-Werner. 2018. "What Cold War Liberalism Can Teach Us Toda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ovember 26). <http://www.nybooks.com/online/2018/11/26/what-cold-war-liberalism-can-teach-us-today/> (검색일: 2024. 01. 25).
- Müller, Jan-Werner. 2019. "The Contours of Cold War Liberalism (Berlin's in Particular)." In Müller, Jan-Werner(eds.). *Isaiah Berlin's Cold War Liberalism*,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 Müller, Jan-Werner. 2024. "Liberalism's forever crisis." *Project Syndicate* (January 5).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opponents-and-defenders-of-political-liberalism-by-jan-werner-mueller-2024-01> (검색일: 2024.01.25).
- Popper, Karl. 1986. "Utopia and Violence." *World Affairs* 149(1)(Summer).
- Rosenblatt, Helena 저. 김승진 역. 2023.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공동체의 도덕, 개인의 윤리가 되다』. 서울: 니케북스.
- Saunders, Frances Stonor 저. 유광태 외 역. 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서울: 그린비.

- Schlesinger, Arthur M. 1998. *The Vital Center: The Politics of Freedo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hklar, Judith N. 1957. *After Utopia; the Decline of Political Fai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klar, Judith N. 1998. "The Liberalism of Fear." In Hoffmann, Stanley(eds.). *Political Thought and Political Think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wart, Iain. 2020. *Raymond Aron and Liber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2023. *The Struggle for a Decent Politics: On "Liberal" As an Adj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4.06.12. 심사일: 2024.07.19. 게재확정일: 2024.07.22.

A study on the anti-extremist tradition of postwar liberalism: on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and Isaiah Berlin’s thought

Kim, Minhyeok | Institute of Public Governance, Kyung Hee University

Cho, Dae Keun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ideas — the anti-extremist and moderate liberal tradition developed in the postwar period, which was formed by a group of mid-20th century Western thinkers, most notably by Isaiah Berlin, who struggled to defend liberal values and culture amidst the threat of totalitarian regimes and the frenzy of McCarthyism. Recently, grow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ostwar liberal tradition along with the resurgence of ideological polarization a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today; and how to evaluate the tradition, particularly around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has become a major subject of debate among the contemporary (mostly Western) scholars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We argue that examining these efforts has vital implications for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broad horizons of liberalism in Korean society. Thus, we offer the following analyses: First, we critically explore the terrain of recent discourse surrounding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and emphasize the need for revisiting the ‘moderate’ liberal tradition of the postwar period. Next, we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anti-utopian liberalism formulated by Berlin and his contemporary moderate liberals. The conclusion offers some reflections on what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rom the tradition for a more liberal and decent society in Korea.

Key Words | Cold War Liberalism, Postwar Period (post-1945), Isaiah Berlin, Anti-Extremism, Political Moderation

『현대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3장 현대정치연구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sips.jams.or.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2. 현대정치연구 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 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15일, 여름호-6월 15일, 겨울호-10월 15일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 소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300,000원을 부담한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저자는 1 주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 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 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판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18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혼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뜯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국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인 경우 “.”을, 3명 이상인 경우 “외”를 활용하고, 영문의 경우 2명은 “and”를, 3명이 이상인 경우는 “et al.”을 사용하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한배호 . 어수영 1991), (한배호 외 1995), (Almond and Verba 1963) (Verba et al. 1995) ...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되, 한국 문헌을 외국 문헌 앞에 두고, 한국 문헌은 가나다 순서를,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Lee 196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5)혹은 ...(신동아 93/5, 233).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 인터넷 자료 인용 〉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전 인용 규칙을 따르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이창동·김명희·허윤기.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외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쪽.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 1(Winter),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
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
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르르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5. 이 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편집위원회(705-8616, polsci@sogang.ac.kr)로 문의한다.

현대정치연구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현대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와 저자들 간 특수관계에 의한 연구논문 출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4. 제재방식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부록1: 현대정치연구소 학술활동 (2015년 3월~2024년 7월)

1. 2015년 3월 제 3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 일자 : 2015년 03월 27일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 내용 :

가. 발표 :

- 여지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복지균열의 부상에 관한 연구-무상급식부터 경제민주화담론까지의 시기 (2009-2012)를 중심으로
- 김태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균등이념과 제헌헌법
- 김성모(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사회적 자본이 사회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트워크 자본을 중심으로
- 정성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소고
- 이태규(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당- 국가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선민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중국식 민주에서의 사회집단의 역할 고찰’ - 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저항을 중심으로

나. 토론 :

-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심은정(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결(서

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유동(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

- 전재호(서강대), 이민자(서울디지털 대학교)

2.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6시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서구중심주의와 역사교육의 공과 (서강대학교 김민정)

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3시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중국학술의 주체성과 유럽중심론의 비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류칭)

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후원 “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저자와의 대화

- 일자 : 2015년 5월 28일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내용 :

가.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 대안으로서의 유권자 정당
강신구(아주대) :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
최준영(인하대) : 대통령제 정당체제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채진원(경희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 약화론’과 네트워크정당모델
서정건(경희대) : 후보 선출과 정당 조직의 연계 및 변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현우(서강대) : 미국 정당의 양극화 평가 - 약화(decline)인가 적응(adaptation)인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 정당정치의 혁신에 대한 시론 -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성호(경희대) : 정당 내 정파(faction) 문제와 정치 양극화 - 탈산업시대 정당의 위협요소와 극복 방향

나. 사회 :

김민전(경희대)

5. 현대정치연구소 · SSK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일자 : 2015년 6월 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A호

•내용 :

가. 발표 :

- 엄한진(한림대) :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김은실(성신여대) : “유럽중심주의와 러시아 정체성 논쟁”

박은홍(성공회대) : “동남아시아에서 반(反)서구중심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양면성”

조경란(연세대) :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대립과 충돌-역사적 회고와 전망”

김광수(한국외국어대) :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역사적 맥락화”

- 김은중(서울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식민성, 자본주의 세계경제, 유럽중심주의”

- 이지은(한국외국어대) : “서구와 탈서구, 근대와 탈근대-인도 역사학의 여정”

- 고희탁(서강대)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근현대 일본의 동화전략과 역
전전략의 이중주”
- 나. 토론 : 장경섭(서울대), 김태연(서울대), 이한우(서강대), 정수복(사회학
자/작가), 임기대(한국외국어대), 박정원(경희대), 김진영(서강대), 이새
봄(연세대)
- 다. 전경옥(숙명여대), 장인성(서울대)

6.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정부연구단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자 : 2015년 6월 5일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 내용 :
 - 가. 발표 :
 - Edgar Grande(LMU MUNICH, 뮌헨대학교) : “Glob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 나. 사회 :
 - 이현우(서강대)

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6시
- 장소 : 다산관 603호
- 내용 :
 - 한국 심리학계의 탈서구중심적 연구동향: 유학심리학의 연구를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조궁호)
 - ‘우리성’과 ‘쪽’의 심리학: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심리학의 한 모형
(한규석) (전남대학교 한규석)

8.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 16시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 발표 :

- ‘가족개인’과 한국의 계층질서: 소소유자의 존재와 의식(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사회학적 모색(이영찬) (계명대학교 이영찬)

9.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4호

- 발표 : 제국의 역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대학교 공진성)

10.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보편주의적 한국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 속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북대학교 조영철)

11.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좋은정부 연구단 공동 주최 해외학자 초청 강연

- 일자 : 2015년 10월 16일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 내용 :

- 가. 발표 :

- Sverker C. Jagers(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Ecological Citizens - Realism or Utopia?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ting green

behaviour and consumption

12.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시 30분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유교민주주의의 가치: 도구적 가치로부터 내재적 가치로” (홍콩시립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김성문)

1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패치워크문명론” (동국대학교 황태연)

1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자 : 2015년 11월 27일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 가. 발표 : 이수상(부산대) : 언어 텍스트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
 -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5.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자 : 2015년 12월 4일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가. 발표 :

이남영(세종대)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는가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6.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유럽중심주의와 역사학 비판 - 국내 서양사학계의 유럽중심주의 논의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김택현)

1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발표 : 소농사회론에서 유교적 근대론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

18. 2016년 2월 제 4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 일자 : 2016년 2월 24일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603호
- 내용 :
 - 가. 발표 :
 - 추정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5.24조치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 황하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 1987년 13대 대선을 중심으로
 - 이석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전

락과 정치적 정당성: 역전적 동화주의 분석 -정관응의 『성세위언』을 중심으로

양해만(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북한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경제민주화는 어떤 민주화인가?

나. 토론:

김태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유재승(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호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전재호(서강대), 한영빈(서강대)

1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월례학술회의

- 일시 : 2016년 3월 19일(토) 15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101호
- 내용 : “존 롤스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국민대학교 이종은)

20.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시 00분
- 장소 :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 내용 : “What is Good Government in Asia”

2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 내용 : “Dynamic lobbying: Empirical evidence from foreign lobbying on free trade agreement”
- 발표 : 유혜영 교수 (Vanderbilt University)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17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501호
- 내용 :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정부 이데올로기와 조세수준이 복지투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신정섭 교수 (한양대학교)

2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Rethinking “Capitalism” and Long-Run Paths of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표 : 김원익 교수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 발표 : 박선경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선거제도,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결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양대 정당의 미래 / 미국 밖에서의 포퓰리즘.”
- 발표 : 이현우 교수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26.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확대월례 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2017 촛불집회: 누가 그리고 왜”
- 발표 : 이현우, 서복경, 이지호 교수(이상 서강대학교)
- 토론 : 장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하상응(서강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27.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
- 발표 : 김종범(대전대), 전상진(서강대), 신진욱(중앙대), 도묘연(영남대), 이현출(건국대), 장우영(대구카톨릭대),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이상 서강대)
- 토론 : 전재호(서강대), 김윤철(경희대), 박명호(동국대), 강신구(아주대), 황아란(부산대), 이재묵(한국외대)

2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월례세미나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저자와의 대화: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묻다.”
-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토론 : 진진영(입조처), 강신구(아주대), 서정진(경희대), 안병진(경희대),
임성호(경희대), 채진원(경희대), 최준영(인하대)

29.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3시 2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한국 정치과정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 발표 : 박선경(인천대), 강신구(아주대), 조영호(서강대), 강원택(서울대), 장
훈(중앙대), 이지호(서강대), 서복경(서강대)
- 토론 : 하상웅(서강대), 허석재(입조처), 임성호(경희대)
- 사회 : 이현우(서강대), 정진민(명지대)

30. 2019 현대정치연구소 콜로키움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6시 2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미디어생태계 변화와 시사평론의 세계”
- 발표 : 장희영 시사평론가

31. 한국 선거학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1년 여름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5시 30분
- 장소 : 온라인(Zoom)
- 내용 : 코로나 시대 정당 및 선거정치
- 발표 : 박정훈(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태심(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정(성균관대 SSK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
- 토론 : 신재혁(고려대학교), 장한일(국민대학교), 강우창(고려대학교)

- 사회 : 이현우(서강대학교)

32. 2021년 7월 월례발표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 장소 : 온라인(Zoom)
- 내용 : 박근혜 탄핵과 여성정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연구
- 발표 :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 토론 : 오세제(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사회 : 이현우(서강대학교)

33. 2023년 선거학회-현대정치연구소 공동주최 4월 월례 세미나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1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604호
- 내용 : Dynamics of Candlelight Protestors: The Effects of Voting Patterns and The Election's Temporal Proximity on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국회 내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년을 중심으로
- 발표 : 차현진(고려대학교), 정다빈(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 : 도묘연(계명대학교), 박범섭(숭실대학교)
- 사회 : 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34. 2023년 현대정치연구소 동계 심포지엄

- 일시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16:00 - 18:00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504호
- 내용 : The End of the Past Long Lasting? Impeachment of Park Geun-hye and the Park Chung-hee Nostalgia
- 발표 :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35. 미얀마 봄의 혁명 3주년 기념토론회

- 일시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 18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내용 : 봄의 혁명 3년, 1027작전의 조명
- 발표 : 아웅묘민(미얀마 민족통합정부 인권부장관)
- 토론 : 찬빅재(서울대), 칸진(부경대), 린테아웅(미얀마군사관학교),
나웅찬(성공회대), 최경희(서울대)
- 사회 : 박은홍(성공회대)

36. 2024년 상반기 한국정치연구회 정기공동학술대회

대전대 SSK 지방소멸과 제4섹터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일시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 18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6호
- 내용 : 제22대 총선 평가와 한국정치: 득표율 추이로 본 제22대 총선 결과
분석
- 발표 : 정해구(전 성공회대)
- 토론 : 김용복(경남대), 윤광일(숙명여대), 지병근(조선대), 박용수(연세대),
송경재(상지대), 이소영(대구대), 김윤철(경희대)

37. 현대정치연구소-한국선거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2024년 5월 3일(월) 14시-18시
- 장소: 다산관 206호
- 내용
가. 주제 :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과 절차 방안
발표 : 박법섭, 김형철, 장선화
토론 : 하상웅, 유성진, 최연혁
사회 : 안용훈

- 나. 주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
발제 : 지병근
토론 : 이한수, 조영호, 서복경, 신정섭, 윤주진, 강우진
사회 : 김형철

38.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다 (1)

- 일시: 2024년 5월 20일(월) 18시-20시
- 장소: 다산관 101호
- 내용: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 발표: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39.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다 (2)

- 일시: 2024년 5월 9일(목) 18시-20시
- 장소: 이나시오 강당
- 내용: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 발표: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40.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다 (3)

-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8시-20시
- 장소: 다산관 101호
- 내용: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 발표: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41. 정치외교학과-BK21-SSK 연구팀 공동주최 해외석학 초빙강연

-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30분-12시
- 장소: 다산관 601호
- 내용: Race and Immigrant Incorporation in American Politics
- 발표: Julie Lee Merseth(Northwestern University)

42. 2024년 서강정치학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하계 세미나

- 일시: 2024년 7월 5일(금) 16시-18시
- 장소: 다산관 601호
- 내용: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 당선인 특강
- 발표자: 전성홍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임성호 교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토론자: 김진하 (계명대 국제관계학과), 박은홍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사회자: 안재홍 명예교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강우진(경북대)	김면희(한국외대)
박범섭(숭실대)	박선경(고려대)
박영득(충남대)	송병권(서강대)
신정섭(숭실대)	우병원(연세대)
이선우(전북대)	이현우(서강대)
조영호(서강대)	최일성(한서대)
하상응(서강대)	한경준(테네시대)
홍지연(홍콩과기대)	

현대정치연구 2024년 여름호 (제17권 제2호)

인쇄 | 2024년 8월 30일

발행 | 2024년 8월 31일

발행인 | 이현우

편집인 | 조영호

편집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펴낸곳 | 도서출판 (주) BTN (mybtn01@naver.com)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South Korea

TEL | (+82)2-705-8616 FAX | (+82)2-705-8617

E-mail | polsci@sogang.ac.kr

ISSN 1976-9466